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인류학석사 학위논문

초국적 정치 난민으로 살아가기:

한국의 버마 민주화 운동가의 망명과 귀환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류 수 경

초국적 정치 난민으로 살아가기:

한국의 버마 민주화 운동가의 망명과 귀환

지도교수 채 수 홍

이 논문을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류 수 경

류수경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6월

위 원 장 _____ 오 명 석 (인)

부위원장 _____ 권 숙 인 (인)

위 원 _____ 채 수 홍 (인)

국문초록

이 논문은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버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정치적 난민의 여정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한국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수행해온 NLD-LA 한국 지부와 버마행동 한국에 참여한 난민, 그리고 다시 미얀마로 귀환한 귀환 난민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인류학적 현장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은 1990년대에 한국에 이주하여 20여 년을 체류하면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미얀마의 정치적 변화와 함께 본국으로의 귀환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에 이 연구는 첫째, 미얀마 출신의 이주민이 한국에서 난민이 되는 과정을 살피고, 둘째, 한국에서 20여 년을 체류하며 버마 민주화 운동가로서, 동시에 망명이 장기화된 이주민으로 살아온 자리를 탐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국의 변화에 따라 귀환하거나 귀환하지 않는 정치적 난민의 결정을 살피며 미얀마에서 혹은 한국에서 '집'을 만들어 살아가는 실천을 조명한다.

우선 이 연구는 한국에 체류하는 미얀마 이주민들이 버마 민주화 운동을 수행하며 난민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1990년대에 한국에 이주하여 이주노동자로 지냈으나, 당시 미얀마의 군부 정권을 우려하며 미얀마 이주민의 모임을 통해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렇게 구성된 NLD-LA 한국 지부는 체류 지위의 문제로 강제 송환의 위기를 겪고, 이후 민주화 운동의 지속과 체류 지위의 확보를 위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다.

그러나 이들 이주민은 난민 인정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난민성을 해석하는 문제로 진통을 겪었다. 정치적 의견과 그로 인한 박해 가능성을 근거로 난민 지위를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이주민은 난민에 대해 "아프리카의 굶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수동적이고 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난민이기보다는 민주화 운동가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난민임을 부정할 수 없다면, 그중에서 위계가 높다고 간주하는 정치적 난민이고자 했다. 버마 민주화 운동을 수행하던 진영 내에서도 NLD-LA 한국 지부와 버마행동 한국은 서로 운동의 지향 차이로 인해 경계와 갈등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기반으로 두 단체는 서로 구별하고 경계하며 자신의 난민성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구성해왔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시민사회는 정치적 난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이들을 지지해왔다.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은 초국적 정치 실천으로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해왔다. 당시에는 1990년대 이래 더욱 열악해진 미얀마 국내의 상황을 피해 망명 활동가를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민주화 운동이 수행되고 있었다. 때문에 NLD-LA 한국 지부와 버마행동 한국이 수행한 버마 민주화 운동은 미얀마와 한국 사회를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졌던 초국적 정치의 연대이자 실천이었다. 다만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목표하였던바, 즉 한국 정부의 대(對) 미얀마 경제 제재 및 무역 중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대중에게 미얀마와 버마 민주화 운동을 알리며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살필 수 있다.

이 논문은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된 망명 생활을 하게 된 데 함께 주목하였다. 연구자는 이들의 위치를 미얀마와 한국 “사이에 낀” 경계적 상태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경계적 상태가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는 데 주목하였다. 특히 한국의 사례에서는 2010년대부터 시작된 미얀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에 공식적으로 방문할 수 없는 정책적 환경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난민이 가진 경계적 상태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난민은 경계적 상태를 타개하고 삶을 세워가기 위한 실천으로서 노동에 종사하였으며 또한 교육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를 통해 정치적 난민은 자신이 성장과 발전의 서사에 있다고 평가하며, 망명 생활을 재통합을 위한 전이의 단계로 평가하였다. 또한 연장되고 강화되는 경계적 상태는 버마 민주화 운동에 연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가시화된 귀환의 가능성과 함께 난민의 선택과 실천을 살펴보았다. 2010년대에 들어 미얀마에 일련의 정치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정치적 난민에게 본국 귀환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민주화가 된 모국에 돌아간다는 것이 그들의 기치였으나, 장기화된 이주 생활로 인해 본국으로의 귀환과 정주 등 다양한 사례가 관찰됐다.

이 연구에서는 귀환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한국에서의 버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 등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과 함께 가족 재결합의 요인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귀환을 감행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20여 년 만에 찾은 모국에서 귀환 난민은 다시 '집'을 세워가는 과정을 실천한다. 또한 그곳에서 한국을 뒤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하는 초국적 실천으로 귀환 이후의 생활을 구축한다.

반면 귀환을 보류하거나 한국에 머무르기로 결정한 사례와 귀환과 망명 사이의 모호한 이주도 함께 볼 수 있었다. 귀환을 보류하는 요인으로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명 정치의 사명이 있다고 평가하는 NLD-LA 한국 지부의 판단이 있다. 그리고 귀환 방식에 따른 갈등과 오랜 정주의 영향력, 마지막으로 질병과 사망으로 귀환할 수 없게 된 사례를 들 수 있다. 귀환과 망명 사이의 실천에서는 초이주자와 유연한 시민권을 실천할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었다.

미얀마의 정치적 난민은 한국 사회가 경험한 1세대 난민으로서, 이들이 한국에서 20여 년간 살아온 시간은 개인사임과 동시에 한국 사회가 난민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정책과 태도를 수정해온 시간이다. 그 점에서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은 한국 사회의 저변을 확장하는 한계 개념으로서 역할 해왔다.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더불어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 연구가 주목한 이주, 난민의 삶, 그리고 탈영토화된 초국적 정치의 실천은 역설적으로 국가와 국경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동시에 연구자는 더불어 운동하고 함께 살아온 자리, 그 시간으로 넓어진 서로의 외연,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되는 관계를 탐구하고자 했다. 버마, 미얀마, 혹은 한국, 혹은 무국적으로 가르는 것을 넘어서 더불어 연결된 삶의 자리가 결국 우리의 여정이기 때문이다.

주요어 : 미얀마, 난민, 버마 민주화 운동, 초국적 정치, 망명, 귀환
학 번 : 2015-20202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2.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 5
1) 난민에 대한 이해 ····· 5
2) 초국적 정치의 실천 ····· 7
3) 난민의 정주와 귀환 ····· 9
4) 한국의 미얀마 난민 ····· 11
3. 연구 대상 및 방법 ····· 14
1) 연구 대상 ····· 14
2) 연구 방법 ····· 17

Ⅱ. 한국에서 난민 되기 ····· 20
1. 사각지대의 선택 ····· 20
2. 난민성의 자각 ····· 26
3. 난민성의 경합 ····· 33
1) “우리는 그냥 난민 아니잖아요” ····· 35
2) 디아스포라 정치와 이주민 정치 ····· 38
4. 한국 시민사회의 지지 ····· 46

Ⅲ. 한국에서 정치적 난민으로 살기 ····· 53
1. 버마 민주화를 위한 시위 ····· 54
2. 버마 민주화를 위한 로비 활동 ····· 59
3. 송금과 사회적·정치적 송출 ····· 62
4. 버마 민주화 운동과 초국적 정치 ····· 68

Ⅳ. 한국에서 장기화된 망명자로 살기 ····· 76
1. 두 국가 “사이에 낀” 난민 ····· 78
1) 경계적 상태의 지속 ····· 78
2) 미얀마의 변화와 경계성의 연장 ····· 85
2. 삶의 지속을 위한 노동 ····· 88
3. 공부와 삶의 활로 찾기 ····· 93

Ⅴ. 귀환의 선택지 앞에서 ····· 98
1. 귀환자의 선택 ····· 100
1) 귀환의 다양한 동기 ····· 100
2) 귀환의 선택과 전략 ····· 110
3) 귀환자의 초국적 실천 ····· 114
2. 보류된 귀환, 연장된 망명 ····· 118
1) 귀환 보류의 이유 ····· 118
2) 남은 자의 새로운 역할 ····· 124
3) 귀환과 망명 사이에서 ····· 128

Ⅵ. 요약 및 결론 ····· 134

참고문헌 ····· 140
Abstract ····· 152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내산장학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표 목 차

〈표 1〉 심층면담 참여자 1 ····· 16
〈표 2〉 심층면담 참여자 2 ····· 17
〈표 3〉 NLD-LA 한국 지부 회원의 난민 인정 주요 일지 ··· 31

그 림 목 차

〈그림 1〉 제1차 프리 버마 캠페인 ····· 55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015년 11월 8일, 미얀마[1]는 환희로 가득 찼다. 1990년 이후 25년 만에 제대로 총선을 치렀을 뿐 아니라, 그 선거의 결과로 아웅산수지(Aung San Suu Kyi) 현 국가 고문이 속한 민족민주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이하 NLD)이 압승하여 56년 만에 민간정부가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NLD는 상하원의 전체 664석 중 389석을 가져감으로써 과반수를 넘긴 59%를 차지하였다. 헌법에 따라 전체 의석 중 25%는 고정적으로 군부에 할당되나, 그 수를 제외하면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948년 이래, 군부는 1962년부터 미얀마를 장악해왔다. 2011년에는 테인세인(Thein Sein) 대통령이 이끄는 민간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여전히 군부가 지휘하는 명목상의 민간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5년의 총선 승리로 오랫동안 군부 정권의 적이었던 NLD는 집권여당이 되고, 2016년 4월 아웅산수지 국가 고문을 필두로, 틴쩌(Htin Kyaw) 대통령을 앞세운 문민정부를 구성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신정부는 먼저 군부 정권 아래 투옥되어 있던 학생 활동가와 정치범을 석

1) 미얀마의 국호를 놓고, 미얀마와 버마라는 두 가지 표현이 쓰여왔다. 실상 두 표현이 버마족을 이른다는 점에서 구어적 표현이 버마이고, 문어적 표현이 미얀마일 뿐,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공식 국호였던 버마 연방(Union of Burma)을 군부 정권이 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1989년 표현법 개정을 통해 미얀마(Union of Myanmar)로 바꾸었다. 때문에 군부에 저항하는 표현으로 버마라고 부르는 시도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때 미얀마 혹은 버마라는 이름의 선택은 일종의 정치적 표명이 된다(Dittmer 2011: 1-2). 정권 교체 이후 아웅산수지 국가 고문은 두 이름을 모두 통용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South China Morning Post 2016년 4월 23일자). 본 논문에서는 공식 국호로서 '미얀마'를 사용한다. 다만, 민주화 운동을 해온 난민을 이를 때, 그리고 그들의 실천에서는 부분적으로 '버마'를 사용할 것이다. '미얀마 민주화'가 아니라 '버마 민주화'가 몇십 년간 그들이 외쳐온 기치이며, 이를 존중하기 위함이다.

방하면서 임기를 시작하였으며(New York Times 2016년 4월 7일, 8일자), 군부 정권의 위협 아래 해외로 망명한 정치 활동가들에게 다시 돌아와 함께 국가를 재건하자는 성명을 내기도 하였다(Radio Free Asia 2016년 5월 26일자). 그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에서 미얀마에 부과하였던 경제 제재를 거두어들이면서,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미얀마 안팎으로 퍼져나갔다.

미얀마는 여전히 대부분의 한국 사람에게 낯선 이름이지만 미얀마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지금은 폐지된 한국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2003년에는 미등록노동자 강제추방 저지 운동을 주도했던 것도 미얀마 이주민이다(부천타임즈 2015년 6월 29일자). 더욱이 그중 일부는 2000년대에 민족민주동맹-자유지역(NLD-LA) 한국 지부[2]를 중심으로 버마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정치적 난민 인정을 받으면서, 한국 사회의 1세대 난민 그룹을 구성하였다.[3] 한국 정부의 낮은 난민 인정률에도 불구하고, 1994년 이래 한국 정부가 인정한 난민 중 가장 많은 수가 미얀마 출신이기도 하다.[4] 미얀마 이주민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체류하면서, 부천과 부평을 중심으로 NLD-LA 한국 지부, 미얀마공동체, 버마행동 한국 등 여러 조직을 만들고 한국어 교육, 노동 중재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1998년에 미얀마 이주민이 성금을 모아 설치한 부천 석왕사의 미얀마식 불상과 이 불상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시작돼 올해로 19년째를 맞은 '틸러가무니' 축제[5]는 미얀마인의 불심과 더

---

2) 민족민주동맹-자유지역(NLD-LA: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Liberated Area, 이하 NLD-LA)은 미얀마 국내의 박해를 피해 태국을 중심으로 호주, 일본, 영국, 미국 등에 세워진 자유지역(Liberated Areas) 지부이다.

3) 미얀마 정치적 난민들이 NLD-LA 한국 지부를 만들고, 2000년에 집단적으로 난민 신청을 할 때까지 한국 정부는 난민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없었다. 한국 정부가 인정한 최초의 사례는 2001년의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이다.

4)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2.9%이고 가족결합, 재정착, 행정소송 승소를 제외하면 1.4%이다(2016년 12월 기준, 난민인권센터 자료 참고). 그중에서 미얀마 출신의 난민인정자는 1994년 이래 226명(2016년 12월 기준,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결과)이고, 이는 56명의 재정착 난민을 포함한 수치이다. 1994년 이래 전체 난민인정자의 수가 672명임을 주지할 때에 미얀마 출신 난민의 비율은 33%에 이른다. 미얀마 출신의 난민 중 일부는 미얀마 및 한국에서의 버마 민주화 운동으로 위협을 느껴 망명하게 된 이들이며, 최근에는 미얀마의 변화와 함께 더 이상의 증가는 없는 상황이다.

불어 한국 사회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착륙에도 불구하고, 2013년의 한 사례는 한국의 미얀마 이주민 사회에 또 다른 변동이 시작됨을 예시하였다. 1988년 양곤에서 소위 8888 항쟁[6]에 참여하였다가, 1994년 군부의 압박을 피해 한국에 망명하여 난민 인정을 받은 마웅저(Maung Zaw) 씨가 난민 지위 반납을 선언한 후 미얀마로 귀환한 것이다(한겨레 2013년 11월 19일자). 2011년의 민간정부 출범 이후 누그러진 정치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결정은 미얀마 이주민 사회가 '난민의 귀환'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음을 알리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4월의 신정부 구성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미얀마인 정치 난민의 귀환이 더욱 가시적인 아젠다로 등장하게 되었다.

오랜 군부 통치 기간 동안 나라를 떠나 있던 난민의 귀환은 한국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미얀마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다. 2016년 4월 신정부가 출범한 이래, 신정부의 실질적인 수반인 아웅산수지 국가 고문은 6월 태국을 방문하여 태국의 9개 난민 캠프에 퍼져있는 10만 명 미얀마 난민의 송환을 공언했다. 이후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지원 아래, 2016년 10월 귀국 의사를 보인 96명의 미얀마 난민이 처음으로 태국에서 본국으로 송환되었다(UNHCR 2016년 10월 25일 자료). 태국의 난민 캠프에서 난민의 귀환은 당면한 현실이자,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이다(The Irrawaddy 2017년 5월 15일자).

이처럼 여러 연유로 본국을 떠난 난민의 행로는 질문을 낳는다. 난민의 귀환은 가능한 것인가?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

---

5) 틸러가무니(Ti Loka Muni)는 1998년에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부천의 석왕사에 기증한 미얀마식 불상의 이름이다. 미얀마공동체에서는 이 불상을 석왕사에 모신 것을 기념하여 매년 추석 연휴 즈음 틸러가무니 축제를 열고 있다.

6) 8888항쟁은 1988년 8월 8일에 양곤의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군부 통치에 대항하였던 전국적 규모의 민주화 항쟁이다. 군부 정권은 수천의 시민을 사살하여 시위를 진압하였다. 이 항쟁으로 미얀마의 국부 아웅산 장군의 딸인 아웅산수지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전면으로 등장하였고, 이때 NLD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다.

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1951년 난민협약)이다. 난민이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하여도, 이는 이주국의 국적 취득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난민의 지위에는 기본적으로 귀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난민은 인종, 종교 등 국적국의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로 인한 공포로 피신하게 되므로, 단시간 내에 난민 발생 상황이 해소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귀환의 현실적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미얀마의 군부 정권 아래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정치적 난민의 경우에도, 평균 20여 년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미얀마의 최근 정치적 변동에 따라, 이들 정치적 난민에게 귀환의 가능성이 예기치 않게 열리게 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버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정치적 난민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귀환이 가능해진 최근의 변화를 참조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미얀마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이주하여 어떻게 1세대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었나? 둘째, 이들은 20여 년을 한국에 체류하면서 버마 민주화 운동과 이주노동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지속해 왔나? 마지막으로, 최근 본국의 변화에 대해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귀환하거나 귀환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는 배경에는 어떤 요인이 있는가? 그리고 귀환한다면, 돌아간 모국에서 어떤 지평을 맞게 되는가?

연구자는 위의 질문을 토대로 한국과 미얀마에서 민족지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수행한 정치적 난민의 사례가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들이 난민 연구에서 가지는 위치성과 함의에 대해서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1) 난민에 대한 이해

난민의 발생은 이주의 역사와 맞물린다. 이주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왔고, 난민은 거처를 불가피하게 떠난 존재로서 보편적으로 존재해왔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난민의 존재가 사회적이고 법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이다. 초기의 난민은 대부분 '공산주의로부터 탈출하여' 서유럽 국가에 정착하게 된 동유럽인이었고, 이때 난민 문제는 위기와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일시적' 현상으로 이해되었다(Harrell-Bond & Voutira 1992; Malkki 1995a: 508-509). 그러나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어, 난민은 유럽을 넘어서 전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며, 더 이상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구적인 국제복지(permanent international welfare)의 문제로 재규정된다(Harrell-Bond & Voutira 1992: 7). 이른바 전 지구적인 난민 장기화 시대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아이시스(ISIS)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양차 대전 이후 최대의 난민이 발생하고 이주하는 최근의 사태는 이점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난민의 변화와 더불어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도 함께 변화해왔다. 초기에 난민은 군사적이고 행정적인 문제로 규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이 발전하면서, 난민은 국제 사회의 문제로, 인도주의의 문제로 재규정되었다(Malkki 1995a: 499-500). 1951년 난민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의 등장도 이와 흐름을 같이한다. 그러나 난민 장기화 시대에 접어들어 인도주의적 접근에 대한 비판이 등장한다. 인도주의적 접근은 연장된 망명 상태에 있는 난민을 피해자화함으로써 난민의 문제를 비정치적인 자선의 차원에 한정시키며, 이들을 인종화된 공동체이자 "고갈되고, 폐허가 된, 희망 없는" 집단으로 재서술하는 "피해-중심 연구(damage-centered)"라는 것이다(Tuck 2009: 413).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최근에는 난민을 전쟁과 그 여파를 딛고 자신을 위한 정치를 수행하는 "의도화된 존재(intentionalized being)"로 조명한다(Espiritu 2014: 12-14). 오늘날 난민의 삶이 식민지화,

전쟁, 전지구화의 사회 변화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난민을 행위자로서 해석하고자 시도한다.

난민을 바라보는 인류학의 시각 역시 난민 연구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인류학에서는 난민을 본질화된 라벨로 고정하는 시도(essentialized refugee)(Keller 1975; Stein 1981, Malkki 1995a에서 재인용)에 대해 비판을 제기해왔다(Zetter 1991, 2007; Malkki 1995a). '난민'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분석적 유용성은 있으나, 난민이 발생하는 조건은 상당히 다양하므로 이를 특정한 종류나 유형의 사람, 종족, 혹은 상황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Malkki 1995a: 496). 난민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개인의 삶,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상황에 대하여 법적이고 기술(記述)적인 척도를 제공하지만, 난민의 경험을 "단일하고 본질화된, 초역사적인" 대상으로 고정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Malkki 1995a: 511).

난민이 균질한 집단으로 이해되는 정황에는 난민의 제도적이고 관료제적인 성격이 있다(Zetter 1991, 2007). 난민이라는 라벨을 붙이는 과정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간편한 이미지로 규정하고 정형화하는 작업을 수반하기 때문이다(Wood 1985: 1, Zetter 1991에서 재인용). 이 과정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단정적인 처방과 함께 정형화된 정체성으로 교체되고, 박해의 위험과 망명이 담긴 개인의 이야기(story)는 사건(case)로 대체된다(ibid.: 44). 더욱이 최근에는 전 지구적 혼합 이주의 흐름과 강제 이주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난민이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 일시 보호 대상자(한국의 경우 '인도적 체류자') 등 다양한 라벨로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Zetter 2007). 이 과정에서 난민이라는 라벨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이기보다 비싸고 유용한 지위이자 상품으로 이해되며(ibid.: 188), 이를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 역동이 발생한다. 난민을 본질화되고 초역사적인 대상으로 고정하는 시도를 지양하면서도, 난민이라는 라벨을 붙이게 되는 과정의 역학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난민에 대한 이해의 변화와 인류학 연구의 지적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미얀마 출신 정치적 난민을 본질화된 라벨 혹은 대상화된 피해자로 보기보다 오랜 세월 한국 사

회에서 거주하며 '정치적 난민'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정체성을 수행하며 난민이 된, 의도화된 존재로서 간주한다. 다만 난민의 제도적이고 관료제적인 성격에 의해, 이들이 난민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역학과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하며 그 과정에 집중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수행한 정치적 난민의 정치와 이들의 정치가 가지는 고유성, 또한 이 사례가 가지는 이론적 함의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초국적 정치의 실천

망명길 위에서 난민의 삶은 출신국과 이주국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초국적 실천의 가능성을 품는다. 초국적 이주(transnational migration)는 기존의 국제 이주와 국가의 경계를 넘는 실천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행위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mith & Guarnizo 1998: 219). 특별히 초국적 이주는 전 지구화와 인간의 이동을 배경으로, 근대에 형성된 국민 국가(nation-state)의 핵심인 주권, 국민, 영토의 일치된 범위에 이의를 제기한다(Glick Schiller, Basch & Blanc 1995; Smith et al. 1998). 이주가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이나,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상호 연결의 실천으로서 초국적 이주가 최근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Portes, Guarnizo & Landolt 1999: 224-227), 고도화된 자본의 전 지구적 구조조정, 이주자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그리고 국가의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국가 형성의 기획 등이 오늘날의 초국적 이주를 견인하고 강화한다(Glick Schiller et al. 1995: 50). 이처럼 국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초국적 이주를 수행하는 초이주자(transmigrant)의 실천과 네트워크는 "초국적 사회 공간(transnational social space)"(Faist 2000: 192)을 형성하고, 이들의 탈영토화된 초국적 실천은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을 포괄하여 나타난다.

초국적 정치의 실천에서 장거리 민족주의(long-distance nationalism)는 중요한 동인이자 결과이다. 앤더슨(Anderson 1998)의 표현을 빌려, 글릭 쉴

러와 푸론(Glick Schiller & Fouron 2001: 4)은 장거리 민족주의를 고국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정치적 공동체에 대해 자격을 요청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장거리 민족주의는 배타적으로 형성된 기존 국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설 뿐 아니라 국가와 성원권을 재구성하는 기획이다. 초이주자는 자신을 떠나온 모국의 성원으로 구성함으로써, 물리적 거리와 장기 이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출신국에 참여한다. 이로써 장거리 민족주의는 영토(state)의 경계를 넘어서며, 그뿐 아니라 이주자와 그들의 자손, 그리고 고국에 남아있는 이들을 함께 "초-국경 시민(transborder citizenry)"으로 한데 묶어낸다는 점에서 민족(nation)의 경계에 문제를 제기한다(Glick Schiller et al. 2001: 20).

글릭 쉴러와 푸론은 이를 아이티공화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독재정권 당시 아이티 출신의 초이주자는 출신국 바깥에 있으면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독재정권과의 투쟁에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수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Glick Schiller et al. 1995: 57). 그리고 독재정권 이후 수립된 아리스티드(Aristide) 정권은 이처럼 해외에 있으면서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아이티 출신 디아스포라, 즉 아이티 국적을 가진 이주자와 그들의 자손을 아이티 국내의 9개 관할 구역에 이어 10번째 관할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아이티공화국은 국경 밖을 포함하는 국경 없는 국가, 탈영토화된 국민 국가가 되는 것이다(ibid.: 58). 이처럼 장거리 민족주의자의 실천은 탈영토화된 초국적 정치라는 점에서 기존의 국경을 넘어서며, 이주자의 자손을 포함하는 디아스포라를 포섭한다는 점에서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다.

장거리 민족주의의 실천은 영토와 민족의 개념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기존의 국가 주권을 재편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Glick Schiller et al. 2001: 26-27). 아이티의 사례처럼 국유화된 초국가주의는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지만, 결코 국가를 넘어 섰다고 볼 수는 없다. 여전히 이중의 지평, 즉 기존의 현실과 영토 중심의 정치에 기반을 둔 행위이기 때문이다(Smith et al. 1998). 이주자의 초국적 정치 실천이 견고했던 국민 국가 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국가의 개념을 초월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이때의 정치 실천

은 이주국 및 출신국의 정치적 상황과 환경, 이주국의 정책과 제도, 이주민의 체류 지위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 역시 주지할 필요가 있다(Østergaard-Nielsen 2001, 2003; Wise 2004; Banki 2006b; Tabar 2014).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이 한국에서 수행한 버마 민주화 운동 역시 초국적 정치 실천의 참여이자 장거리 민족주의의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미얀마를 떠나왔지만, 한국에서의 버마 민주화 운동을 통해 한국과 미얀마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었으며 버마 민주화를 부르짖는 해외 민주화 운동의 네트워크에 동참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장거리 민족주의의 실천으로서 초국적 정치를 수행하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활동의 지향과 대상에 따라 단체와 개인의 실천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하고자 한다. 운동의 대상과 지향에 따라, 초국적 정치 실천의 무게 중심은 이주국으로 향하거나 출신국에 보다 가깝게 설정되기 때문이다.

3) 난민의 정주와 귀환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실천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된 난민의 삶은 쉽사리 종료되지 않는다. 난민의 발생은 대개 출신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구조적 박해에 기인하므로, 난민의 귀환은 이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연장된 망명의 삶에 관한 연구가 자리하는 것이 이 지점이다(Dobson 2004; Braakman & Schlenkhoff 2007; Čapo 2015; Den Boer 2015; Doná 2015). 망명은 일시적 사건으로 그치지 않으며 난민은 이주국에서 또 다른 집을 이루며 살아감에 따라, 이곳도 저곳도 아닌 경계의 삶을 영위하며 망명 문화(culture of exile)를 만들어낸다(Dobson 2004).

물론 난민의 귀환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귀환이 이루어져도 난민의 주기가 단순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종료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주기의 시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Black & Koser 1999). 난민(refugee)은 단어의 라틴어 어원('re'와 'fugis'의 합성)에서 확인

되듯 고국에서 탈출하여 어디엔가 정주하지만, 여전히 이동의 가능성을 포함한다(Dobson 2004: 16). 이는 이주노동자의 귀환 이주를 다룬 연구(Constable 1999; Smith 2006; 채수홍 2007)나 디아스포라의 귀환 이주에 대한 연구(Tsuda 2000; 권숙인 2008; Nguyen-Akbar 2014)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귀환으로 난민의 주기가 종료되지 않는 이유는 이주의 경험을 통해 난민의 사고와 생활방식이 변화하고, 그동안 출신 사회 역시 변화하며, 초국적 이주를 수행해온 경우 귀환 이후에도 과거의 이주국에 방문할 근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난민의 망명은 여타 다른 이주와 달리 불가피하게 장기화될 확률이 높으며, 특히 분쟁으로 인한 강제이주의 경우 귀환이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난민 귀환 연구의 중요성과 차별성이 확인된다.

난민의 완성되지 않는 귀환과 관련하여 '고향(home)'의 개념은 중요한 참조가 된다. 출신국으로 돌아가더라도, 고국으로의 귀환(repatriation)과 귀향(homecoming)은 동일시 될 수 없다(Hammond 1999). 그렇다면 귀환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혹은 귀환하지 않는다면, 난민이 상상하는 고향은 어디인가? 고향은 흔히 망명한 난민이 뒤에 두고 온 정적인 개념의 장소로 이해된다. 그러나 고향은 공간적 차원뿐 아니라, 시간적 차원 역시 포함한다. 난민이 출신국을 벗어난 후 망명이 길어지면서, 그의 고향 개념에는 그곳에 머물렀던 과거의 기억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향은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그리고 잃어버린 과거로서 경험되는 것이다(Den Boer 2015: 488). 그리고 이때의 고향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도리어 역동적인 과정으로 경험된다.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향은 상상되고, 창조되고, 파괴되고, 변화하고, 분실되거나 움직인다(Al-Ali & Koser 2002: 7). 상상하는 내용에 따라, 고향은 돌아갈 고국이나 그곳의 가족이 되기도 하고 오래 거주한 망명국의 가족과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한다(Čapo 2015; Doná 2015).

이처럼 다층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난민의 귀환은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결정이다(Muggeridge & Doná 2006; Klinthäll 2007; Omata 2013). 누구도 단지 향수와 그리움으로 고향을 찾아가지는 않는다. 이들은 고국의 정치적인 요인으로 난민이 되었어도, 정치적 변화로 단번에 귀환을 결정하

지 않는다(Klinthäll 2007). 귀환의 결정은 난민의 현재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상황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장기 망명으로 난민이 마주하는 귀환의 딜레마는 비호국의 상황, 귀환 시기, 다른 대안과의 연계성, 개인의 바람, 소유 자산 등 다양한 요소와 연계된다(Omata 2013: 1281).

난민의 삶은 귀환 혹은 정주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서며(ibid.: 1293-1294), 난민의 귀환은 단번에 이행하는 사건 이상의 것이다. 고향의 개념이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되고, 귀환의 결정이 '왜' 돌아갈 것인가의 문제라면, 다른 한편 귀환의 방법, 즉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실제의 귀환은 오랫동안 상상해온 귀환과 현실 사이에서 난민으로서의 삶을 재평가하고 연결 짓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Long & Oxfeld 2004; Muggeridge & Doná 2006). 난민은 고국의 현실을 살피기 위해 잠정적 귀환(provisional return)으로서 확인 방문(go-and-see visit)을 하며 귀환을 타진한다. 귀환과 정주 사이의 이러한 실천은 장기화된 망명 생활과 귀환의 신화, 그리고 집의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과 공간으로서 기능한다(Muggeridge & Doná 2006: 426). 난민의 귀환 이주에 대한 총체적이면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까닭이다.

4) 한국의 미얀마 난민

한국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한국 정부가 난민 협약에 가입한 것은 1992년이나, 난민 지위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4년이고 처음으로 난민 지위의 인정이 이루어진 것은 2001년이다. 1994년 이래 출입국관리법 하의 난민 조항으로 난민 주제를 다루다가, 이를 다루는 독립된 법으로 2011년 난민법이 제정되었고, 2013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때문에 한국의 난민 연구는 오래지 않았으며 그 영역도 대개 법적·제도적 주제에 머물러 있다. 최근 들어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박상희 2010; 오경석 2011; 김선임 2012a, 2012b; 노영순 2013; 한건수 2014 등),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 집단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얀마 난민의 경우에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한국의 미얀마 난민에 관한 연구로는 2000년대에 버마 민주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당시 이 운동을 지원하는 국제 연대 활동가에 대한 연구(손민정 2007)와 미얀마 출신 난민을 포함한 재한 난민에 관한 연구(박상희 2010)가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난민을 포함하는 미얀마 이주민의 범위로 이들을 살펴왔다(김선임 2012a, 2012b; 이태정 2011). 그러나 최근에는 미얀마 정부의 변화와 함께 미얀마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Egreteau 2012; Kim 2012; Suh 2015; 이상국 2016 등).

이 연구는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미 이들에 대해 진행된 바 있는 김현미(Kim 2012)와 서지원(Suh 2015)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김현미는 한국 사회에 거주한 지 오래된 미얀마 정치적 난민이 난민이자 동시에 이주노동자라는 양가적 상태를 보이는 데 주목한다. 특히 NLD-LA 한국지부는 초국적 정치 공동체로서, 한국의 비협조적이고 독단적인 난민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난민으로서의 정치적 신념과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살핀다. 반면 서지원은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이 수행한 장거리 정치(long-distance politics)가 미얀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원래의 목적 이외에도 한국 사회의 난민 및 이주민 인권을 신장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고 분석한다. 비록 한국 정부의 대(對) 미얀마 정책을 바꾸는 데에는 실패하였으나,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정치(immigrant politics)의 가능성을 새로이 드러내 보였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이라는 동일한 연구 대상을 둔다는 점에서 김현미, 서지원의 연구와 궤를 같이한다. 연구자는 두 연구를 참조하면서 몇 가지 점에서 후속 연구로서 위치를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두 연구가 주로 이들의 한국 활동에 집중하며 그 연구의 시점이 2014년까지 한정되는 반면, 이 연구는 1990년대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 2017년에 이르기까지 미얀마 출신 정치적 난민의 이주 전반에 주목한다. 또한 한국에서의 버마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난민이 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의 역동을 살핀다. 마지막으로 앞선 연구가 한국에서의 활동

에 집중하였다면, 이 연구는 최근 나타나는 미얀마로의 귀환 이주와 함께 정주와 귀환의 고민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간적으로 한국과 미얀마를 아우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는 난민에 대한 이해와 초국적 정치의 실천, 난민의 정주와 귀환에 관한 이론과 연구를 참조하며, 한국의 미얀마 출신 정치 난민을 다룬 선행연구의 흐름을 잇고자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연구는 각각의 주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미얀마 출신 정치 난민의 사례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미얀마 출신 정치적 난민의 사례를 제시할 뿐 아니라, 난민과 난민성에 대한 평가와 이해를 적극적으로 재고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난민을 자신의 정치를 수행하는 의도화된 존재로 보는 이론적 접근을 참조하며, 미얀마의 정치적 난민의 위치성을 재검토할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의 체류 지위로서의 난민을 넘어서, 난민이라는 행정적 라벨을 둘러싸고 버마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 나타난 여러 역학을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그 초점을 달리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국경을 넘은 난민의 정치 활동을 초국적 정치의 실천으로서 살피고자 한다. 서지원(Suh 2015)의 연구가 제시한바,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의 초국적 실천이 이주민 정치를 한국에 등장시키고 그 외연을 확장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련의 실천을 통해 구성된 “초국적 사회 공간”(Faist 2000: 192)은 평평하고 균질한 공간이 아니며, 초국적 정치의 행위자인 정치적 난민들의 실천 역시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장거리 민족주의의 실천이 정치적 실천의 지향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다른 접근과 양상을 보였는지를 심층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귀환의 딜레마와 다양한 실천 양상에 주목한다. 특히 귀환이 가능한 선택지로서 대두된 최근 미얀마의 변화에서, 이주자가 귀환과 정주, 혹은 이외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기존의 연구와 이론에 어떤 점에서 접목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친연성의 확인을 넘어, 난민의 정주와 귀환이라는 주제 속에서 한국의 미얀마 출신 정치적 난민의 사례가 가지는 특수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한국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으로 난민이 된 미얀마 이주민과 이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정치 조직, 그리고 한국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미얀마로 귀환한 귀환 난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난민이 1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UNHCR 2016: 64), 한국에 이주하여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미얀마 난민은 1994년 이래 226명이다(2017년 4월 기준, 법무부 정보공개 청구 회신). 여기에는 버마 민주화 운동으로 난민이 된 정치 난민 이외에도 종족 갈등 및 종교 갈등으로 난민이 된 사례(친족(Chin), 카렌족(Karen) 등) 등이 포함된다. 이 연구는 이 중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정치적 난민에 집중하고자 한다.[7)]

이 연구는 정치적 난민이 구성하는 정치 조직인 'NLD-LA 한국 지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2015년 11월의 총선을 통해 집권여당이 된 NLD는 오랫동안 미얀마의 제1야당이었으며, 군부 정권에게는 반 정부세력이자 탄압의 대상이었다. 1988년에 아웅산수지의 주도로 조직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 국내의 박해를 피해 해외 망명길이 이어지면서 NLD는 태국과 호주, 일본, 영국, 미국 등에 13개의 자유지역 지부(NLD-LA: Liberated Area, 이하 NLD-LA)를 설립하였다. 그중 NLD-LA 한국 지부는 미얀마 이주자를 중심으로 1997년에 지하모임으로 시작되어, 1999년에 태국 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지부 승인을 받았다. 한국 지부를 구성하는 난민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운동가로서 미얀마의 군부 정권과 그들의 인권 탄압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

7) 버마 민주화 운동으로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난민의 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미얀마 출신의 난민인정자는 226명이며, 사유별로 분류하면 정치적 의견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는 89명이다. 그러나 정치적 의견에는 민주화 운동 이외의 사례도 존재하며, 가족결합은 별도의 사유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 사례의 구체적인 숫자는 알기 어렵다(2017년 4월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회신).

이 연구는 NLD-LA 한국 지부를 중심으로 하나,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이 만든 '버마행동 한국'이라는 또 다른 조직을 함께 참조하였다. 버마행동 한국 역시 미얀마의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생적 단체이다. 이들은 NLD-LA 한국지부 및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프리 버마 캠페인(Free Burma Campaign)을 진행하며 한국 사회에 버마 민주화의 문제를 알렸으며, 이주민 인권 운동에 집중해왔다. 다만 1997년 이래 여전히 조직이 유지되고 있는 NLD-LA 한국지부와 달리 버마행동 한국의 경우 조직이 와해되었으므로 주로 개인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NLD-LA 한국 지부와 버마행동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들을 지지해온 한국인 시민활동가, 난민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다가 미얀마로 다시 귀환한 정치적 난민을 중요한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귀환 난민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2016년 9월, 2017년 2월에 미얀마를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미얀마에서는 한국에서 귀환한 정치적 난민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등 타국에서 정치활동을 전개해온 미얀마 출신 귀환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다양한 이주국의 상황을 살핌으로써 이주국에 따라 귀환의 과정과 활동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망명하지 않은 미얀마 국내의 정치 활동가, 시민사회 활동가를 만나 망명과 망명자에 대한 국내의 시선 역시 살펴보았다.

한국으로 이주하거나 정주한 이력이 있는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은 대부분 남성이다. 여성이 일부 있으나, 이미 정치적 의견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남성과 가족 재결합을 통하여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에 국한된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현재 안정적인 체류 자격(F-2)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3년마다 체류 지위를 갱신해야 하는 행정 절차를 감수해야 하지만(Ⅳ장 참조),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으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구자는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심층 면담을 진행한 바 있는

미얀마인 연구참여자의 목록은 〈표 1〉과 〈표 2〉에서 제시한다. 편의 상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이주한 이력이 있는 미얀마 이주민은 〈표 1〉에, 미얀마 국내와 한국 외의 해외에서 활동 중인 미얀마 활동가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이름은 모두 가명처리 하였다.

	이름(가명)	거주지	나이(년도)	정치조직 소속	직업	한국 이주시기	귀환 여부 (귀환 시기)
1	나잉	미얀마	44세 (74년)	NLD (탈퇴)	한국어 강사	1996년	O (2007)
2	뚜라우	미얀마	50세 (68년)	NLD (탈퇴)	NGO 활동가	1994년	O (2013)
3	마웅텟	미얀마	40세 (78년)	NLD (탈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코디네이터	1994년	O (2008)
4	아웅또	미얀마	41세 (77년)	버마행동 한국	개인 사업	1995년	O (2016)
5	아웅민쩌	인천	48세 (70년)	NLD	공장노동자	1992년	X
6	아웅툰	미국	52세 (66년)	NLD (탈퇴)	공장노동자	2003년	X (미국이주)
7	카웅묘	인천	51세 (67년)	NLD	공장노동자	1994년	X
8	진민	인천	49세 (69년)	NLD (탈퇴)	행정사 사무소	1997년	X
9	쩌르윈	용인	44세 (74년)	NLD (탈퇴)	사찰 근무	1994년	X
10	세인툰	미얀마	45세 (73년)	NLD (탈퇴)	개인 사업	1994년	O (2015)
11	카웅진	미얀마/ 한국	51세 (67년)	버마행동 한국	프리랜서	1994년	△
12	나잉묘	미얀마	53세 (65년)	미가입	한국어강사	2005년	O (2012)
13	묘세인	미얀마	52세 (66년)	미가입	개인 사업	1994년	O (2016)
14	민예	미얀마	?	미가입	개인 사업	1994년	O (1997)

<표 1> 심층면담 참여자 1: 한국 체류 이력이 있는 미얀마 이주민

	이름(가명)	구분	거주지	직업 (소속)	정치범 수감/ 이주 이력	귀환시기
1	텟린	현지 활동가	양곤	NGO 활동가 (88 Generation Peace & Open Society)	수감 이력	-
2	예툰	현지 활동가	양곤	NGO 활동가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Burma))	수감 이력,/ 태국 이주	O (2013)
3	묘뚜라	현지 활동가	양곤	정치 활동가	수감 이력	-
4	텟나잉	귀환 난민	버고	NGO 활동가 (Knowledge Zone Education Center)	수감 이력/ 태국 이주	O (2012)
5	뚜타세인	귀환 난민	양곤	NGO 활동가 (NEED Myanmar)	태국 이주	O (2013)
6	민묘	타국 난민	태국, 호주	정치 활동가 (NLD-LA 태국 본부)	폴란드, 호주, 태국 이주	X
7	브라운	현지 활동가	호주	인권 변호사	-	-
8	나잉코윈	귀환 난민	양곤	개인 사업	말레이시아 이주	O (2016)
9	린카잉	현지 활동가	양곤	정치 활동가 (Democratic Party for a New Society)	태국 이주	O (2013)
10	닐라메이	현지 활동가	양곤	NGO 활동가 (Triangle Women Support Group)	수감 이력	-

<표 2> 심층면담 참여자 2: 미얀마 현지 및 해외 활동 중인 미얀마 출신 활동가

2) 연구 방법

연구자는 난민의 망명과 귀환을 다루는 연구의 특성상, 다장소적 민족지(multi-sited ethnography)를 위한 현장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이 한국에 이주하고 정주하며, 혹은 다른 곳으로

재이주하는 여정을 쫓으며, 여정의 내용과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현장은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부천, 인천 등지를 중심으로 하지만, 동시에 귀환하거나 방문 중인 미얀마 현지를 포함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참여관찰 및 비공식적 면담, 심층면담, 그리고 문헌 자료 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자는 2016년 9월 부천에 있는 NLD-LA 한국 지부에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허락을 얻어 연구를 시작하였다. 허락을 얻은 후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매월 1~2회 일요일에 진행되는 내부 회의와 미얀마 현지 운동가 초청 담화 행사 등에 참여하였다. 회의와 행사 전후에 비공식적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후의 뒤풀이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부천과 인천 등지에서 진행된 카렌족 신년행사, 몽족 신년행사, 틸러가무니 축제, 띤잔 물축제[8] 등 미얀마 이주민 행사에 동석하여 참여관찰과 비공식적 면담을 진행하였다. 버마행동 한국은 앞서 밝혔듯 연구를 진행하던 당시 이미 와해된 상황이므로 모임에 참여할 수는 없었으며, 주요 구성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심층 면담은 개인의 이주사에 초점을 맞추어 반(半) 구술 생애사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참여 관찰을 진행한 NLD-LA 한국 지부에서도 연구자의 제안에 응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에서는 NLD-LA 한국 지부에서 탈퇴한 난민, 제3국으로 이주하는 난민, 버마행동 한국에서 활동한 난민을 만났으며, 이외에도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였던 한국인 시민활동가와 난민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심층 면담 대상이 되었다. 미얀마에서는 한국에서 미얀마로 귀환하였거나, 한국 이외의 이주국에서 귀환한 난민, 한국에서 귀환한 이주노동자, 그리고 이주 이력이 없는 국내 활동가를 만나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은 사례에 따라 1~2회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집이나 사무실, 카페 등의 장소에서 시간을 가졌다. NLD-LA 한국 지부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회원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면담을 1회 가진 바 있다.

---

8) 띤잔(Thingyan) 물축제는 미얀마의 새해 축제로, 건기가 끝나고 우기로 넘어가는 4월 중순에 열린다. 미얀마에서는 공휴일로 지정하여 새해를 맞이하며, 한국에서는 미얀마 이주민을 중심으로 2001년부터 매년 4월 중 일요일에 띤잔 물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문헌 자료를 통해 연구의 시야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한국 이주와 버마 민주화 활동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므로, 이주와 귀환의 여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의 참여관찰과 심층 면담 이외에도, 문헌과 언론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정치 난민의 버마 민주화 운동과 난민 지위 인정을 다룬 다양한 언론 기사와 성명서 등을 참조하였으며, 이들의 법적 지위 문제와 관련하여 판결문과 한국의 난민법 등을 참고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이주와 망명, 귀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미얀마의 역사와 정치적 상황, 최근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연구자는 미얀마의 역사, 정치를 다루는 서적과 지역학, 역사학, 정치학 관련 논문을 참고하여, 이주의 전반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2016년의 정권 교체에 관한 여러 연구가 존재하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정부의 행보는 현재 진행형이므로 미얀마 현지 언론과 해외 언론을 함께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이다. 연구자가 버마어를 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국에 체류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정치적 난민의 경우 평균 20여 년을 한국에서 보내었으며 버마 민주화 운동을 진행하며 한국 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해온 이력이 있으므로, 한국어로 연구를 진행하며 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미얀마 현지에서 만난 미얀마 활동가,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 등 해외에서 귀환한 난민의 경우에는 영어로 소통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한국에서 난민 되기

난민은 일반화시킬 수 있는 유형의 라벨이 아니다(Malkki 1995a: 496). 난민을 발생시키는 조건은 너무나 다양하고, 난민의 궤적 역시 일반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미얀마에서 온 정치적 난민 또한 법적 지위로서 난민의 범주에 속하지만, 자연스럽게 난민이 되어 균질한 집단으로 스스로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먼저 이들이 한국으로 이주해 자신을 난민으로 구성하게 된 정황을 살피고자 한다. 이 배경은 이들이 귀환이라는 새로운 딜레마에 이르는 궤적을 살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 사각지대의 선택

모든 것은 이주에서 시작되었다.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은 한국에 들어와 바로 난민이 되지 않았다.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도, 이르면 1994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진 한국 이주는 대부분 지금은 폐지된 산업연수생 제도 혹은 브로커를 통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누구도 스스로를 난민으로 규정하지도 않았고, 난민 지위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한국 사회 역시 난민에 관해 경험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난민이기 이전에 이주민이었다.

당시의 한국 이주는 미얀마의 역사적 배경에 근거한다. 미얀마는 1824년부터 1948년까지[9], 일본이 지배했던 1942~45년을 제외하고 약 120년 동안 영국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다. 1948년에 독립을 했지만, 10여 년간의 민간정부 기간을 거쳐 1962년부터는 오랫동안 네윈(Ne Win)을 필두로 한 군부(*tatmadaw*)의 지배를 받아왔다. 오랜 군부 통치 기간은 다른 한편 민주화를 향한 열망으로 민주화 운동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잘 알려진 1988년의

9) 미얀마는 당시 버마 족의 꼰바웅(Konbaung) 왕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국경을 접하던 영국령 인도와의 충돌로 인해 일어난 세 차례의 버마-영국 간 전쟁(각각 1824년, 1852년, 1885년에 발발)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8888 항쟁과 90년대 내내 학생 봉기가 있었으나,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은 여전히 암울했다. 경제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62년 네윈의 군사 정부는 '버마식 사회주의'를 내세웠지만, 부실한 경제 운용으로 인해 경제 상황은 날로 악화되었다. 한때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의 기대주로 떠올랐으나, 1987년 국제연합(UN)에 정부 스스로 최빈국 신청을 하게 될 정도였다(박은홍 2016: 196).

정치경제적으로 암울한 상황 속에, 1988년의 8888 민주 항쟁이 군부에 의해 강하게 진압되고 1990년에 NLD가 압승한 총선의 결과가 군부에게 인정되지 않자 국내외로의 이주가 잇따랐다. 군부에게 진압된 학생 운동가는 일부 정치범으로 수감되고, 일부는 전(全)버마학생운동전선(ABSDF; All Burma Students' Democratic Front)을 필두로 미얀마-태국 국경지대로 이동하여 소수민족의 무장투쟁에 합류하였으며, 일부는 새사회민주당(DPNS; Democratic Party for a New Society)을 중심으로 정당 정치를 실천하고자 했다. 또한 많은 정치 인사들은 군부의 압력을 피해 해외 망명길에 올랐다. 그러면서 1990년대 이래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은 국내에서 망명을 떠난 정치활동가들이 주도하는 국외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된다(Taylor 2009: 425). 이른바 망명 정치 시대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이주의 흐름은 주요 정치 인사에게만 관찰되었던 것은 아니다. 군부의 압력 아래 당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던 시민에게도 이주는 암울한 시대를 벗어날 수단이었다. 학생 중심의 시위를 우려한 군 당국이 대학 문을 닫았기에,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대학에 입학할 수 없었다. 악화되어 가는 경제 상황은 언제 회복될 지 상상이 어려웠다. 나라에 관한한 어두운 전망만이 가득했다. 때문에 해외이주의 초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의 가정을 중심으로, "답답한 상황"이고 "살기 힘드니" "잠시 외국 경험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주가 감행되었다. 대부분의 이주는 국경을 접하는 태국을 향했다. 미국이나 영국, 노르웨이 등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외에는 아시아였다.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그리고 한국이 가능한 선택지였다(Banki 2006a: 331).

한국에 이주한 미얀마인 중에도 버마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있

다. 한국으로의 이주가 “체포를 피해서” “국경 지역을 통해” 이루어진 학생 운동가 출신의 사례 역시 관찰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학생 운동으로 이름이 알려진 유력 인사이기보다는, 학생 운동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학생, 혹은 민주화를 옹호하며 자신의 살길을 모색하던 20세 전후의 남성이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이 가지는 주변적 요소가 있었다. 당시 이주를 계획하는 미얀마인은 미얀마와 근거리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태국의 메솟(Mae Sot)이나 치앙마이(Chiang Mai)의 국경지대로 이주하거나, 혹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를 선호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 이외에 일본이 선호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중반의 한국은 서구 국가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주 비용이 저렴했고, 1994년에 시작된 산업연수생제도로 입국의 장벽이 높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저임금 노동에 대한 해외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던 시절이었다. 게다가 개인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이 미얀마와 유사한 역사적 질곡을 거쳐 민주화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 역시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였다.

미얀마에서 산업연수생으로 혹은 브로커를 통한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들에게 한국은 새로운 세상이었다. 기대와 달리 노동의 강도는 상당했고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한국의 거주환경은 열악했으며,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재평가하게 되는 고국의 현실은 암울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 고초를 겪으며 인천과 안산, 수원, 부천 등지의 공단과 농장에서 이주노동을 하며 지냈다. 그러다가 1995년에 설립된 부천 미얀마공동체를 중심으로 점차 한국에 있는 미얀마인들을 만나게 된다. 미얀마공동체 모임을 통해 나라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집단의 목소리로 모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NLD-LA 한국 지부[10]가 지하모임으로 시작된다.

모임은 “그냥 공장 일 끝나고 모여 술 한 잔씩 하면서 버마 얘기를 하며” 이루어졌다. 미얀마의 정치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은 점차 발전하였으나, 당시 속해 있던 미얀마공동체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갈 수는 없었다. 여전히 군부 세력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해외에 있는 이주민 공동체라

10) 이하의 논의에서 ‘NLD-LA 한국 지부’는 현지의 표현을 따라 ‘NLD’라고 줄여 부른다. 다만 미얀마 국내의 NLD 정당과 구별할 때에는 전체 이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고국의 정치에 대한 논의는 후환이 두려운 것이었다. 군부에 대한 두려움은 나라 밖에서도 여전하여서, NLD 회원이 미얀마공동체와 함께 사용했던 사무실의 문에 버마 민주화 운동를 알리는 전단지를 붙이면 다른 미얀마 이주민들은 무서워서 문을 열지 못할 정도였다.

미얀마공동체와 별도의 조직이 필요함을 절감한 일부 이주노동자는 이후 얼마의 돈을 모아 구로공단에 사무실을 구하고 지하모임을 기반으로 하여 1999년 2월 NLD-LA 한국 지부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 하지만 이 모임을 주체적으로 난민으로 구성하거나 자각한 망명공동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1962년 이래 장기화된 군부 통치하의 모국을 피해 나와, 여전히 모국을 걱정하는 이주노동자의 모임이었다고 보는 편이 적합할 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미얀마의 평화와 정치 민주화에 관심을 두고 관련 뉴스를 한국에 있는 미얀마인에게 전달하고,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민주화 촉구 시위를 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NLD-LA 한국 지부의 활동은 미얀마의 역사와 상응한다. '한국 지부'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이 활동은 한국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NLD-LA는 미얀마 국내 정당인 NLD와 달리 '자유 지역'에 세워진 별도의 조직으로, 태국의 메솟을 본부로 하여 호주, 미국, 일본, 영국 등 전 세계에 13개 지부를 두었다. 한국 지부는 그중 하나로, 1999년에 본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역할하게 된 것이다.

한국에 들어온 미얀마 이주민들이 일하며 모국의 정치 상황에 관심을 쏟는 동안, 산업연수생으로 인정된 3년 비자는 곧 만료되었다. 관광 비자는 이미 만료된 지 오래였다. 이로 인해 대부분은 미등록 체류자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 2000년대 전후까지 체류 자격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았다. 3년으로 정해진 산업연수생의 체류 기간은 연장이 되지 않았기에, 당시 불법체류율은 40%를 웃돌았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09. 6). 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체류는 당시에 흔한 일이었다. 도리어 산업연수생 제도와 계약에 얽매이지 않으니, 한 귀환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상태에서 훨씬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회고할 정도였다.[11] 미등록 상태가 된 이주자들은 간헐적인 단속을 피해 삐

삐로 통신을 하며 체류를 이어갔지만, 미등록 상태가 워낙에 흔한 일이라 주중에는 노동을, 휴일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일상을 영위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미등록 체류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생활은 위기를 맞는다. 2000년대 전후로 엄격해진 미등록 노동자 단속에 적발된 NLD 핵심멤버 2명이 1999년, 2000년에 각각 미얀마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한국에서 NLD를 조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들의 신변에 커다란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다행히 이들 두 명은 미얀마로 송환되는 것은 피했다. 1999년에 단속된 아웅민쩌 씨는 한국 정부의 단속과 미얀마 대사관의 송환 요구에 위기를 맞았으나, 한국에서 태국을 경유하여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지를 발휘하여 최종 송환을 피할 수 있었다. 2000년에 단속된 조샤린 씨는 인천출입국사무소에 40일 동안 구금되었다가 풀려났다.

이 과정은 언론을 통해 한국 사회에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한겨레21은 "샤린, 한국의 인권외교를 시험하다"라는 제목의 특집으로 조샤린 씨의 강제 송환 위기를 상세하게 다루었다(한겨레21, 2000년 4월 20일, 제304호). 해당 호에서는 조샤린 씨가 비록 미등록 체류 중이었지만, 정치 활동가가 강제 송환될 시 맞게 될 위협에 대해 보도하고 난민으로의 인정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에서는 민변(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4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구금된 조샤린 씨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다(건강한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외 13개 인권단체, "한국정부의 버마인 샤린에 대한 강제송환을 반대하며", 2000년 4월 4일). 이 과정에서 그는 민주화 운동으로 20여 년 동안 프랑스에서 망명생활을 해야만 했던 한국인 홍세화 씨에 비유되어 "한국의 홍세화"로 명명되기도 하였다(오마이뉴스 2000년 4월 15일자). 성명서에서는 비록 조샤린 씨가 미등록 체류 상태였지만 그의 활동상은 정치적 난민과 다름없으므로, 그를 미얀마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난민협약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12], 더 나아가 고문방지협약 3조[13]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

11) 한국에서 이주노동을 했던 미얀마인 묘세인과의 면담(미얀마, 2017년 2월).

12)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은 난민 당사자를 강제로 출신국, 혹은 이전의 체류지로 송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난민 보호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원칙으로 여겨진다. 난민협약에서는 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체약국은 난민

이 두 건의 강제송환 사건은 이들이 더 이상 한국에서 미등록의 지위로 체류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고 이들은 미얀마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1997년부터 시작된 정치 활동으로 이미 이들의 활동 소식은 미얀마의 고향에까지 전해져 반정부 활동가로 알려진 상황이었다. 조샤린 씨와 함께 강제송환의 위기를 겪다가 끝내 송환된 미얀마인은 양곤공항에서 내내 조샤린 씨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당시 본국에서는 95년에 가택연금 조치에서 풀려난 아웅산수지의 비폭력 민주화 운동에 위협을 느낀 군부가 다시 가택연금 조치를 가하던 시기였다. 민주화는 요원한 데다, 한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돌아간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다. 단속에 걸린 2명 모두 한국의 시민 활동가들과 NLD 동지들의 지원으로 강제 송환은 모면했지만, "이렇게 매년 잡혀가면 어떡하나" 하는 이들의 고민은 당면한 현실이었다. 미등록 체류와 강제 송환의 위험은 넘어야 할 산이었다.

'난민' 지위는 이 사각지대의 어려움을 타개할 활로였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NLD와 관계를 맺고 있던 한국의 시민 활동가들은 이들에게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할 것을 권유하였다.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갈 시에는 박해의 위협이 있으니, 난민으로 자각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난민의 요건에 이미 부합한다는 것이었다. 가까운 일본 지부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하는 동지 중에서는 이미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다(Banki 2006a). 일본 지부와 태국 본부에서도 난민 지위를 신청할 것을 제안했다. 이주노동자이자 버마 민주화 운동가였던 이들에게 '난민'이라는 이슈가 등장했고, 그리하여 2000년 5월 16일, NLD의 21명이 단체로 난민 지위를 신청하면서 또 다른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난민협약 제33조 1항).

13) 고문방지조약(정식 명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의 제3조 1항은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다. 한국 정부는 고문방지조약에 1995년 가입하였다.

2. 난민성의 자각

당시 난민 지위는 미얀마 출신 운동가들이 미등록 상태를 타개하고 한국에서의 버마 민주화 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자, 잡아야 하는 지푸라기였다. 또한 본국에서의 학생운동 참여와 한국에서 지난 몇 년 간 버마 민주화 운동을 해온 활동상은 이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난민 지위 신청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면, 한국에서 체류 자격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정치 운동가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이었다. 정치적 난민이 된다면 당장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고, 돌아간다 하여도 운동 이력으로 인해 그곳에서 겪게 될 위험은 가중될 터였다. 버마 민주화라는 기치에는 동의하지만, 타국에서 민주화 운동가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때문에 난민 지위 신청을 놓고 많은 회의가 이어졌고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단체를 떠나기도 했다.

[사례 Ⅱ-1] 진민 인터뷰: 2017년 1월, 한국.

당시 NLD 멤버였던 40명인가 60명한테 한 명씩 다 물어봤어요. '난민 신청을 해야겠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족이 있거나, 나는 버마로 돌아가고 싶다. 나는 버마에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21명이었어요.

[사례 Ⅱ-2] 나잉묘 인터뷰: 2017년 2월, 미얀마.

민주화 운동 좋지만, 저는 버마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 갔었어요. 가족에게 돌아가야 하니까, 난민 신청 할 수 없었어요.

해외에서의 망명 운동이 반드시 난민 신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

시 버마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들이 모두 난민 지위를 신청했던 것도 아니다. 망명자와 난민의 개념적 범위가 분기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망명 역시 “혁명 또는 그 밖의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몸을 옮기는”(네이버 국어사전) 것을 의미하므로, 망명자와 난민의 실천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망명 정치를 실천하는 경우에 난민 지위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1951년 난민 협약 이전에는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적 규약이 부재하였고, 실질적으로는 망명 정치를 실천하여도 체류 지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난민 지위를 신청할 이유는 특별히 없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문제는 보다 관료주의적이고 또한 제도적인 차원에 있다(Zetter 1991, 2007).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과정에 대해 “꼬리표를 붙이는 과정(labelling)”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ibid.). 일례로, 버마 민주화 운동을 했던 많은 망명 활동가들이 태국 국경 지역에 체류하였으나, 그곳에서는 체류 지위가 문제 되지 않았기에 난민 지위를 얻지 않고 민주화 운동을 지속하였다.

이와 비교할 때 한국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펼쳤던 이들은 체류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한국에서 버마 민주화를 외치는 동안 고국에서는 이미 요주의 인물이 되었으므로, 귀국한다면 탄압을 피할 수 없을 터였다. 그렇다고 한국에 미등록 상태로 머무르다간 동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단속과 강제송환의 대상이 될 위험이 상당했다. 그렇다고 제3국행 역시 선뜻 감행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었다. 미등록 체류 지위와 강제송환의 가능성이라는 취약한 상황을 벗어날 대안, 즉 한국에서 체류 지위를 얻어 기반을 확보할 현실적 대안으로 난민 지위가 대두된 것이다.

한국에서만 이런 상황이 펼쳐졌던 것은 아니다. 정책적 차이는 있으나, NLD-LA 말레이시아 지부에서도 유사한 과정을 통해 난민 지위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14] 말레이시아로 이주한 미얀마인들은 대부분 노동 비자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하여, 일부는 그곳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수행하였다.

14) 귀환한 전(前) NLD-LA 말레이시아 지부 부회장 나잉코윈 씨와의 심층면담(2017년 2월 25일, 미얀마).

그러나 노동 비자와 여권이 만료되면서 체류 자격 문제에 직면했다. 말레이시아 지부의 경우에는 귀환 시의 박해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사건이 있었다. 2008년 NLD-LA 말레이시아 지부의 집행위원 4명이 미얀마로의 귀환을 감행하였는데, 군부에 체포되어 각각 징역 17년, 15년,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무기징역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말레이시아에 남아있던 구성원에게 귀환 시도는 시기상조인 무모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난민 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말레이시아에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유엔난민기구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것이었다.

다시 한국의 사례로 돌아오면, 당시의 상황에서 주목할 점은 난민 지위의 신청이 난민으로의 자각을 기반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NLD에서 난민은 "아프리카의 굶는 사람"의 표상이었고, 버마 민주화 운동을 하는 우리는 "(이런 이미지의) 난민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우세했다.

[사례 Ⅱ-3] 뚜라우 인터뷰: 2016년 9월, 미얀마.

> 우린 활동가지, 난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들이 난민이지 우리는 난민이 아니다. 그래서 난민 신청을 결정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반대하는 사람 몇 명 떠나가기도 했고요.

당시 정치적 의견으로 박해의 위협을 마주한 NLD 구성원은 난민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였다. 난민 지위를 신청하라는 주변의 조언은 체류 지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강했지만, 없는 근거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정치 실천이 난민의 실천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난민은 "아프리카의 굶는 사람", 대상화된 약자에 그침으로써, 제 돈 벌어 운동하는 활동가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라 판단하였다. 이들이 생각하는 난민은 본질화되고 고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NLD의 난민됨(refugee-ness)에 대한 이해는 이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난민이라는 단어는 "제3세계의 빈곤, 이질성, 무국적"과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이러한 이미지 아래 난민은 "무능력한 구출의 대상, 빈곤한 상태의 피난, 전쟁에 짓밟힌 혹은 부패한 국가"(Espiritu 2014:

4)와 같은 상징으로 유통되어왔다. 20세 전후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한국 사회에서 다시 운동을 재개한 미얀마 이주민이 스스로 '난민'이라는 이름표를 다는 것을 꺼려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피 끓는 운동가에게 난민은 지나치게 연약한 이름표였다. 하지만 강제 송환의 위험은 현실적이고 긴급하며 중대한 문제였다. 연이어 일어난 강제 송환 사건으로 "이러다간 1년에 1명씩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이들에게 생겼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난민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결론 아래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 안의 난민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들에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난민 이외의 방법으로 합법적 체류 지위를 얻기란 어려웠다. 난민 지위에 대한 이들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버마 민주화 운동과 이로 인한 박해 가능성은 이미 이들을 난민으로 구성하는 요건이었다. 게다가 민주화 운동가의 자긍심을 갖고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태도는, 역설적으로 타인의 시각에서 '진정한' 난민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내면에서 난민 지위는 여전히 본국 송환을 피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수단적인 차원에 머물렀다. "난민 신청은 하지만 난민은 아니다"라는 것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버마 민주화 운동가들이 초기에 갖고 있던 생각이었다.

"난민 신청은 하지만, 난민은 아니다"라는 이들의 주장은 강한 귀환 의지와 맞물린다. 실제로 당시에 이들이 응했던 인터뷰에서는 귀환의 의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아뇨. 아뇨. 우리는 버마에 갈 겁니다."(양영미 2014: 238) "버마가 민주화되면 내일이라도 바로 갈 친구들입니다."('Free Burma' 다큐멘터리 중).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아도 버마가 민주화되는 그 날이 오면 바로 돌아갈 것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스스로가 고국을 등지고 한국에 오래 체류하려는 연약한 난민이나, 한국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경제 이주민이 아님을 역설했다. 또한 귀환의 의지는 반대로 이들이 귀환할 수 없는 현재의 처지를 설득하는 도구이기도 했다. 비록 난민 지위를 통해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나, 여기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귀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버마 민주화 운동을 했던 미

얀마 이주민은 이와 같은 귀환 의지의 표명을 통해 돌아가고 싶지만 지금은 돌아갈 수 없어 “잠시 머무는 사람”임을 드러내며, 당당한 운동가로 스스로를 구성하고 귀환할 ‘그날’을 상상했다.

알-라시드(Al-Rasheed 1994)는 이를 ‘귀환의 신화(myth of return)’라고 명명한다. 과거를 이상화하고 재조명하며 출신국으로 귀환하는 미래를 상상하는 시도는 “출신국과 현재의 거주국 모두에 속하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Dahya 1973, Al-Rasheed 1994: 200에서 재인용)이자, 다를 뿐 아니라 때로는 상충하기까지 하는 출신국과 거주국의 맥락에 모두 속하고자 하는 딜레마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한국에 ‘눌러 살’ 의도는 없지만 동시에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망명의 맥락에서, 귀환의 상상은 이주국에서의 체류를 정당화하는 데 주요한 요소가 된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난민 지위를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귀환의 신화를 통해 운동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망명의 근거를 찾으며, 동시에 민주화와 귀환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다.

당시 NLD의 구성원들은 오랜 논의를 거쳐 난민 신청을 하기에 이르지만, 훨씬 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이들 앞에 있었다.[15] 2000년 5월 16일에 21명이 집단으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이래, 제3국으로 혹은 미얀마로 돌아간 5명을 제외하고 2003년에 NLD의 임원 3명이 최초로 인정되었으며 2005년 나머지 13명의 신청은 기각되었다. 13명은 곧바로 불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같은 해에 불허된 13명 중 4명의 이의신청이 인정되어 난민 인정을 받는다. 반면 나머지는 불허 결정을 재확인한다는 통보를 받아 최종 9명 중 8명은 결국 행정소송을 세 차례 거쳐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15) 한국 정부의 난민인정절차(Refugee Status Determination)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난민 신청은 입국 과정에서 하는 출입국항에서의 신청(2013년 난민법 시행 이래 적용), 그리고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서 하는 신청(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으로 나뉜다. 난민 신청자가 출입국항에서 회부여부 결정심사를 통해 회부 결정을 받거나 혹은 입국 후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난민 지위를 신청하면(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 법무부는 1차로 심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고지한다.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의 난민 인정 신청을 불인정할 경우, 불인정자는 통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불인정 사유가 받아들여지면 최초의 불인정 처분이 취소되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불인정 신청이 기각되면 최초의 불인정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의 신청 역시 기각된 경우, 난민불인정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3심제로 이루어진다(참조: www.w4refugee.org/board/bbs/board.php?bo_table=2_manual&wr_id=14&page=6).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두6526 판결). 그래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이들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때에 따라 6개월 혹은 3개월마다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 '난민 신청자'로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생활을 해야 했다. 당시에는 난민 신청자가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난민 신청자에게 별도의 생계 지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심사 중이라는 명목 아래 유기된 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 노동을 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제3국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한국에 거주한 지 10여 년이 흐르고 "미얀마가 첫 번째 나라라면, 한국은 두 번째 나라"로 매김하고 있던 터라 제3국으로 가는 것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날 짜	내 용
2000. 05. 16	NDL 회원 21명 난민신청서 접수
2003 ~ 2005	법무부, 신청자 중 2003년 3명, 2005년 4명 난민인정
2005. 03. 11	법무부, 신청인 중 9명에 대해 1차 불허통지
2005. 03. 17	불허자 9명 이의신청서 제출
2005. 04. 12	이의신청서 결정통지 - 불허결정 재확인, 출국권고
2005. 04. 19	3개월 출국기한유예 (소송제기와 함께 3개월씩 연장)
2006. 02. 03	2006.2.3. 원고 일부승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993)
2007. 02. 15	2007.2.15. 법무부의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6누6798)
2008. 09. 25	2008.9.25. 법무부의 항소 기각 (대법원 2007두6526)

<표 3> NLD 회원의 난민 인정 주요 일지
(출처: 함께하는시민행동, 2008년 9월 25일 자료)

이처럼 지난한 난민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난민 지위를 신청한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난민인가?"를 되묻는 성찰의 시간이었다. 한국 인권 단체의 조언과 교육, 그리고 9년에 이르는 지난한 심사 과정은 스스로에게 정치적 난민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묻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한국 인권 운동가들과 변호사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굶는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싶지 않았고, 수단적인 차원에서만 난민 지위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지난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일부 구성원은 정치 운동을 하는 "우리가

난민이 아닐까” 하는 성찰에 도달하게 되었다.

[사례 Ⅱ-4] 마웅저 좌담(양영미 2014)

난민 신청을 하면서 비로소 난민 문제에 대해 공부하게 된 거예요. 김대중 선생님이나 한겨레신문 홍세화 선생님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도 난민이다.”라는 거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하게 된 것은 2003년 이후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도 스스로를 난민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창피한 것, 좀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난민성에 대한 자각에 이르게 된 데에는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이 미친 영향이 있었다. 당시는 미얀마 군부 세력이 더욱 공고히 권력을 쌓아올리며, 저항이 가지는 정당성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위협 역시 커지던 시절이었다. 2003년의 디페인 학살과 2007년의 사프론 혁명, 2008년의 헌법 수정은 그 시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다.

디페인 학살은 13년간의 가택연금 끝에 석방된 아웅산수지와 NLD 당원들이 전국을 돌며 강연회를 하던 중 2003년 5월 30일 미얀마 북부의 디페인 지역에서 반NLD 세력으로 추정되는 괴한에 습격당한 사건이다. 정작 군부에서는 이 사건이 NLD 지지자들의 도발이라고 판단하여 NLD 지도부 250여 명을 체포하고 아웅산수지는 19개월 만에 다시 가택연금 되었다. 당시 이 사건이 알려지자, NLD-LA 한국 지부의 당시 구성원 16명은 모두 직장을 그만두고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삭발을 하고 연일 시위를 벌였다.

2007년에 있었던 사프론 혁명은 다시금 민주화 운동에 불을 지핀 사건이었다. 그해 8월에 군부가 예고 없이 천연가스와 휘발유, 경유의 가격을 기존의 2배에서 5배까지 인상한 조치에 반발하며 일어났다. 8888 항쟁 이후, 1996년 항쟁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의 흐름에서 사프론 혁명은 미얀마 사회에서 가장 존경 받는 그룹인 승려들이 시위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또한 2008년에는 미얀마의 헌법 수정이 있었다. 현재까지도 논란의 중심인 조항들, 이를테면 국회의 상·하원 의석의 1/4을 군부에게 할당한다는

조항, 군 최고 지휘자가 군대를 독립적으로 지휘한다는 조항, 그리고 영국인 남편을 둔 아웅산수지를 겨냥하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 국적자 배우자와 자녀를 둔 미얀마인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이때 등장했다. 13만여 명의 기록적인 사망자를 내었던 나르기스 태풍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군부는 국민투표를 감행하였고, 결국 수정안은 92%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때문에 '나르기스 헌법'이라고 불리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NLD-LA 한국 지부는 한층 강도 높은 활동을 통해 미얀마 정부를 규탄하였다. 이들은 미얀마의 크고 작은 사건에 대응하며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 변호사 그룹과 협업하여 공동성명서를 내는 한편, 캠페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군부를 규탄하였고, 이외에도 언론에 기고하는 등 활발하게 운동을 전개하였다. 돌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더욱 악화되어가는 출신국의 상황으로, 단기간으로 계획했던 망명은 장기화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미얀마의 열악한 정치적 상황은 한국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이들에게 난민이라는 이름을 재고하게 하였다.

3. 난민성의 경합

당시 한국에 이주하여 버마 민주화 운동을 하던 이들이 모두 "우리가 난민"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이 난민성을 인정하는 과정에는 구성원 간의 개인차가 존재했다. 또한 정치적 난민에 대한 인정이 난민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로 이어진 것도 아니었다. 정치적 난민이라고 하여도 접근과 조직에 따라 경계와 경합이 존재했다.

경계와 경합은 먼저 NLD 구성원이 가지고 있던 난민성에 대한 이해에 근거한다. "아프리카의 굶는 사람"이나 난민이지, 제 돈과 제 시간, 제 청춘을 들여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난민은 인정할 수 없는 꼬리표요 오명이었다. 다만 주변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이 난민 사유가 된다고 설득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체류 자격이 필요하므로 신청하게 된 것이다. 난민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때의 난민신청은 수단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제터는 난민 인정 과정을 관료주의적 꼬리표를 붙이는 과정(bureaucratic labelling)으로 설명한다(Zetter 1991, 2007).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정책의 대상이 될 사람을 편리한 이미지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난민'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게 되는 과정을 통해, 사람의 정체성은 형성되고 변화하고 또한 조작된다(Zetter 1991: 40).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은 유형화된 정체성, 나아가 계획된 정체성(programmatic identity)으로 대체된다(ibid.: 44). 때문에 난민이 '된다'는 과정은 행정적 꼬리표를 붙이는 과정이지만 단순한 행정적인 과정 이상의 것이다. 미얀마 출신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난민을 접하고 신청하며 심사받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난민성이 부과되었다. 난민성의 부과는 먼저, 그들 스스로가 난민성과 씨름하고 혹은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로는 난민 지위의 심사 과정에서 행정 당국에 의해 '난민 신청자'로서 꼬리표를 붙이게 되면서였다.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강제 송환 위기에서부터 난민 신청, 불인정, 패소와 승소의 과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관료주의적 꼬리표를 붙이는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난민은 고정된 꼬리표의 존재로 박제되지 않는다. 난민을 본질화된 대상으로 고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난민성에 대한 이들의 대응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말키(Malkki 1995b)는 투치족에 의한 종족 살해로 인해 부룬디에서 탄자니아로 피신한 후투족 난민을 살핀 바 있다. 동일한 사유로 망명을 하지만, 후투족은 망명지에 따라 망명과 난민성을 다르게 경험하고 구성한다(ibid.: 2). 난민 캠프에 체류하게 된 난민은 그곳에서 "순수한 난민"으로 스스로를 구성하며 투치족과 구별되는 "순수한 후투족 정체성"을 상상한다(ibid.: 223). 이때의 망명 생활은 뿌리 뽑힌 이산의 경험이 되고, 고국을 되찾기 위한 시련의 서사를 구성한다. 반면, 마을에 정착한 난민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난민으로 호명되기를 거부하며, 범세계주의적인 정체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현지에 녹아들고자 한다. 이로써 두 그룹의 후투족 난민은 동일한 난민이라는 범주에 있으나, 위치 지어지는 양상에 따라 범주를 창조적으로 전복하고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낸다(ibid.: 8).

한국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NLD 구성원에게도 이와 같은 난민성의 전복과 변형이 나타난다. 난민 인정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이 연약하게만 보이는 보통 난민과는 구별된 “정치적 난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일하게 한국에서의 버마 민주화 운동으로 난민이 되었다 할지라도, 2003년에 만들어진 버마행동 한국과 운동의 방향성과 진정성을 두고 서로 경계를 만들고 경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버마행동 한국 역시 NLD와는 다른 중간자적 위치를 주장하며 민주화 운동에 접근하고, 그에 따라 차별화된 난민성을 구성하였다. 두 단체의 지향과 활동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버마 민주화의 기치 아래 활동하였다는 점,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되는 과정에 있어 난민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변형하며, 운동의 활로를 찾아갔다는 점이다.

1) “우리는 그냥 난민 아니잖아요”

NLD에는 체류 자격의 안정을 위해 난민 지위를 신청했지만, 여전히 버마 민주화 운동가로서 ‘난민’이라는 라벨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많았다. 앞선 마웅저 씨처럼 스스로를 난민으로 이해하며 시야를 확장한 사례도 있지만(양영미 2014: 238), NLD 구성원 대부분의 주장은 “비록 난민 신청을 해도 나는 운동가이지 난민이 아니다”라고 난민성을 부정하거나, 양보하여 인정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여러 유형의 난민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정치적 난민’으로 제한하는 데 그쳤다. 오랜 기다림과 어려운 시간을 거쳐 받은 난민 지위이지만, 이들에게 난민성은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는 범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말키(Malkki 1995b: 158-161)의 연구에서도 난민성이 부정되는 상황이 등장한다. 난민 캠프에서 난민은 법적인 “지위”이자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조건이었음에 반해, 마을에 정착한 난민에게 난민성은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난민을 지원하는 국제기구가 마을에서 거의 역할하지 않았으므로, 난민 지위는 특별히 유용하거나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난민은 차라리 방해가 되는 오명이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를 난민이라

는 집단적 존재로 상상하기보다, 난민이라는 꼬리표를 벗어나 탄자니아인이 되고자 했다.

한국에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난민 협약과 난민 인정 제도는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에게는 노동이 가능한 체류 지위 비자(F-2) 외에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특별한 보호나 보장이 없었다. 말키의 연구에서 난민 인정을 받고 마을에 당도한 난민과 마찬가지였다. 한 NLD 회원에게 난민 인정을 알리며 함께 주었던 종이 한 장이 '생계가 곤란하면 동사무소에 가라. 동사무소에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였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회사에서는 정치 운동을 하는 난민이라 하면, "왜 우리나라 와서 난민 하느냐고" 물으며 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난민이란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것 외에 특별한 가치를 갖지 못하였다. 도리어 난민이기 때문에 불편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덕분에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난민은 이 주제에 관련하여 직접 한국인을 "훈련"시키는 생활의 기술까지 습득해야 했다.

[사례 Ⅱ-5] 써르윈 인터뷰: 2017년 1월, 한국.

> 공장에 가면 외국인등록증에 난민 써있으니까, '난민 우리가 쓸 수 있냐' 고 물어봐요. 한국에서 할 수 있다고, 친구들 대신에 가서 제가 많이 뚫어줬어요. 최소 30분 걸려서 이야기하고, 고용지원센터 뚫어보고, 아니면 노동부, 법무부 전화하고. 제가 한국 사람 많이 훈련시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이들이 난민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었다. 다른 미얀마 이주민처럼 혹은 한국인처럼 살고자 한 것도 아니었다. 미얀마 이주민사회에서 그들의 민주화의 사명은 뚜렷이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NLD의 전신인 지하모임이 조직된 배경에는 이들의 정치적 지향으로 인한 미얀마공동체에서의 갈등이 있었다. 정치적 성격을 지양하는 이주민 공동체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는 별도의 조직을 꾸린 것이니, 일반 이주민'처럼' 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난민 인정을 받은 후에도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행정적 절차는 이들이 한국 사회의 '난민'임을 주지시켰다. 이 과정에서 난민성은 전면적으로 부정되기보다는 변형되었다. 이들은 자신이 난민이어야 한다면, 수동적이고 가난하게 표상되는 난민이 아니라 당당하게 표현의 자유를 역설하는 '정치적 난민'이고자 하였다.

[사례 Ⅱ-6] 쩌르윈 인터뷰: 2017년 1월, 한국.

> 왜냐면 우리는 난민 아니잖아요. 실례지만, 미안하지만, 에티오피아의 난민 아니잖아요. 우리도 돌아가서 일하고 싶고,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하며 도움 받으면서… 나중에 버마 돌아가서 한국 도와줄 수 있잖아요. … 법률상 난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린 그냥 난민 아니에요. 정치적 난민이에요. 정치적 난민은 아주 위험해요. 위험한 난민이에요.

NLD 회원들은 개개의 차이는 있으나 난민 심사와 인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의 난민성을 자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자각이 다른 그룹의 난민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도리어 이들은 자신을 "그냥 난민"이 아니라 "정치적 난민"으로 소개하면서 난민 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난민 구성 요인인 인종, 종교, 국적/민족,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에 토대를 둔 위계를 강조했다. 아래의 동성애자 난민의 논쟁은 이처럼 위계화된 난민 개념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례 Ⅱ-7] 시민활동가 A 인터뷰: 2016년 11월, 한국.

> … 지원금을 받아서, 난민사회교육을 했었어요. UN 난민협약부터 시작해서 협약 전문을 같이 읽고 학습을 같이했는데… 난민의 표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정치적 난민만 난민이고, 그것도 NLD가. 동성애자는 난민이 아니래요. 동성애가 큰 논쟁이었어요. 난민에도 레벨이 있어서, 가장 순수한 것이 정치적 난민이라는 거예요. 피부색이 다른 경우, 동성애인 경우, 정치적 의견으로도 난민이 될 수 있는데 … 스터디는 실패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정치적 난민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난민으로서의 멤버십은 없었던 거죠. 난민이라고 (한국 사회가) 준 것도 없으니까, 미련을 가

질 것도 없었겠지.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알려진 난민 집단으로서 NLD가 가지는 중요성은 분명하다. NLD처럼 집단으로 난민성을 드러내며 언론에 보도된 사례는 이후에도 찾기가 어렵다. 또한 이들이 한국 사회에 난민과 미얀마를 알린 공이 크다. 그러나 동시에 NLD 내부에서는 난민이라는 라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았다. 다만 난민 중 일부가 '정치적 난민'이라는 변형되고 조정된 존재로 자신을 위치 지었다.

2) 디아스포라 정치와 이주민 정치

NLD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이 대두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얀마 이주민 사회에서 NLD만 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민주화 운동을 함께 수행했던 또 다른 조직, 버마행동 한국이 있었다. 버마행동 한국은 2003년 9명의 멤버로 시작되었다. 버마의 민주화라는 같은 목표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버마행동 한국 역시 NLD처럼 초국적 정치와 장거리 민족주의를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단체는 그 성격과 접근에서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행정적으로 두 그룹은 정치적 의견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한국에서의 버마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박해 가능성을 근거로 난민 인정을 받았다. '버마에서 온 정치적 난민'으로 한데 묶인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라벨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는 각각 다른 위치성을 보였다. 두 단체는 한국에서의 버마 민주화 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그리고 난민성에 대해 차별적으로 해석하고 전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난민성은 또 다시 굴절되고 조정되었다.

[사례 Ⅱ-8] 아웅또 인터뷰: 2016년 9월, 미얀마.

미얀마공동체에는 정치적 색깔이 없는데, NLD는 정치적 색깔이 강해요. 그 둘 사이에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도 보면 민주화 당시 노동조합, 한국노총… 지역 활동이 많았잖아요. 또 미얀마 사람들이

정치 문제에 많이 조심스러웠어요. 한국에도 미얀마 관료들이 있다고, '관심 있으면 다쳐요' 그랬어요.

버마행동 한국의 설립자인 아웅또 씨는 1~2년 정도 "사회와 사람 공부를 하고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1994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체류 당시 미얀마의 악화되는 정치적 상황과 해외 민주화 운동을 보며 정치적 각성을 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 미얀마 이주민 사회는 정치적인 색깔을 경계하던 미얀마공동체와 정치적 지향이 두드러지는 NLD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웅또 씨는 정당의 성격은 아니지만 버마 민주화를 외칠 수 있는 사이 공간의 필요성을 발견한다.

논의는 이후 2003년 명동성당에 있었던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항의 농성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진다(Suh 2015: 761). 집회는 당시 한국 정부가 새로이 발표한 고용허가제에 대한 항의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2003년 8월 정부는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그동안 미등록 상태에 머물러 있던 이주노동자를 강제 추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등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주장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농성이 장기화되고 이후 해산하는 과정을 밟게 되자, 모인 이들은 강제 추방될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지원할 후속 방안을 탐색하게 되었다. 농성장에서 모인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은 결국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미얀마 정부의 탄압과 경제적 어려움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버마 민주화를 위한 이주노동자 단체로서 버마행동 한국의 전신인 미얀마이주노동자회를 만든다. 이 단체는 2004년 1월, 버마행동 한국으로 발전한다.

버마행동 한국은 버마 민주화를 향한 갈망을 가지면서도, 먼저 한국에 와 있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집중하였다. 이들이 초기에 다루었던 주제는 추방되거나 귀환하려는 이주노동자에게 주한미얀마대사관에서 부과하는 여권 재발급 비용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미얀마 군부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고, 하여 버마행동 한국은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당시까지만 해도 NLD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시위를 벌이면서, 점차 운동의

초점을 버마 민주화의 문제로 옮기게 되었다.

버마행동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가며 2004년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였다. 당시 한국은 이주노동자 정책을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강제 퇴거되거나 귀환하는 이주노동자의 물결로 인해 뒤숭숭하던 시기였다. 이런 시기에 일어난 시위에 대한 정보, 즉 버마행동 한국의 활동은 미얀마대사관을 거쳐 미얀마 본국의 정부로, 또 다시 한국 외교부를 거쳐 경찰에까지 전해져왔다. 게다가 버마행동 한국의 지도부 중 몇몇은 과거에 강제 퇴거를 경험한 이력이 있어, NLD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강제송환의 공포는 큰 문제였다. 때문에 이러한 정황에 위기를 느낀 버마행동 한국의 회원 9인은 NLD의 사례를 참조하며 고심 끝에 같은 해 5월, 난민 지위를 신청한다. 버마행동 한국도 NLD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했다. 난민인정 불허, 법원 소송 제기와 1심 패소, 고등법원에서의 승소, 대법원에서 법무부의 항소의 최종 기각을 거쳐 2011년 3월과 5월에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상의 난민 신청과 인정 과정만 놓고 보면, 버마행동 한국과 NLD의 초국적 정치 실천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두 단체가 한국에서 수행한 버마 민주화 운동은 미얀마를 향한 장거리 민족주의의 실천이며, 이들은 시위 현장에서 함께 버마 민주화를 외치며 초국적 정치 실천에 참여했다(Ⅲ장 참조). 그러나 운동의 기저에 깔린 NLD와 버마행동 한국의 문제의식과 지향에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

이주자와 난민의 초국적 정치 실천은 정치 행위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외스터가르트-닐센은 이를 정치 행위의 대상에 따라 이주민 정치(immigrants politics)와 모국의 정치(homeland politics)로(Østergaard-Nielsen 2001: 262), 보다 세부적으로 정치 실천의 내용에 따라 이주민 정치, 모국의 정치, 이출민(移出民) 정치(emigrant politics), 디아스포라 정치(diaspora politics)와 초지역적 정치(translocal politics)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눈 바 있다(Østergaard-Nielsen 2003: 762-763). 먼저 이주민 정치는 이주자와 난민이 이주국에서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수행하는 정치적 활동으로, 이주국에서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리 요구, 차별

투쟁이 그 예가 된다. 모국의 정치는 모국의 국내 및 대외 정책에 관련한 정치적 활동으로서, 현재 정권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포함한다. 이출민 정치는 모국의 정치와 마찬가지로 모국에 대한 정치적 요구이나, 요구의 내용이 이주자 본인의 초국적 지위를 제도화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모국의 정치는 그 내용과 참여 집단에 따라 나머지 두 유형과 관련된다. 디아스포라 정치는 내용 상 모국의 정치에 속하지만, 모국의 정치 체제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이주자 집단의 정치 실천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초지역적 정치는 마찬가지로 모국을 향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주민의 출신 지역의 개선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주자가 실천하는 초국적 정치는 실상 개개의 유형으로 구별되지 않으며, 이해관계와 상황에 따라 혼합되고 중복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NLD와 버마행동 한국의 운동과 난민성의 해석에 이와 같은 분류를 참조하고자 한다.

NLD의 문제의식은 버마행동 한국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NLD의 회원들은 버마행동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얀마 출신의 이주노동자인 동시에 민주화 운동 활동가였으나, 이들의 우선순위는 미얀마, 모국의 정치에 있었다. 이 노선은 분명하고도 강경한 것이어서, NLD 내에서도 많은 갈등의 원인이었다. 미얀마의 국내 정치 문제에 집중하였던 NLD의 활동은 한국에서 이루어지지만 모국을 향한다. 운동의 구호는 미얀마 정부를 향하고, 동시에 한국 정부와 기업을 향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구호는 미얀마의 군부 정권 규탄에 관련한 것이었다. 또한 오랜 시간 이주노동자로서 한국에 체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주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양하고, 본국을 향해 열정적으로 버마 민주화를 부르짖는 민주화 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정치적 실천은 모국 지향의 정치이고(Suh 2015: 762), 이주자로서 모국의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망명자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디아스포라 정치(Østergaard-Nielsen 2003: 763)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버마행동 한국은 지금 이곳에 와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접근을 강조하였다. 지금 여기 와있는 사람들을 “의식화”함으로써, 이들이 향후 버마 사회에 돌아가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버마행동 한국은 NLD처럼 미얀마인들이 모여 “버마 얘기”를 하며 조직된 것이 아니라, 먼저 이주

노동자 농성 현장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역시 지향의 차이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버마행동 한국은 NLD와 거시적 목표로서 버마 민주화를 공유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에서는 한국에 와있는 이주노동자의 처우와 권리, 교육에 집중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버마행동 한국의 활동은 이주민 정치의 실천으로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Suh 2015: 762; Østergaard-Nielsen 2003: 762).[16]

두 단체가 보인 운동 지향의 차이는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NLD는 내부 회의와 외부 성명 발표, 공개 시위와 국회 로비활동 등 버마 정치에 관련한 이슈에 집중해왔다. 한편 버마행동 한국은 공개 시위에 함께 참여했지만, 동시에 이주민방송 MWTV(Migrant World TV), 이주민 영화제, 이주민 밴드 등 이주민 정치로의 지향을 두드러지게 드러냈다. 또한 활동의 초점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법, 인권, 컴퓨터 등을 가르치는 이주민 활동에 있었다. 버마행동 한국의 이러한 활동은 이후 한국 사회에 미얀마와 이주노동의 문제를 알리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버마행동 한국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조직으로서, 미얀마 국내 정치로의 지향성이 뚜렷한 NLD와 정치적 색채를 가급적 드러내지 않으려는 미얀마공동체 사이에 자신을 위치지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간자적 위치성으로 인해 버마행동 한국은 "미얀마공동체가 있는데, NLD가 있는데, 왜 다른 조직을 만들었는지"를 지속해서 증명해야만 했다.

이런 위치성의 차이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은 미얀마 이주민 사회에서 NLD와 버마행동 한국은 미묘한 관계를 유지했다. 멀리에서 보면 버마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동지적 협력 관계로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운동의 방향성과 접근의 차이로 인해 경쟁과 경계의 관계에 놓여있었다. 이들은 버마 민주화라는 대의를 위해 전략적으로 함께 하지만, 방향성의 차이로 서로를 문제시하고 거리(distance)를 유지하였다. 2005년 6월,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아웅산수지 여사의 환갑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면서, 두

16)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한국의 이주노동자공동체를 연구한 김선임(2012b)은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의 형성을 다루면서, NLD는 정치공동체라고 분류한 데 반해(김선임 2012b: 119-120), 버마행동 한국은 정치공동체가 아니라, 노동인권공동체라고 분류한 바 있다(ibid: 132-134).

단체가 각각 별도의 축하 행사를 열었던 것이 대표적인 일화이다.

난민성을 둘러싼 NLD와 버마행동 한국의 차별화와 경합은 이들 대부분이 '현지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이라는 특성과 관련된다. 현지 체재 중 난민은 "본국을 떠날 당시에는 난민이 아니었지만 이후에 난민이 된 사람"이다(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이하 편람) 제94항). 원칙적으로 난민의 보호는 과거의 사건에 근거하지 않고,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의 박해, 즉 미래의 예상에 근거한다. 때문에 본국을 떠날 당시에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주하는 중에 본국의 객관적 상황이 변화하거나 본인의 주관적인 사정의 변경에 의해 현지 체재 중 난민이 될 수 있다(김종철 2015: 10-11). 그러나 본인의 주관적 사정의 변경은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은 요소이므로, 난민 지위 남용의 우려로 인해 논란이 많은 주제이기도 하다.

버마행동 한국 뿐 아니라 NLD의 회원 역시 대부분 미얀마에서 민주화 시위에 참여한 수준이고, 몇몇 예외는 있으나 운동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 더욱이 행정소송을 통해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주 이전의 활동보다 이주 이후 한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이 이들의 난민 구성의 근거로서 참조되었다. 이주 이후에 주도적이고 활발하게 민주화 운동을 해왔으며, 한국에서의 활동이 본국으로 돌아갈 시 박해를 받을 우려를 만들어 냈으므로 현지 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는 결론이다(서울고등법원 2005구합20993, 서울고등법원 2009누26199 판결문 참조).

현지 체재 중 난민의 특징은 한국 정부나 법원의 판단만이 아니라, 미얀마 이주민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판단의 잣대로 사용되었다. 한국에서의 활동은 각 단체의 난민성에 대해서, 더 나아가 민주화 운동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 요소가 되었다. 디아스포라 정치의 지향을 보이는 NLD는 "지금 이곳의" 이주민에 집중하는 버마행동 한국의 방향성을 문제 삼았다. 그들은 "미얀마의 정치를 고민하는 우리네"와는 달리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난민을 신청했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버마행동 한국의 난민 신청은 체류 지위를 얻기 위한 수단적인 것이었고, 따라서 그들은 "가짜 난민"이라고 주장되었다.

[사례 Ⅱ-9] 세인툰(前 NLD) 인터뷰: 2017년 2월, 미얀마.

띨러가무니 축제에서 OO밴드가 연주할 때에, NLD 당원 한 명이 정치에 대한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 OO와 OO가 그 노래에 반주를 하지 않겠다고 거절해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제 말은 몸 사리던 애들이 나중에 민주화 투사 이미지 만드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 2003년 디페인 학살 때에도 NLD는 모두 회사 관두고 삭발하고 매일 대사관 앞에서 시위했는데. 그때 버마행동 한국 애들은 체류 자격으로 시위하고 있었어요.

제터(Zetter 2007)에 따르면 과거에는 전쟁이나 갑작스러운 대량이주사태 등의 사건을 통해 난민이라는 라벨을 붙일 정당성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분명한 정당성을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국제 이주의 열풍과 함께 이주자가 유례없는 숫자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난민이라는 라벨은 협약에 따른 권리라기보다 입국 수단으로서의 자산으로, 대단히 가치 있는 지위이자 값비싼 상품으로 여겨진다(ibid.: 188).

'진짜 난민(genuine refugees)'의 개념이 등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ibid.: 181). 수단적으로 체류 지위를 얻기 위해 난민을 신청하는 비호신청자(asylum seeker)가 급증하므로, 난민 중에서도 난민 인정의 정당성을 갖춘 '진짜' 난민은 난민 인정자 중에서도 소수라는 함의를 전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난민이라는 단일한 꼬리표는 세분화되고 정치화된다. 난민과 관련한 경멸적인 꼬리표들, 이를테면 '불법 난민 신청자', '가짜 난민신청자', '경제 난민(신청자)' '불법 이민자', '불법체류자', '미등록 난민 신청자/이민자'와 같은 것들이 그 예이다(ibid.: 184). 난민 지위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상품이 됨으로써, 난민 인정자 가운데에서도 '진짜 난민' 대 '가짜 난민'의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ibid.: 188).

마찬가지의 논쟁과 비판이 NLD와 버마행동 한국 사이에 있었다. NLD에서는 버마행동의 활동 노선을 문제시 하며 "진정한 정치적 난민"이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반면 버마행동은 정당의 형태가 아니라 시민 운동, 이주민 운동의 형태를 통한 변화를 지향하였기에 NLD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버마행동 한국에서는 후발 주자로서 자신의 접근법이 가진 효과성을 강조했다.

[사례 Ⅱ-10] 아웅또(버마행동 한국) 인터뷰: 2016년 9월, 미얀마.

저희는 한국에 와있지만 곧 미얀마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을 교육했어요. 그러면 미얀마에 돌아가서도 지하활동을 이어가고 그게 사회 변화를 만들고 반정부 활동이 되는 겁니다. … 미얀마에서 5명 이상 모이면 국가보안법 때문에 군부에 걸려서 감옥에 가요. 그러니 미얀마에서 단독 활동을 하는 것보다, 한국과 미얀마가 협력하면서 의식화를 이루어야죠.

정리하자면, 법적 지위로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NLD와 버마행동 한국은 동일하게 버마 민주화 운동을 난민됨의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난민성의 내용과 방향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NLD에서는 모국의 변화를 향한 디아스포라의 정치를 방향성으로 삼아 "그냥 난민"이 아닌 "정치적 난민"으로 스스로를 위치 지었다. 반면, 버마행동 한국에서는 버마 민주화라는 목표는 공유하나 운동의 방향을 지금 이곳에 와있는 미얀마 이주노동자에게 두었다. 또한 정당의 이미지를 가진 NLD와 정치적 논의를 지양하는 미얀마공동체 사이에 자리 잡은 시민 단체를 표방하였다. 디아스포라 정치를 실천하는 NLD의 정치적 난민에 비교할 때에, 버마행동 한국의 정치적 난민은 이주민 정치를 실천하고 나아가 시민 운동을 지향하면서 난민성을 다른 내용으로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향성으로 인해 버마행동 한국은 NLD로부터 "가짜 난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NLD라 하여 이주민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버마행동 한국이 미얀마 정치 변화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NLD 역시 한국의 미얀마 이주민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미얀마의 소식을 알리는 방안을 고민해왔으며, 지난한 난민 심사 과정과 연장된 망명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난민이나 민주화 운동가이기 이전에 이주민으로서 서로의 생활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공동체였다(Kim 2012: 223-224). 버마행동 한국 역시 민주화라는 기치 아래 NLD와 연합하여 프리 버마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미얀마 정부에 관한 압

박을 함께 해왔다. 이주민 정치를 중심으로 하였어도, 그 인식의 기저에는 버마의 정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주민 정치 단체라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두 집단에는 디아스포라 정치과 이주민 정치의 특징이 모두 있었다. 다만 단체의 지향과 활동의 강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들의 자기 인식과 위치 설정, 나아가 난민성을 이해하고 드러내는 방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으로 강조점이 다른 두 단체가 공존함으로써, 디아스포라 정치와 이주민 정치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단체의 차별성과 미묘한 경계의 구도는 크고 작은 갈등 상황을 낳아왔다. 하지만 이 시간은 NLD와 버마행동 모두에게 운동가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이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장거리 민족주의를 실천하고 난민성을 해석하는 시간이었다. 경계와 갈등 속에 역설적으로 각 단체의 운동성이 보장되고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었다. 또한 난민 신청과 인정 과정에서 운동가로서의 존재 증명을 둘러싸고 벌어진 담론의 경합은 이들의 버마 민주화를 향한 운동에 지속적으로 동력을 제공하였다.

4. 한국 시민사회의 지지

버마 민주화 운동을 실천한 미얀마 이주민이 정치적 난민으로 각성하고 이후 난민이 되어 한국 사회에서 살게 된 데에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이들은 사실상 난민 지위를 충족하는 상태에 있었지만, NLD의 경우 난민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와 운동의 지속을 위해 이들을 설득하고 난민 심사와 소송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버마행동 한국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03년 이주노동자 농성 현장과 농성 해산 과정, 버마행동 한국의 전신이었던 미얀마이주노동자회와 버마행동 한국의 설립, 이후의 난민 신청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를 지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도움은 결정적이었다.

버마 민주화의 문제는 한국 시민사회에 '국제연대운동'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크고 작은 단체들이 참여하여 미얀마인과 협력하고 연대하며 이 문제를 한국 사회에 지속해서 알려왔다(손민정 2007). NLD와 버마행동 한국이 한국에서 버마 사회를 향한 목소리를 내고, 동시에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는 과정에는 한국 시민사회의 다양한 단체가 개입했다. 미얀마 이주민을 꾸준히 지원해온 석왕사(釋王寺)를 필두로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피난처, 새사회연대, 나와우리, 인권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제민주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변호사 그룹도 함께 참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버마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버마계, 버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모임, 버마를 사랑하는 작가 모임 등 버마 민주화를 위한 자발적인 시민 모임이 등장하기도 했다(한겨레 2006년 6월 19일자; 버틸 린트너 2007: 335).

한국의 시민사회는 미얀마인 활동가들이 강제 송환이라는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에 난민 지위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난민 인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였다. 한국인에게도 쉽지 않았을 행정적이고 법적인 난민 인정 과정의 지난한 절차(난민 신청과 불인정 후의 이의 신청, 재차 불인정 된 이후의 행정소송 등)는 시민사회의 지지가 없었다면 버텨내기 어려운 과정이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난민 지위의 신청에서 불인정과 기각을 거쳐 최종 인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법무부와 법원의 결정을 규탄, 비판하고, 환영해왔다.[17] 난민 인정 과정뿐 아니라 미얀마에서 군부의 민중 학살 등 긴급한 인권 유린 사태가 일어날 때면, 한국의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불교계, 변호사 단체 등이 별도로 성명을 발표하거나 협력하여 긴급행동에 동참하는 등 초국적 정치 실천에 동참해왔다.

물론 관계가 언제나 문제없이 흘렀던 것은 아니다. 오랜 지지와 지원 속에 한국 시민사회와 버마 민주화 운동 단체 사이에는 의도치 않은 갈등과 잡음이 동시에 있었다. 이들을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이해와 기대, 그리고

17) "[공동성명] 법무부의 버마 민주화 운동가 난민 신청 불허 규탄"(국제민주연대 외 11개 단체 공동 성명, 2005년 4월 21일), "공동논평: 버마난민관련 법원의 1심판결을 환영하며"(국제민주연대 외 10개 단체, 2006년 2월 3일), "환영논평, 대법원의 버마(미얀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함께하는시민행동, 2008년 9월 25일), "버마행동 활동가들의 난민 지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외 16개 단체, 2008년 9월 26일) 등.

미얀마인 활동가 당사자의 선택과 실천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난민 심사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미얀마 이주민의 난민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서로 달랐다. 시민사회가 모두 통일된 해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몇몇 시민사회 단체는 버마 민주화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며 이들이 이른바 한국의 1세대 난민으로 인정받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했다. 한편으로는 이주민 지원의 차원에서 "미등록 상태를 벗어나는 계기"로 난민을 지원한 단체도 있었다. 미얀마 이주민의 난민 신청을 지원하면서도, 한국 시민사회는 난민 지위를 체류를 위한 수단이거나 혹은 모범적인 난민 사례를 선보이기 위한 것으로 다양하게 해석하였다.

그러나 미얀마 이주민의 실천에서 시민사회의 기대는 어긋나기도 하였다. 특히 NLD에서는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심사받는 과정에서 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설령 체류 지위를 위한 수단이더라도 난민 범주를 위계화된 것으로 해석하고 자신을 그중 가장 위계가 높은 정치적 난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동성애자 논쟁([사례 Ⅱ-7] 참조)은 대표적으로 이들을 모범적인 난민의 선례가 되기를 기대했던 시민사회의 기대가 배반되었던 사례였다.

더구나 난민 심사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박해 가능성의 증명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만큼, 이들은 "민주화 투사"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구성해갔다. 이 과정에서 NLD는 민주화 운동을 하고자 하여도, 회원을 선별하여 받거나 투사 단체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사회로부터 고도로 경직화되었다는 비판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 버마행동 한국에서도 모양은 달랐으나 이른바 (활동가로서의) "의식화"를 기준으로 내부가 서열화되는 양상에 대해 외부로부터 '경직화'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사례 Ⅱ-11] 시민활동가 B 인터뷰: 2016년 12월, 한국.

언제부터 민주화에 대해 고민했다고? NLD 같이 만든 거예요, 저도. … (NLD 멤버들이) 학생운동 했던 경력이 있어도, 뭐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멀리 와있지만, 가슴 벅차하면서 역할을 해보자, 그런 거. 그렇게 한

땀 한 땀 소박하게 시작한 건데. 정말 활동했던 사람들도 합류하면서 … 경직의 길로 간 거예요. 특히 99년 말, 2000년에 난민 인정 얘기가 나오면서 급속도로 경직된 거예요.

또한 난민 지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진영 내의 역동은 난민 신청을 권고하고 지원한 시민 단체로서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특히 2004년에 버마행동 한국이 조직된 이래, 운동의 지향에 따라 NLD와 버마행동 한국은 서로 경계하고 구별 짓는 양상을 보였다. 시민사회는 버마 민주화 운동 진영의 역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제 단체 정도"로 이해하며, 화합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시하였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들의 분화된 상황을 인정하고, 친밀도에 따라 시민사회의 단체들이 함께 나누어지기도 했다(손민정 2007; 73-74). 이외에도 버마 민주화 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운동의 방법론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Ⅲ장 참조).

그럼에도 오랜 지지 속에 정치적 난민의 한국 생활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이는 난민과의 면담에서도 빈번히 관찰되었다. 이들에게 한국에서의 여정은 "OO 누나", "OO 교수님", "OO 스님", "OO 변호사님" 등 다양한 활동가와의 관계에서 해석된다. 그리고 활동에 한창이던 때에 잦았던 충돌과 갈등만큼이나, 이제는 그 시절을 공유하는 더욱 진한 관계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사례 Ⅱ-12] 쩌르윈 인터뷰: 2017년 1월, 한국.

OO 누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다들 누나라고 불러요. 존경하고 좋아해서. OO 누나가 많이 도와줘요. 우리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도. 누나는 전화하면 바로 나오고, 밤 11시, 새벽 3시에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누나예요.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존경심이 들어요. … 제가 (한국에) 20년 동안 살았지만, 이런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이와 같은 한국 시민사회의 지지로 미얀마 출신 민주화 운동가의 난민 인정 과정과 이후의 난민 살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 공유되었다. 특히 난민 신청자가 대부분 안전을 이유로 개인의 신상과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

는 반면, 이들은 민주화 운동가로서의 정체성과 삶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공개하였다(Suh 2015: 765). 이는 시민사회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으며,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소개된 미얀마의 역사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역사와 공명하였다.

실상 버마의 민주화 문제는 한국 사회에 있어 가시적이지 않은 문제였다. 미얀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담론'에 불과했다"(손민정 2007: 1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지지 속에 버마 민주화 이슈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버마를 지지하는 단체들까지 결성된 데에는 미얀마 이슈가 갖는 특수성이 있었다.

[사례 Ⅱ-13] 시민활동가 A 인터뷰: 2016년 11월, 한국.

미얀마 이슈가 축구, 해방운동, 일본 식민지 등의 프레임을 만들고, 또 민주화 운동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다른 국가 이주민보다 훨씬 정서적으로 빨려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7~80년대 선배들은 물론 윗세대도, 버마 문제에 대해 훨씬 애틋한 심정을 가져요. '너희도 할 수 있어. 지원해줄게.' 이렇게 맞물려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노벨평화상 소재도 있고요. 한국의 김대중, 그리고 버마의 아웅산 수지, 이런 식으로. 베트남이 문제 설득하기에는 더 어려워요. 버마에 비해. 우리가 가해자인 건 싫으니까.

군부 독재하의 미얀마는 한국인들에게 독재 시절을 떠오르게 했다. 각각 영국과 일본 치하의 오랜 식민지 생활, 공통된 일본 식민지의 경험(미얀마의 경우 1942~45년), 이후의 독립(미얀마는 1948년, 한국은 1945년), 80년대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의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미얀마와 한국의 근현대사는 대단히 흡사하다. 특히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미얀마의 상황은 한국 시민에게 있어 감정 이입을 하기 쉬웠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1980년의 5.18 민주화항쟁에 뿌리를 두듯, 버마 민주화 운동은 1988년의 8888항쟁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본다(손민정 2007: 118). 또한 한국의 사례에서도 해외에서 민주화 운동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다(조현옥 2005).

그러나 비슷한 시기의 민주화 운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뤄가는 반면 버마는 군부에 제압되고 군부의 통치는 연장되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에게 미얀마 이슈는 다른 국가의 어떤 이슈와 달리, “독재 시절을 겪은 나라로서”, “민주화를 이루는 것을 도와줘야 하는 부채감 내지는 사명감”(손민정 2007: 30)의 문제로 다가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미얀마는 베트남 등 다른 국가의 문제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한국의 시민사회에 전해질 수 있었다.

Ⅱ장에서는 1990년대 한국으로 이주해온 미얀마 이주민의 일부가 한국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벌이며 NLD-LA 한국 지부와 버마행동 한국을 설립하고 난민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단체와 개인의 차이는 있으나, 당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던 미얀마 이주민에게 난민 신청은 미등록 체류로 인한 강제 송환의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버마 민주화 운동과 삶을 지속해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NLD 구성원들에게 난민이라는 라벨은 운동가로서의 자존심으로 용납할 수 없는, 연약하고 가난한 이름표였다. 다만 당시에는 난민 외에는 답이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은 기나긴 심사 과정을 거치며 수동적이고 빈곤한 난민이 아니라 ‘정치적 난민’으로 스스로를 위치 짓고, 특히 NLD와 버마행동 한국이라는 단체의 활동 지향과 실천에 따라 제각기의 난민성을 구성하였다. 불가피한 난민의 현실 속에서 운동가로서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고자하는 과정에서 난민성은 조정되고 협상되며 구별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로 구별된 난민성은 단체 간의 경계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한국 시민사회의 지지는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버마 민주화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현안은 아니었지만, 한국 사회가 시야를 넓혀 주목해야 할 국제연대의 문제로 받아들여져 사찰, 이주노동자, 난민과 관련된 인권 운동 단체, 민주주의 관련 시민 단체, 변호사그룹 등 다양한 단체가 개입하였다. 버마 민주화를 위한 자발적인 시민 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시민사회 단체의 조력은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심사받고 인정받는 모든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미얀마 이주민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언론과 캠페인을 통해 한국 시민과 이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미얀마의 문제가 한국 사회와 공명하며 널리 알려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식민 지배와 독재 시절을 거쳐 민주화의 씨름을 겪은 한국과 미얀마의 역사적 친연성이 있었다. 더구나 2000년 당시 한국의 시민사회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진보정권으로 10년을 보내며, 시민사회가 성장하는 시기에 있었다. 이와 같은 지지와 지원에 힘입어 버마 민주화 운동을 하던 미얀마 이주민은 '운동가'로서 한국 사회에 알려지고, '(정치적) 난민'으로서 한국 정부의 인정을 받기에 이른다.

한국 시민사회의 지지에 힘입은 버마 민주화 운동과 이들이 난민이 되는 과정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당시 출신국의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이주민의 난민 지위 신청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굉장한 사건이었다(동아일보 2000년 5월 17일자; 연합뉴스 2000년 5월 17일자 등). 또한, 난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전무하던 초창기 난민 제도의 문제점들, 요컨대 외국인에 대한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통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면담 내용 열람과 정보 공개 청구 등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던 상황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2006년 2월 6일 자료 등). 언론을 통해 난민이라는 주제가 조명되고 한국이 난민협약에 이미 가입한 국가라는 사실, 그리고 한국의 독립운동가, 민주화 운동가 역시 '난민이었다'는 점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동아일보 2004년 12월 11일자, 오마이뉴스 2003년 6월 8일자 등).[18] 이들을 다루었던 판례를 통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국제법이 판결의 실질적인 근거로 등장했다.[19] 그 점에서 2000년대는 NLD로서는 민주화 운동가인 자신이 난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때였고, 동시에 난민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던 한국 사회가 자기 안의 난민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시간이었다.

---

18) 물론 당시의 독립운동가, 민주화 운동가가 망명 당시 모두 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박해의 위협에 시달렸던 실질적 난민이었으며, 그 당시 해외의 지원과 환대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연결되곤 한다.

19) 2016년 11월 3일, 공익변호사 비공식적 면담. 2006년 2월 3일에 선고된 판결(2005구합20993)은 (1) 난민협약의 난민 요건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행위의 성격, (2) 협약상 난민 요건의 충족 여부에 근거하여 원고인 미얀마인들이 거주국에서 체제 중에 난민이 된 것으로(편람 제96항) 판단하였다.

Ⅲ. 한국에서 정치 난민으로 살기

미얀마 출신 정치적 난민의 핵에는 버마 민주화 문제가 있었다. 한국에서의 버마 민주화 운동은 이들이 휴식과 안정을 연기하면서까지 붙잡았던 기치였고, 이를 통해 미얀마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였으며, 동시에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받게 된 근거이자 증거였다. 이 장에서는 한국에서 정치적 난민으로서의, 보다 구체적으로는 버마 민주화 운동가로서의 실천을 살펴본다. 운동을 하던 시기는 앞 장에서 서술한 난민 심사 과정과 부분적으로 겹치는 때였고, 그에 따른 영향 역시 운동 과정에서 확인된다. 무엇보다 정치적 난민으로서의 버마 민주화 운동은 지역적이고 또한 한국이라는 이주국 사회의 범위에 있었던 것이나,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던 버마 해방(Free Burma)의 목소리에 참여하는 실천이었다.

한국에서의 버마 민주화 운동은 NLD와 버마행동 한국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민주화 운동에는 이들 뿐 아니라, 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소수민족 공동체와 시민사회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한국에서의 운동이지만, 미얀마 본국의 NLD와 NLD-LA의 태국 본부 및 여러 지부 역시 지침과 조언을 전달하여 참여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미얀마 출신 정치적 난민은 다양한 행위자와 연대하고 협력함으로써, 운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으며 전환의 계기를 발견해왔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버마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 시위, 로비 활동, 그리고 송금과 사회적·정치적 송출을 통해 미얀마를 향하고 동시에 한국을 향하는 것이었다. 미얀마 출신 정치적 난민의 한국 이주는 국민국가 체제의 질서 아래에 이루어진 것이나, 난민이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부르짖는 이들의 실천은 미얀마를 넘고 또한 한국을 넘는 초국적 실천이었다.

1. 버마 민주화를 위한 시위

시위는 버마 민주화 운동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두드러지는 방식이었다. 정치적 난민은 주한미얀마대사관 앞과 국회 앞, 종각역 사거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외치며 버마의 변화를 호출하고, 정부와 기업,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해왔다. 시위는 NLD가 조직되던 1999년부터 시작되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버마행동 한국도 2004년 조직 이후 대사관 앞 시위와 기자회견을 통해 운동에 동참했다. 2007년부터는 NLD와 버마행동 한국, 그리고 한국의 인권 단체 등 7개 단체[20]가 합동으로 '프리 버마(Free Burma)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시위에는 때때로 카렌청년회(KYO; Karen Youth Organization) 한국 지부, 친족 공동체(Chin National Community(Korea)) 등 한국 내 미얀마 소수민족 단체가 참여하기도 했다. 미얀마를 향한 시위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아웅산수지의 가택 연금을 해제하고 정치범으로 수감 중인 민주화 운동 인사를 석방할 것, 그리고 민주사회로 이행할 것을 군부 정권에 주문하였다.

시위 현장은 버마 민주화라는 기치를 공유하는 자리였지만, NLD와 버마행동 한국의 운동 지향은 구호에서부터 차별적으로 드러났다. NLD의 경우 군사정부에 본국의 정치 변화를 요청하는 구호가 대부분이었다면, 버마행동 한국은 여권 밀매 및 해외 체류 수수료 부과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착취를 폭로하고 미얀마 정부를 규탄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윽고 합동 집회 등을 통하여 버마의 민주화를 바라는 목소리는 하나가 되곤 하였다. 이들은 때로는 삭발을 감행하고 때로는 미얀마 국기를 태워가며 "군부독재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쳐왔다. 시위는 매주 혹은 2주에 1회 열었으며, 미얀마에 큰 정치적 사건이 일어날 때는 연일 이어졌다.

---

20) 프리 버마 캠페인의 공동주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나와우리, NLD, 버마민주화를 지원하는 모임, 버마행동 한국,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그림 1> 제1차 프리 버마 캠페인(2007년, 한남동 미얀마대사관 앞)
(출처: 프리버마 캠페인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freeburma)

민주화 시위는 정치적 난민으로서 미얀마 사회를 향한 변화의 주문이자, 한국 사회에 미얀마의 실상을 알리고자 한 노력이었고, 동시에 정치적 난민으로 자신의 존재를 설득시키는 과정이었다. 주로 한남동에 있는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시위는 붉은 띠를 두르고, 깃발을 흔들며 미얀마어로 민주화 구호를 외치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피켓은 미얀마어로, 한국어로, 그리고 영어로 쓰였다. 미얀마대사관으로 대표되는 당국을 향할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한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언론에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이었다.

시위 참여자는 대부분 두 단체에 속한 미얀마인이었으나, 단체에서 탈퇴한 이들, 미얀마 소수민족 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두 단체를 지원하는 한국인도 함께했다. 시위에 찾아오는 한국인은 시위 지지자뿐 아니라, 시위를 취재하는 국내외의 언론도 있었고, 난민 심사를 위해 활동상을 확인하려 온 출입국사무소 직원도 있었다. 집시법 위반으로 용산경찰서에 연행이 된 사건도 있었고, 대사관 접근 문제로 인해 대사관에서 떨어진 대로에서 구호를 외칠 때도 있었다. 붉은 띠를 두르거나 커다란 깃발을 펄럭이며 미얀마어로

구호를 외치고 한남대로를 이열 횡대로 걷는 모습은 한국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던 풍경이었으나, 민주화 운동 집단으로서 스스로를 가시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사례 Ⅲ-1] 쩌르윈 인터뷰: 2017년 1월, 한국.

버마에 있는 정치범, 한국에 있는 지지 단체, 그리고 같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이 있으니까. 대사관에서 1명, 5명, 20명이… 힘이 빠져도 같이 하는 거죠. 일요일에 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일요일에 4명, 10명씩 교대로 해서 시위에 나갔어요. 서로 교대로.

대부분 주 6일 동안 일하는 빡빡한 노동자의 삶을 보내면서도, 하루 있는 휴일이면 나섰던 시위 현장은 민주화 운동가이자 정치적 난민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시위는 이들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이었다. 이곳에서 이들은 성명서에 적힌 단체의 이름이 아니라, 개개의 식별 가능한 얼굴로 운동에 참여했다. 시위하는 이들의 모습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꾸준히 노출되었고, 미얀마대사관에서는 이들의 사진을 찍어 본국에 공유하였다. 이때의 시위 참여는 본국에 자신의 신상이 보고되고 고향에 자신의 활동이 알려진다 하여도, 민주화 운동가로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이고 선언이었다.

민주화를 부르짖는 시위의 진정성 이외에도 시위가 가지는 전략적 효과성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위의 가시성으로 인해 난민 인정의 중요한 요건인 '귀환 시의 박해 가능성'이 확실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샤(Shah 1999)는 비호신청자가 법적 지위가 불확실하고 위태로울수록 공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데 추가적인 유인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공개 운동에의 참여가 난민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위가 가지는 전략적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통한 민주화 운동의 참여가 단지 도구적 효과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민주화 시위가 도구적 효과만을 낳았다고 볼 수도 없다. 수년간의 민주화 운동은 참여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희생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참여자의 정치의식과 정체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동시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들은 민주화 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자세를 갖추게 되었다. 다시 말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시위는 버마 민주화의 기치를 주장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운동가이자 정치적 난민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수행하고 설득하는 자리였으며, 마지막으로 민주화 운동가로서 성장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시위의 전략적 효과성과 관련하여 버마행동 한국의 시위 참여는 미얀마 이주민 사회 뿐 아니라 난민 심사 과정에서 논쟁을 불렀다. 난민 인정을 받기위한 의도에서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그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법원은 이들의 운동이 불러일으키는 박해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설령 버마행동 한국에서 선의(good faith) 없이, 다시 말해 난민 인정을 염두에 두고 시위에 참여하였다고 해도, 난민 심사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 동안 활발한 반정부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이로써 결과적으로 박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므로, 체제 중 난민이 된다는 것이다(재단법인 동천 2013: 78-79; 서울고등법원 2009누26199 판결 참조).

한편 시위는 버마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시위의 대상은 미얀마에 국한되지 않았다. 민주화 시위는 한국 정부를 향하는 것이기도 했다. 시위에서는 한국 정부가 버마 군부정권에 대한 경제적·군사적·외교적 지원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민주주의 지원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반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을 이유로 2003년 이래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던 미얀마 경제 제재와 같이, 한국 정부에도 강도 높은 압력을 실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그간 미얀마의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표명해온 것에 대한 촉구였다. 미얀마 문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결의는 없었으며, 다만 몇 차례 정도의 대변인 논평이 전부였기 때문이다(참여연대 2005년 4월 12일 자료). 때문에 버마 민주화 운동가들은 한국 정부가 버마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변화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목소리는 거리의 시위로 끝나지 않았고, 국회에서의 청원 활동으로 이어져 운동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국을 향한 시위와 외침은 정부뿐 아니라 기업까지 아울렀다. 2000년 이래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미얀마 군부 정권이 주도하는 가스 개발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이로 인한 군부 정권의 개발 이익 착취, 현지의 인권 유린,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촉구의 목소리가 시위에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대우가 미얀마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2006년에 밝혀지면서, 대우와 한국 정부를 향한 규탄과 비난의 시위가 계속되었다. 다른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미얀마에 투자하는 것은 군부의 배를 불리는 일이므로 투자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과 내용의 시위가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시위를 수행한 이들 사이에는 크고 작은 잡음과 갈등이 일어났다. 시위에 참여하는 미얀마 활동가 사이에서도 갈등도 있었고, 미얀마인과 한국인 간의 갈등도 있었다. 특히 시위를 주도했던 NLD의 경우, 시위의 주 대상이 미얀마를 향한 만큼, 시위의 구호와 내용은 주로 본국의 상황, NLD 본부의 결정 사항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들이 NLD의 수장이자 반정부세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아웅산수지의 발표나 NLD 본부의 결정 사항을 한국 활동에 반영하려고 시도하면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한국 활동가와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설명한 해외 기업의 투자 반대 운동에 대한 이견이었다.

[사례 Ⅲ-2] 시민활동가 B 인터뷰: 2016년 12월, 한국.

아웅산수지가 가택연금 되었을 때, 당시 해외투자기업에게 '미얀마에 투자하지 마라' 호소하고 있었어요. NLD가 만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투자 반대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반대하면서 '잘 생각해보라' 고 했어요. 버마는 너무 가난한 삶이잖아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는데. 민주화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가난을 목도하지 않았냐. 아웅산수지도, 당신도 잘 먹고 살고 있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민중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냐. 이들이 민주화에 관심을 가지려면, 물적 토대가 필요하다, 그랬죠. NLD는 펄펄 뛰고 반대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건 (이후에) 버마행동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그래도…'

시위의 방식 역시 논쟁의 요인이었다. 시민활동가 A는 “당신들 운동을 존중하는데, 한국 시민들에게 호소하려면 맞는 언어로 제시해야 한다”며, 운동의 현지화를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 사회에 버마 문제를 알리려면, 일본군 위안부 수요집회처럼 매주 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이러한 제안이 본부의 지침을 따르는 NLD의 입장과 갈등을 빚을 때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정리하자면, 정치적 난민을 중심으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이루어진 민주화 시위는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한국 시민과 정부, 기업의 관심을 요청하였다. 버마 민주화의 기치를 역설하고 이를 알리는 것이 시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시위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참여자들이 버마 민주화를 외치는 과정을 통해 민주화 운동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시위 공간은 미얀마 이주민이 모국의 현실을 알리고 변화를 요청하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민주화 운동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실천하며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또한 자신의 운동가됨, 난민됨을 설득하는 자리였던 것이다. 시위를 통한 자리매김은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의 조력과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얀마인 내부, 그리고 미얀마인과 한국인 활동가 사이에는 시위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였다.

2. 버마 민주화를 위한 로비 활동

운동은 거리에서 끝나지 않았다. 미얀마대사관 앞의 시위가 미얀마 군부를 향한 활동이었고, 서울 시내의 시위가 한국 시민을 향한 것이었다면, 국회와 각국의 주한대사관에서는 거리에서 외친 여러 의제가 정치적인 결정으로 이어지도록 로비 활동이 이루어졌다. NLD는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로비 활동을 하였다. 국회의원의 참여로 성명서와 발의안이 발표되고, 각국의 주한대사 역시 캠페인에 참여하며 버마 민주화의 이슈가 공론화되었다.

로비 활동은 시위와 달리, 많은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

었다. 우선 한국어 소통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시간 사용이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협력 속에 한국의 정계 네트워크와 연결되어야 했다. 때문에 로비 활동은 이러한 조건이 허락되는 NLD의 회장, 대외협력국장, 홍보국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상근 활동가이거나,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면서 시위와 로비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로비 활동의 주요 내용은 미얀마 본국의 문제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 문제였으므로, NLD를 중심으로 로비 활동이 이루어진 데에는 NLD가 모국 정치에 강한 지향성을 두었다는 특징과 연관된다.

NLD 회원들은 한국의 국회의원을 만나고, 또한 여러 국가에서 파견된 주한대사를 만나 한국 정부에 거래 및 투자 중단을 요청해줄 것을 호소했다. 시위 현장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외쳤던 구호이지만, 구호가 거리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요구와 촉구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에는 미얀마 현지에 연루된 한국 기업(예를 들어, 대우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등)을 향한 목소리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일부 열매를 거두었다. 몇몇 국회의원은 한국 정부와 미얀마 정부를 향해 버마 민주화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발의안을 발표했다.[21] 2003년 디페인 학살 당시 23명의 의원이 사건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2004년에도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원 43인이 발표했다. 2007년에는 국회의원 10인의 주도로 결의안을 발의하고, 2008년에도 당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84인 의원이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성명서와 발의안의 내용은 대부분 먼저는 미얀마 정부에 시위 무력 진압을 중단하고 연행자 및 정치범을 석방하며,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는 당시 아웅산수지에게 내려져있던 가택연금 조치를 해제하라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는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위한 것이었다. 시위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성명서와 발의안에서는 한국 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가 버마의 민주화

21) 2004년 8월 30일, “버마 민주화 촉구 국회의원 성명서”(참여연대 2004년 8월 30일 게시물), 2007년 10월 4일, “버마 민주화 촉구 발의안”(대자보 2007년 10월 5일), 2008년 11월 20일, “불법가택연금 아웅산 수지여사를 즉각 석방하라”(대자보 2009년 6월 19일).

운동을 지지하고 군사정부의 유혈진압에 항의하라고 주문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버마의 군사정부 퇴진 및 민주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사례 Ⅲ-3] 세인툰 인터뷰: 2017년 2월, 미얀마.

한국 안에 있는 외국 대사들, 영국, 일본, 미국, 유럽 나라 대사들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고 그랬어요. 수지 여사가 한국에 왔을 때는, 양심수 석방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의원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서명 운동 당시에 우원식 의원이 처음으로 도와줬었어요. 송영길 (당시) 인천 시장이 그다음. 나중에 송영길 의원의 도움으로 기자회견 많이 했었어요.

NLD의 상당한 노력과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는 제한적인 성공만을 거두었다. 미얀마인과 한국인 국회의원이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안을 발의하는 과정은 언론을 통해 한국 사회에 알려졌다. 국회의 기자회견이 다른 국가의 민주화와 운동가의 가택연금 문제로 열리는 것은 한국에서도 신기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가 정부 수준의 결정이나 규탄이나 결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때문에 로비 활동을 통해 기대했던 정부 수준의 제재나 압력이라는 결과를 맺지는 못했다.

또한 NLD는 국회를 통해 '버마 민주화를 위한 의원 모임'을 구성할 것을 꾸준히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시도도 끝내 성공에 이르지 못했다. 버마 문제에 관심을 둔 의원(조승수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미경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버마 민주화를 위한 아세안 의원 모임(AIPMC)'에서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프레시안 2005년 12월 13일)은 있었으나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효력은 거두지 못했다.

[사례 Ⅲ-4] 써르윈 인터뷰: 2017년 1월, 한국.

(NLD가) 한국 시민과 만나고. 국회도 소개해주고. NLD, 외국인 단체가 국회 들어온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왜 왔냐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뚫지 못한 것이 한국 정부예요. 개발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일본

은 국회도 정부도 도와줬는데… 대우인터내셔널 문제가 있었는데, 한국 정부에서 투자 금지해달라고. 투자는 좋은데, 투자금이 군부와 그 개인들에게 돌아가잖아요. 일본은 투자를 하는 것은 하고, 안 하는 것은 안 하고 그랬는데, 민주화도 투자했어요. (일본에서는)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외무부국장 만났어요. 그래서 아웅산수지 석방에 대해서, 맞춰서 정치범 석방하라 발표 했었어요.

버마 민주화를 위한 로비 활동은 거리의 시위에서 외친 구호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맺게 하고자 이루어졌다. 정치적 난민들은 NLD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단체와 국회의원, 한국에 파견된 여러 국가 대사들과의 관계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얀마와의 거래와 투자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해 성토하며, 국회에서의 기자회견과 결의문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로 연결되도록 노력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국회의원의 성명서와 발의안, 대사들이 참여한 서명 운동 등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정부 수준의 제재나 압력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국회 내에서도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효력을 보이지는 못했다.

3. 송금과 사회적・정치적 송출

버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정치적 난민은 민주화 운동가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이주노동자로 살아왔다. 제한적인 자원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와 민주화 운동가라는 이중적 정체성이 충돌하는 가운데, NLD는 이주노동자이기보다는 정치운동가이고자 했으며, 버마행동 한국은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를 기반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두드러진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으로 보냈고 노동을 통해 조직을 구축하고 한국 사회와 본국에 영향을 끼쳐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점에서 시위와 로비 활동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디아스포라 정치의 현장이었다면, 이주 노동을 통한 재정적 독립성과 송금은 보이지 않지만 실효성이 분명한 운동의 배경이자 실천이었다. 또한 경제적 영역의 송

금뿐 아니라, 이들 단체는 한국에서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활동을 통해 사회적·정치적 송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사례 Ⅲ-5] NLD 집단 면담: 2016년 9월, 한국.

연구자: 그럼 (조직 운영을 위해) 가깝게 지내는 시민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하나요?

아웅민쩌: 전혀 안 받아요. 회원 활동비가 한 달에 10만 원이고, 이걸로 운영해요. 다른 지원은 일체 거절합니다. 혹여나 다른 데서 지원받아도 미얀마로 직접 송금합니다.

연구자: 다른 데서 어떤 지원을 받으시는데요?

카웅묘: 얼마 전에 버마에 홍수 피해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부평역에서 캠페인해서 모금했는데, 그런 거. 그때 모금한 돈을 버마에 보냈어요.

재정적 독립성과 송금은 NLD가 지하 모임이던 시절부터 지속해왔다. 부천에 위치한 사무실의 임대료와 활동 비용에서부터, 매달 1,000달러씩 미얀마로 송금(Kim 2012: 229)하던 금액까지 모두 회원이 십시일반 모아서 부담한다. 과거 상근했던 회장은 회원이 낸 활동비로 봉급을 받았다. 최근에는 상근하는 임원이 없고 활동 범위가 축소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매달 10만원 씩의 회비를 모든 회원이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위 사례의 카웅묘의 말처럼 미얀마에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기금이 필요할 경우 특별 모금을 하여 송금하기도 한다. 송금은 미얀마 밖에, 더욱이 화폐가치가 높은 외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본국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실천이다. 더욱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 조직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송금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다.

방향성에 대한 이견으로 NLD-LA 한국 지부를 탈퇴하고 한국 시민사회에서 독자적인 운동 방향을 찾아갔던 뚜라우 씨의 경우에도 그의 독자적인 운동은 먼저 송금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미얀마의 아동 교육 문제를 자각한 아동 교육 운동가로서 그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미얀마공동체에서

10명을 모아 한 달에 10만 원씩을 모으는 일이었다. 10명으로 시작한 후원은 100명이 되고, 이후에는 학교 설립 사업에 참여하면서 점점 활동 영역은 넓어지고 다채로워졌다. 이처럼 송금은 출신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가에 이주한 이주민이 출신국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특별히 정치나 구호, 어린이 교육과 같은 대의(大義)에 의거한 송금은 본국에 기여한다는 운동가의 자긍심을 강화하는 요소였다.

본국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은 비단 경제적 영역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경제적 차원의 기여로서 송금 이외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영향을 함께 살피고자 한다. 이른바 사회적 송출과 정치적 송출이 그것이다.[22] 이주민의 기여를 송금과 함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확장하여 살피는 것은 개발(development) 개념의 확장과 궤를 같이한다(Piper 2009: 216). 실상 경제 성장에 집중되었던 개발 논의가 점차 사회자본, 사회 복지, 인간관계의 민주화, 정치 참여의 기회와 같은 사회적 차원을 포함하게 된 것처럼 출신국을 향한 이주민의 기여 역시 그 범위를 확장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주 연구에서 이미 이 지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온 바, 이때의 사회적 송출(social remittances)은 이주가 야기하는 지역 수준의 문화적 확산으로서, 이주국에서 송출국으로 전해지는 개념, 행동, 정체성 및 사회적 자본을 일컫는다(Levitt 1998: 927). 레빗에 따르면 이주로 형성된 "초국가적 공공 영역(transnational public sphere)"(Soysal 1997, Levitt 1998: 928에서 재인용)을 통해서 초국가적 공동체가 형성되며, 이곳에서 문화적 확산의 형태로 사회적 송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레빗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미국과 밀접한 지리적·역사적 근접성 속에서 도미니카의 정당 리더들이 미국 이주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전략을 수용하고 새로운 정치 실천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때에 이동하는 것은 자본을 넘어서, 규

22)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의 기여를 이주를 통한 자원의 이동이라는 차원에서 폭넓게 살피고자, 경제적 영역과 더불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 집중한다. 이주 과정에서 자원의 이동을 이르는 'remittance'가 주로 '송금(送金)'으로 번역되나, 번역어에 경제적 차원이 함의되어 있으므로 연구자는 'social remittance'와 'political remittance'를 불가피하게 각각 '사회적 송출(送出)', '정치적 송출'로 번역하였다.

범 구조, 실천 체계, 그리고 사회 자본에 이른다.

NLD와 버마행동 한국의 활동에서도 미얀마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넘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적 난민 대다수는 오랫동안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이 버마 민주화 운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형성한 초국적 공공 영역은 단기로 방문한 미얀마 이주노동자의 정치의식을 깨우는 계기로 작용했다. 더구나 NLD와 버마행동 한국의 초기 활동이 간행물 발간을 통해 본국의 소식을 알리고자 했다는 점을 주지하자. 이처럼 본국의 상황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알리고 민주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애썼던 것은 당시 미얀마 국내에서 쉽게 외칠 수 없는 '버마 민주화'라는 기치를 일종의 사회적 송출로서 본국에 다시 전달한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진행 기간 중 있었던 미얀마 이주민 축제(띨러가무니 축제, 띤잔 물축제)에서도 NLD는 항상 자리를 잡고 NLD의 당기와 아웅산수지 국가고문, 틴쩌 대통령의 사진을 크게 걸어놓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얀마 이주민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그들은 '비록 노동을 하러 한국에 와있더라도, 모국의 정치를 잊지 말 것'을 전달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알기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버마 민주화에 대한 해외의 반응을 전달함으로써 단기 이주노동자에게 버마 민주화는 보다 새로운 기치로서 전파된다.

버마행동 한국의 활동은 버마 민주화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 이주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경험을 전했다는 데에서 구별된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에 집중했던 버마행동 한국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민주화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단기로 한국에 머무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한국어, 컴퓨터 강의를 제공하고, 이주노동자로서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학습과 지원은 우선은 한국에서의 이주 노동 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한국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정보와 권리 담론, 실천 체계가 이들이 미얀마로 돌아간 이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은 송금을 넘어서 단기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에의 노출과 경험을 확산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송출을 넘어 정치적 송출(political remittances)로 평가할 수 있다.

정치적 송출은 “이주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정치적 정체성과 요구, 실천의 변화”(Goldring 2003: 3)를 이른다. 사회적 송출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이 연구에서 별도의 분석 개념으로 변별력을 두는 이유는 정치적 송출이 민주화와 정치적 지지의 실천과 관련하여 이동하는 개념을 가리키기 때문이다(Piper 2009: 218). 버마행동 한국에서 집중해온 정치적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한 이주노동자의 “의식화”와 “조직화” 활동은 “이주민 정치”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Ⅱ장 참조), 이주 전반의 차원에서 이 활동을 조명할 때에 한국에 체류하는 단기 이주노동자를 매개로 하여 본국을 향해 수행된 정치적 송출로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골드링은 정치적 송출에 대해 귀환 이주자의 실천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장시킨 바 있다. “귀환 이주자가 초국적 이주 경험에서 얻은 정치적 정체성과 요구, 정치 실천”(Goldring 2003: 4) 역시 정치적 송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참고해본다면, 한국에서의 이주 경험을 통해 얻은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미얀마로 돌아간 귀환 난민이야말로 정치적 송출의 행위자이자, 본국으로 재이주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송출되는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Ⅴ장 참조). 그가 송금됨으로써 한국에서의 이주 경험에서 얻은 정치적 정체성과 실천이 함께 송금되기 때문이다. Ⅴ장에서 살펴볼 귀환 난민 뚜라우 씨의 사례에서 그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일하며 배운 경험과 노하우 기반으로 하여 미얀마의 교육 문제를 다루는 NGO를 설립하는 데에 이른다. 그는 정치적 송출로서 출신국에 전해지는 귀환 난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송금과 사회적·정치적 송출의 방향성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의 사례이든 난민의 사례이든, 전통적으로 송금과 송출의 논의는 이주국에서 출신국이라는 단일 방향의 전달을 전제한다. 송금이 출신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 발전된 북반구(Global North)에서 ‘배워서’ 저발전된 남반구(Global South)에 ‘가르쳐준다’는 관점은 자칫 서구 중심적인, 혹은 이주국 중심적인 ‘개발’ 담론의 효과로 결론 맺을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Piper 2009: 235). 또한 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볼 때에, 이주를 구성하는 여러 재

화와 개념은 때때로 출신국에서 이주국으로, 그리고 이를 넘어 다각적(multi-directional)이고 다극(multi-polar)화된 양상으로 이동한다(Goldring 2003: 4).

이런 점에서 정치적 기여의 다른 방향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람의 이동은 아이디어의 이동을 수반하므로, 미얀마인의 한국 이주와 한국에서의 버마 민주화 운동은 송금 혹은 송출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로의 정치적 영향을 미쳤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얀마 이주민의 활동은 Ⅱ장에서 살펴보았듯 그간 국제 사회의 안건이지 한국 사회에서는 주목 받지 못했던 난민 주제를 조명함으로써, 1992년에 가입한 난민협약의 내용을 한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 내부의 이주민에 대해, 난민에 대해 각성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한국에 체류할지라도 본국을 향한 모국의 정치를, 더 나아가 초국적 정치를 실천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초국적 정치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이점에서 미얀마 출신 정치적 난민의 실천은 출신국을 향한 송금이나 사회적·정치적 송출만큼이나 이주국인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은 이주 이후의 행보를 통해 한국 사회에 생경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정치적 실천을 소개하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로서 버마 민주화 운동과 팔레스타인 평화 운동의 연대를 들 수 있다. 버마행동 한국에서는 팔레스타인의 평화 운동과 연결되어 초국적 연대의 가능성을 보였다(시민의신문 2005년 9월 6일자). 버마행동 한국의 대표는 이스라엘의 공격과 고립장벽에 고통 받는 팔레스타인인을 군부 정권의 압제 아래 있는 버마인과 연결하였다. 또한 한국인은 식민 지배와 군사 독재를 모두 겪었으니, 버마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한국이 함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해 연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연대는 미얀마 활동가의 참여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2007년 사프론 혁명 당시 버마 국민운동 촉진위원회(NLD-LA 한국지부, 버마행동, 소수민족들의 단체, 한국 내 지역 모임, 버마 이주노동자들 등)와 한국장애인연맹, 한국 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에이즈 인권모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다양한 인권활동단체와 연대하여

“버마민중학살 중단과 군부독재 퇴진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버마 국민운동 촉진위원회 외 119개 단체, 2007년 10월 2일)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른바 인권과 평화의 담론에서 다양한 주제가 포섭되고, 이를 사회 운동으로 실천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초국적 정치 활동의 저변을 확대한 것이다.

이들이 보인 초국적 정치 실천의 연대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다. 버마 민주화의 이슈는 망명한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뿐 아니라 유럽과 북미 국가를 중심으로 인권 문제로 규정되어, 전 지구적 사회 운동으로 이루어졌다. 이어 4절에서 조명할 초국적 정치 실천으로서의 버마 민주화 운동은 그 자체로 모국의 정치이지만, 이주국에 새로운 정치적 실천을 소개하는 기여를 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연대의 체계는 초국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 소절에서는 미얀마의 정치적 난민들이 송금과 더불어 사회적·정치적 송출을 통해 미얀마로 영향을 끼쳐왔음을 살펴왔다. 사회적·정치적 송출을 통해 이주노동자가 이주국에서 경험하고 습득한 민주주의나 법, 정치 의식의 아이디어, 정치적 정체성이 노동자의 귀환과 함께 출신국으로 이동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Ⅴ장에서 다룰 귀환 난민의 본국 재이주는 그 자체로 이주국에서의 정치적 송출이 되어, 이주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동의 방향은 이주국에서 출신국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역으로도 이루어진다. 본 사례에서 한국 사회에 미얀마 이주민의 등장은 새로운 디아스포라 정치의 사례와 초국적 정치 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4절에서는 이어서 버마 민주화 운동이 지닌 초국적 정치로서의 특징에 주목하며, 이 사례가 나타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 버마 민주화 운동과 초국적 정치

미얀마 군부의 퇴진을 촉구하며 민주화를 주장하는 버마 민주화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되었다. 정치적 난민은 거리 위의 민주화 시위로, 정계의 로비 활동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캠페인으로, 또한 송금과 사회적·정치적 송출을 통해 버마의 문제를 알려왔

다. 이들의 목소리는 일차적으로는 버마의 군부 정권을 향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 그리고 국제 사회를 향한 것이었다.

버마 민주화 운동은 한국뿐 아니라, 서구와 아시아 전역에서 이루어졌다.[23] 이는 해외 망명의 증가로 인한 운동의 변화에 기인했다. 1990년대 이래 본격화된 초국적인 버마 민주화 운동은 이주국을 투쟁을 위한 교두보로 삼아 집단 행동의 초국적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여 이루어졌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미얀마인의 디아스포라 정치는 버마를 향하면서 동시에 이주국에서 이루어진 실천이며, 또한 버마 민주화를 위해 구축된 전 지구적 네트워크와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초국적 정치 실천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그 점에서 한국의 정치적 난민이 수행한 민주화 운동은 여기에서 '우리끼리' 하는 운동이 아니라, 전역에서 망명 중인 미얀마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운동이었다.

한국에서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들이 수행했던 버마 민주화 운동은 여러 구체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했다. 서울 한남동의 미얀마대사관 앞, 국회 앞, 종각역 사거리, 대학로 등은 운동이 펼쳐졌던 주요 장소들이다. 이 공간은 버마 민주화를 부르는 이들의 정치를 통해, 초국가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초국적 사회 공간(transnational social space)"으로 작동하였다. 파이스트가 명명한 초국적 사회 공간은 국가 간 경계가 뚜렷하게 지어진 국제적 공간(international space)으로 설명될 수 없는, 또는 그 국제적 공간 사이의 틈새를 채우는 공간이다(Faist 2000: 192). 장거리 민족주의의 실천으로서 모국의 민주화를 부르짖던 이들의 자리는 한국에 위치하지만 한국에 속하지 않는 곳이며, 미얀마를 향하나 미얀마에 위치하지 않는다. 파이스트는 이러한 자리에서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초국화(transnationalization)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NLD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아웅민쩌 씨는 한때 대사관 시위를 하면서

---

23) 실례로 유튜브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http://www.youtube.com)에서 'free burma campaign(프리버마 운동)'으로 검색하면, 서구와 아시아 전역에서 촬영하여 공유하는 버마 민주화의 현장을 살펴볼 수 있다(검색결과 36,300개, 2017년 6월 14일 기준). 한국의 프리버마 시위 현장 역시 활발하게 공유되었다('free burma campaign korea' 검색결과 2,850개, 2017년 6월 14일 기준).

동시에 국제전화를 통해 태국에 시위 현장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전했다고 했다. 바로 이 때, 시위는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초국적으로' 수행되는 것이었다. 아래의 사례처럼, 로비 활동 역시 다양한 국가의 주한대사관과 협력하고 해외의 다른 미얀마인과 연결하며 이루어졌다. 한국의 사례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은 "초국적 사회의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Glick Schiller 1999: 97-98)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사례 Ⅲ-6] 세인툰 인터뷰: 2017년 1월, 한국.

> 미국에 있는 버마 조직들이랑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어요. 한국에 있는 벨기에, 영국 유럽 대사 지원을 받아서. 송영길 의원이랑 기자회견 하면서, 버마 지원하기 위해 기자회견도 열고. (한국 국회의원들이) 당시 서명한 자료는 UN이랑 버마대사관에 보내고, 대통령들과도 긴밀히 연결됐었어요. 노르웨이의 전 총리가 시작한 버마 민주화 운동이 있는데, 버마 캠페인(Burma Campaign)이라고. 그것도 진행했어요. 그거는 전직 대통령과 총리의 사인을 받는 운동이에요.

초국적 정치로서의 버마 민주화 운동은 이주국에서의 자원과 기술 발달에 힘입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인터넷과 전자통신 기술이 확산되면서, 미얀마를 벗어나 있으면서도 미얀마에 초점을 맞춘 초국적 활동이 과거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식으로 가능해졌다(Egreteau 2012: 130). 한편에는 이주국의 자선 기관과 국제 인권 단체와의 네트워크, 다른 한편에는 기술적 진보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프리버마 캠페인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에서의 버마 민주화 운동 역시 한국의 인권단체 및 변호사 네트워크와 사이버 공간[24]을 기반으로 하여 훨씬 조직적인 활동이 가능하였고, 미얀마인만의 집회가 아니라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한국인들까지 "버마 민주화의 친구"로서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25]

---

24) 프리 버마 캠페인 팀은 '프리 버마 캠페인(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와 카페를 운영하며 시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25) 프리 버마 캠페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공간은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이고, 대부분의 자료는 한국어로 작성되었다. 민주화를 먼저 맞이한 한국인들에게 버마의 민주화에 친구로

또한 앞서 살펴본 팔레스타인 평화 운동의 사례처럼 한국의 국제 인권 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버마 민주화의 친구”는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하였다.

그럼에도 초국적 실천이 국민국가를 초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버마 민주화 운동의 사례에서, 초국적 정치 행위는 출신국뿐 아니라 이주국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Brees 2009: 38). 그리고 이주국의 환경에 따라 민주화 운동의 실천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미국과 태국의 버마 민주화 운동을 살펴보며, 이 운동이 가지는 초국적 정치의 다양한 실천과 실천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데일(Dale 2011)이 제시한 미국에서의 ‘프리 버마’ 운동은 상당한 수준으로 펼쳐졌다. 특히 초국적 정치의 주장이 초국적 법적 행위(transnational legal action)로 구현되어 미국과 미얀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두 국가와 관련을 맺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압력이 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버마 민주화 운동이 법적 구속으로 연결된 구체적인 사례로는 버마해방법(Free Burma law)이 미국 내 30여 개 지방 정부와 매사추세츠 주(Massachusetts)에서 법으로 제정된 것이다(ibid.: 101-140). 이 법에서는 미얀마와 거래를 하는 어떤 기업도 이 법을 통과시킨 주나 지역의 기업과는 계약을 맺을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미국 내 기업뿐 아니라 미얀마와 거래를 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단한 실효성을 보였다. 또한 미얀마에 진출한 해외 기업이 강제 노동 등으로 인권을 유린한 문제를 가지고 미국의 법정에서 다투며 기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ibid.: 170-195). 이와 같은 실질적인 사례들은 법적인 구속력과 영향력을 담보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나, 동시에 미국 내의 정치 실천을 통해 미얀마와 관련된 미국 밖의 기업 자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초국적 정치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반면 태국에서의 버마 민주화 운동은 본국과의 밀접한 관련성 속에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보인다(Williams 2012). 태국은 미얀마와 1,800km에 이르는 국경을 공유하는 만큼, 그곳에서의 민주화 운동은 미얀마의 소수민족 전

참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왔다. 이후 기사로 발표되기도 한 고(故) 내툰나잉의 글을 참조(오마이뉴스, “버마 8888 민주항쟁은 계속된다: 한국이 버마 민주화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며,” 2011년 8월 7일).

선과 연결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얀마에서 떨어져 있으며, 인원이 적고 종족적 다양성이 높지 않으므로 운동 진영 내부의 종족 갈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디아스포라 정치로서의 버마 민주화 운동이 종족 갈등과 정전협상의 문제(특히 카렌족)와 얽혀 보다 복합적인 양상을 낳는 특수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태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은 미등록 체류자로서 사실상 난민에 해당하는 이들이 상당한 수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법적 지위의 문제 역시 송금 등 초국적 정치 실천에 걸림돌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 지구적인 디아스포라 정치의 관점에서, 미얀마인의 이주국 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한국뿐 아니라 서구와 아시아 사회에서 동일하게 관찰된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제시한 초국적 정치 실천의 새로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민주화 운동은 본래 목적인 버마 민주화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Egreteau 2012: 131). 서구 사회는 프리버마 캠페인이라는 초국적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실행하기에 이르렀으나(Dale 2011; Williams 2012), 아시아 국가에서 그 영향력은 미미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실제적인 제재에 이르지 못했다(Suh 2015: 768-773). 시민사회와 국회의원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주국 정부 차원의 수준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해외의 민주화 운동이 본국의 정치 변화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주었는지도 평가하기 쉽지 않다. 해외의 민주화 운동에 관한 비판적 평가는 한국에서 NLD의 멤버였던 미얀마인들 역시 동의하는 것이다.

[사례 Ⅲ-7] 마웅텟 인터뷰: 2017년 2월, 미얀마.

NLD 한국이 버마 민주화에 미친 영향은 0.5%도 안 될 거예요. 물론 하나를 같이 밀면서 성공하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 하나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게 하나 있다면, 이 일 하나는 한국에서 똑똑히 한 것. 미얀마가 어떤 나라인지를 한국에 알려준 것 같아요. 한국 NLD가 한국 사람들에게 미얀마를 소개했다는 것, 그거는 성공이에요.

마웅텟 씨의 말처럼, 본래의 목적인 버마 민주화에는 바라던 만큼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다 하여도, 한국에 있어 이들의 활동이 가지는 영향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 있어 1세대 난민으로서, 또 한국 사회에 버마 이야기를 열심히 알려온 정치적 난민의 운동은 한국의 이주민사에서 한국 사회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주민의 모국 지향의 정치(Suh 2015.: 753)로서 큰 의미가 있다.

[사례 Ⅲ-8] 시민활동가 B 인터뷰: 2016년 12월, 한국.

버마 친구들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한국 이주민 역사를 좀 보셔야 하는데… 80년대 후반부터요. 초기 25년의 시간을 누가 이끌어갔나? 했을 때 많은 힘을 보탠 게 미얀마 난민 친구들이에요. 한국 정부가 초기 단기 로테이션 정책으로 2003, 2004년에 운동의 맥이 끊겨요. 미등록 이주자의 추방정책으로. 곧 다시 새로운 단기노동자가 들어오지만, 그 사이의, 이후의 흐름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버마 친구들이에요.

운동가들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이들의 민주화 운동은 난민의 권리에 대한 이슈,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에 경제 재제에 관한 토론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한국의 인권 담론을 넓히는 데 공헌하였다. 이러한 공헌 역시 “이주 과정의 민주화를 목표로 하는 활동과 행동, 아이디어”(Piper 2009: 238)로서 정치적 송출을 한국에 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에서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이 수행한 버마 민주화 운동을 살펴보았다. 운동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미얀마 군부와 한국 정부 및 기업을 성토하는 민주화 시위, 한국 정계와 각국 대사들과의 협력 하에 시위의 구호가 실질적인 정부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촉구했던 로비 활동, 마지막으로 송금과 사회적·정치적 송출을 통하여 본국에 영향을 끼쳐왔다. 송금은 경제적인 차원을 포함하여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경험과 지식을 단기 이주노동자를 통해 출신국에 전달하는 차원의 운동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루어진 버마 민주화 운동의 활동은 비단 한국에 국한된 지역적인 실천이 아니었다. 미얀마의 문제를 한국에서 다루지만, 이는

동시에 버마 민주화 운동을 실천하는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정치 네트워크와의 연계 선상에 있었다. NLD-LA 태국 본부나 다른 지부, 그리고 해외의 버마 해방(Free Burma) 운동과의 연결 속에서 한국에서의 활동은 한국이라는 장소성에 제한되지 않고, 초국적인 정치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버마 민주화 운동의 연구는 디아스포라 정치와 초국적 정치의 가능성을 살피는 작업이 된다. 미국과 태국 국경 지대의 민주화 운동에서 확인한바, 민주화 운동의 네트워크 속에서 운동의 목적과 구호는 공유되어도, 이주국의 환경에 따라 초국적 정치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버마 민주화 운동은 '버마해방법'의 제정이라는 초국적 법적 행동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기업의 책임을 미국 국내법의 영역에서 제기하고 비판함으로써, 미국 국내를 넘어 미얀마를 향하는 기업 자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실천이 이루어졌다. 반면 태국의 국경 지대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은 미얀마 소수민족의 전선과 인접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민주화의 문제와 소수민족 갈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초국적 정치 실천으로서의 버마 민주화 운동은 여러 결과를 낳았다. 초국적 민주화 운동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운동이 수행되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흥미로운 사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초국적으로 이루어진 버마 민주화 운동은 가장 우선시되는 목표로서의 버마 민주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연합과 미국처럼 실제적인 경제 제재로 연결된 사례도 있으나, 아시아에서는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다만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인 사회에 버마 민주화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며 모국의 정치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나아가 한국의 시민사회에 미얀마를 알리고 이주민 정치를 소개했다는 점, 더 나아가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정치적 난민이 참여하였던 버마 민주화 운동의 위치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위 공간으로서의 서울 시내와 미얀마대사관 앞은 동시에 초국적 정치의 가능성과 실천을 품는 공간으로서 나타난다. 이주노동자의 삶을 살며 투신했던 버마 민주화 운동은 치열한 삶의 고투를 요구했

으나, 이들의 운동은 '우리끼리의' 운동이 아니었다. 미얀마 국내를 포함하여 "데모크라시(democracy)!"를 외치는 전 세계의 민주화 운동 현장은 미얀마 본국과 이주국, 이주자,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초국적 정치 공간의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자리였다. 이로써 정치적 난민들은 따로 또 같이 '더불어 운동'을 수행하면서 운동가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난민의 탈영토화된 초국적 실천은 이주국에서의 실천이지만, 역설적으로 떠나온 국가에 더욱 집중한다. 목 놓아 민주화를 외치며 민주화된 버마를 상상하는 실천은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미얀마를 구성한다. 이는 민주화 운동의 실천이 초국적인 양상을 보일지라도 동시에 이들의 삶에 출신국의 문제를 더욱 아로새기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수행하고 "버마 민주화의 친구"로서 한국의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나, 이들은 여전히 모국의 민주화를 꿈꾸는 장거리 민족주의자로서 "버마 사람"이었다.

Ⅳ. 한국에서 장기화된 망명자로 살기

난민은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를 인정받아 비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여행증명서를 통해 다른 국가를 방문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난민이 돌아갈 수 없는 곳이 있다면 그의 고국이다. 더구나 난민 지위는 기본적으로 귀환의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그를 난민으로 만든 인종, 종교 등 출신국의 구조적 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소될 수 없다. 따라서 망명은 경계인의 위치에서 연장되기 마련이다.

난민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유엔난민기구는 25,000명 이상이 한 곳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불확실한 상태가 연장되는 경우를 장기화된 난민 상황(protracted refugee situation)이라 명명한다(UNHCR EC/54/SC/CRP.14). 난민 문제는 더 이상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구적인 국제복지(permanent international welfare)의 문제로서 재규정된다(Harrell-Bond & Voutira 1992: 7).

이 장에서는 미얀마 출신 정치적 난민의 연장된 망명을 살펴본다. 유엔난민기구가 명명한 장기화된 난민 상황은 아니지만, 이들 역시 예상보다 길어진 한국에서의 망명으로, 정치적 실천 이외의 생계와 생활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다루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터너(Turner 1967, 1969)의 연구를 참조하여 이들의 망명 상태를 경계적 상태(a state of liminality)로서 살핀다.

터너는 반 게넵(van Gennep 1960[1909])이 제시한 통과 의례에서 전이의 단계에 집중하였다. 반 게넵은 통과 의례에 관한 연구에서 인간의 의례는 세 가지의 잇따른, 그러나 분리된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분리(separation)와 경계(margin 혹은 limen), 그리고 재통합(aggregation)이 그것이다. 터너는 이 도식을 의례뿐 아니라 문화와 사회 전반에 적용하면서, 특히 전이, 즉 경계의 단계에 집중하며 이를 "어중간한(betwixt and between)" 상태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 경계 상태에서 상징적인 관계를 맺는 반 구조적(anti-structure) 공동체를 코뮤니타스(communitas)라는 개념

으로 설명하였다.[26]

미얀마의 군부 정권하에서 한국으로 망명한 미얀마 난민은 1990년대에 한국에 온 이후 20여 년 동안 본국에 돌아가지 못했다. 평균적으로 인생의 절반을 한국에서 보낸 셈이다. 출신국인 미얀마로부터 '분리'를 겪고 한국으로 이주를 감행하였으나, 곧 민주화가 이루어져 귀환하여 '통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즉 이때 난민이 경험하는 경계 단계는 국가 중심의 체계에서, 미얀마도 한국도 아닌 '중간' 단계이다. 그러나 연장된 망명 생활로 인해 두 국가 "사이에 낀" 난민의 경계적 상태는 오래 지속되었다. 이 경계적 상태에서의 체류는 난민 지위를 통해 안정화되었으나,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경계성의 문제를 정상화하고 길들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과 교육은 경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으로서 평가할 수 있다.

노동은 난민의 생존과 생활의 영역에서 경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이었다. 이들이 한국으로 이주한 후 처음 맞닥뜨린 문제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었다. 이후 점차 생활에 적응하면서 난민은 연장되는 경계적 상태로 인한 생존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실천으로써 노동과 운동을 오가는 생활을 해야 했다. 또한 교육은 사회문화적 영역에서의 경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실천이 된다. 비록 극소수만이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지만, 교육의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이들은 경계적 상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삶의 활로를 찾고자 하였다. 이 장에서는 경계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난민의 장기화된 망명 생활을 체류 지위, 노동, 그리고 교육과 연계하여 살펴본다.

---

26) 터너는 사회 구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코뮤니타스의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Turner 1967, 1969). 코뮤니타스는 사회 구조와 함께 인간의 사회적 상호연관성을 나타내는 양식으로서 사회 구조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기존의 사회가 구조화되고, 차별화되며, 정치적・법적・경제적 위치가 위계화된 체계인 것에 반하여, 코뮤니타스는 구조화되지 않거나 기초적인 수준으로 구조화된 사회로, 상대적으로 차별화되지 않은 형태를 띤다(Turner 1969: 82). 터너는 이와 같은 코뮤니타스가 구조의 틈새, 경계성(liminality)을 통해, 구조의 가장자리, 주변성(marginality, 혹은 outsiderhood)에서, 그리고 구조의 하부, 열등성(inferiority)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ibid.: 115). 터너의 주장은 사회를 사회 구조와 동일시할 수 없으며, 사회 구조와 그 구조가 흐트러지는 코뮤니타스의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인간 사회가 구성된다는 것이다.

1. 두 국가 “사이에 낀” 난민

1) 경계적 상태의 지속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은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후 20여 년 동안 한국에 체류해왔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아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얻었지만(Ⅱ장 참조), 이들은 미얀마 국적이지만 미얀마에 돌아갈 수 없고, 한국에 거주하지만 한국인이 아닌 난민의 지위로 미얀마와 한국의 경계에 서있다. Ⅲ장에서 살펴본 바, 정치적 난민은 한국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통해 초국적 정치 공간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동시에 한국과 미얀마 사이에 모호하고 양가적인 상태에 있다.

미얀마 난민의 위치성은 터너의 연구에서 제안된 “경계적 상태(a state of liminality)”가 연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바, 분리된 후 통합에 이르지 않은 경계의 단계는 모호함을 특징으로 갖는다. 분리 이전의 상태, 혹은 경계 이후의 상태와도 다른, 이곳도 저곳도 아닌(betwixt and between) 시기이다. 이 시기를 지나 마지막으로 재통합의 단계에 들어서면, 의례의 여정은 종료되고, 의례의 주체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다시 들어설 것이다.

터너가 전개한 통과 의례의 관점으로 난민의 망명을 읽을 수 있다. 이주를 통해 다시 삶의 터전을 찾아가는 망명의 여정은 탈구조적인 상태로, 이후 다시 안정적이고 구조화된 자리로의 귀환, 정착 등은 의례의 종료를 이른다 할 것이다. 다만 망명의 단계를 반드시 경계의 상태로 볼 수는 없다. 난민은 난민 협약과 난민법에 의해 비호의 권리를 법적·행정적으로 인정받은 존재이다. 본고에서처럼 망명의 시간을 경계적 상태로 읽을 수도 있으나, 망명 과정에서 경계의 상태를 통과하여 나름의 통합에 이를 수 있다. 이 경우, 망명의 의례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난민의 망명을 터너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데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한다(Hammond 1999: 232-233). 난민의 자리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있다 하여도, 위치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난민이 망명 중에 실천하는 그만의 행

위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먼드의 지적에 따르면 난민은 망명 중에 그들에게 가용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행위자이다. 이 연구의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 역시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해왔으며,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과정은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가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구축하며 운동가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이었다.

이 연구에서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의 여정을 경계적 상태로서 해석하는 것은 이들을 "낀 자리"에 고정하고 이들의 행위성을 간과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 작업은 난민이 해석하는 개인의 서사를 넘어서, 오늘날 더없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국민국가 체계에 포섭되지 않는 존재로서의 난민, 아감벤의 표현을 빌려 "예외상태(a state of exception)"를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난민을 조명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아감벤은 예외상태에 대해 "법이 스스로를 효력 정지시킴으로써 살아 있는 자들을 포섭하는 근원적 구조"(아감벤 2009[2003]: 17)라고 설명했다. 이때에 난민은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국가 체계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동시에 일상화된 예외상태로 포함된다. 예외상태는 터너가 설명한 "경계적 상태"와 유사하지만, 마침내 통합되는 의례의 서사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아감벤의 강조는 예외상태가 오늘날 통치술로서, 나아가 근본적인 정치구조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며, 수용소와 난민과 같은 주제가 이러한 "포함적 배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국가 체계를 폭로한다는 데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이 미얀마 출신이지만 미얀마로 돌아갈 수 없고, 오랫동안 한국에 살아왔지만 난민 지위를 주장하였던 긴 세월을 넘어서도 여전히 이방인으로 존재하는 자리에 주목한다. 한편으로는 이들의 경계적 상태를 예외상태를 드러내는 것을 조명하나,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의 실천으로서 정치적 난민의 운동과 노동, 교육을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 만난 한국의 미얀마 난민은 대부분 자신의 여정을 통과 의례로 해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여전히 불안한 위치에 있는 경계적 상태로 읽었다. 이들은 예외 없이 한국 생활을 "1~2년 계획하고 왔는데", "이렇게 한국에 오래 살 줄 몰랐다"고 했다. 이주를 통하여 배우고 일

하면, 민주화된 고국에 곧 돌아가 '재통합'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망명이 장기화됨에 따라 곧 종료될 것을 기대했던 경계의 상태 역시 연장된 것이다.

한국에 이주한 지 20여 년, 어느덧 한국은 미얀마에 이어 "제2의 나라"가 되었다. 2000년대에 난민 인정을 받으며 안정적인 체류 지위(F-2)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필연적으로 한국으로의 정착, 즉 의례 과정에서의 재통합을 의미하지 않았다. 이 비자는 3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것으로, 연장 과정에서 별도의 심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자동 갱신이 되는 것 또한 아니다. 외국인 등록증 뒤에 기록된 여러 번의 갱신 일자는 길게는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한국에 살며 노동하였어도, 여전히 이 나라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킨다. 한국에서 보낸 세월에도 불구하고 법적·행정적으로는 여전히 미얀마로도 돌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한국의 시민으로 살 수 없음을 주기적으로 상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래의 사례와 같이, 출신국과 체류국, 체류 지위, 체류 기간은 때때로 한 데 얽혀 혼란스럽고 모호한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아래 사례는 국가 중심의 질서서 난민이 가지는 경계적 위치를 드러낸다.

[사례 Ⅳ-1] 참여관찰 사례: 2017년 3월 2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연구자는 아웅민쩌 씨의 가족과 함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했다. 3년 만에 체류 지위(F-2) 연장을 위해 부부는 휴가를 내고, 온 가족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동했다. 아웅민쩌 씨는 연장을 위해 가족 각각의 신청서, 외국인 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재직증명서를 바리바리 챙겨왔다. 예약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수수료 납부를 위해 수입 인지를 샀다. 체류 연장을 위한 수입 인지는 1인당 6만 원. 아웅민쩌 씨는 가족 수만큼의 수입 인지를 현금으로 구매하고 순서를 기다렸다. 연구자는 출입국 직원과 대리 소통해줄 것을 부탁받아, 함께 동석했다.

(연구자와 출입국 심사관의 대화 후)

연구자: 작년부터 바뀐 게 있대요. 미얀마 출신은 결핵 검사를 하고, 문제가 없다는 진단서를 가져와야 한대요. 한국에 온 미얀마 사람

중에 결핵을 옮길 수 있다나 봐요.

아웅민쩌: 왜요? 우리는 계속 한국에 살았는데. 20년이 넘었잖아요. 요즘 온 게 아니잖아요.

연구자: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말했는데. 행정이 그렇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미얀마 출신이라고 뜨니까. 미얀마 출신은 어쨌든 그게 필요하다고 해요…

결국 이날의 목표였던 체류 연장은 실패했다. 심지어 자녀의 경우 미얀마에 가본 적이 없고 한국에서 태어난 무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함께 결핵 증명을 제출해야했다. 연구자와 온 가족은 인근 보건소로 이동해서 결핵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이 상황을 이해한 심사관은 진단서를 자신에게 가져오면 예약 없이 처리해주겠다고 했다. 며칠 후, 누구도 결핵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고, 아웅민쩌 씨의 배우자가 이른 퇴근길에 증명서를 가져감으로써 이번 체류 연장은 마무리되었다.

난민은 "과도기적 존재(transitional-being)" 혹은 "경계적 인간(liminal persona)"으로서 일련의 상징을 통해 규정된다(Turner 1967: 97). 3년 갱신의 체류 지위가 하나의 사례라면, 또 다른 상징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들 수 있다. 난민은 난민 협약에 의해 보장된 여행의 권리에 따라(난민협약 제28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를 방문할 수 있다. 이는 협약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여행증명서를 통해 출입국 항을 이용하는 과정은 체류비자 연장과 마찬가지로 번번이 경계적 인간의 자리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원칙적으로 난민은 체류와 비호의 권리를 인정받은 존재이지만, 비국민에게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을 펴온 한국에서, 더욱이 국경을 넘나드는 자리에서 난민의 경계적 상태는 이곳도 저곳도 아닌 모호함으로 인해 의심을 받는다. 게다가 여행증명서를 모르는 출입국 관리소의 상황은 모호한 위치를 지닌 이방인의 자리를 더욱 드러낸다.

[사례 Ⅳ-2] 쩌르윈 인터뷰: 2017년 1월, 한국.

해외에 많이 나가는데, 아직도 여행증명서 모르는 출입국 사무소 직원 많아요. 이거 뭐냐, 한국에서 나온 거냐. … 이름 칠 때마다 시간 걸려요. 그래서 저는 바로 사무실(출국심사대 옆의 사무실) 가요. 중간에 걸리면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 난민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처음이니까, 모를 수도 있지. 근데 갈 때마다 그러니까… 항공권 받을 때도, (항공사 카운터에서) 여행증명서 보면 몰라요. 그래서 갈 때마다 몇 시간씩 일찍 가요. 다른 사람은 50분 전에 간다면, 저는 2시간.

경계적 상태는 난민 본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을 경우, 난민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그의 자녀까지 모두 난민의 가족 결합 원칙에 따라 난민 본인과 동일한 비자(F-2)로 체류하게 된다. 가정을 통해 난민으로서 “사이에 낀” 위치가 다음 세대에 대물림 되는 것이다. 다만 이때의 경계성은 자녀에게 주변성(marginality)으로 경험된다. 분리와 재통합의 상상 사이라는 여정을 경험하지 않았으므로, 자녀는 망명의 서사로서 자기 삶을 해석하기 어렵다. 다만 이곳도 저곳도 아닌 주변화된 존재로서 자신을 발견한다. 이때 연령대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할 때, 이 주변성은 두드러지게 가시화된다. 이는 난민이 처한 경계적 상태가 쉽게 종료될 수 없음을 증명하며, 나아가 난민 주체가 품고 있는 예외상태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사례 Ⅳ-3] 참여관찰 사례: 2016년 12월 28일, 한국.

연구자는 아웅민쩌 씨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받았다. 2017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에게 모두 취학통지서가 발급되고, 자녀의 친한 친구도 이를 받았으나, 본인의 자녀만 받지 못해 걱정된다는 것이었다. 연구자가 해당 지역 주민센터와 인근 초등학교에 문의해보니,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취학통지서가 발부되는데, 난민의 자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애초에 명단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일주일 후, 연구자는 아웅민쩌 씨의 배우자,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자녀와 함께 인근 초등학교에 방문했다. 교감 선생님과 부장 선생님을 만나 이 아이가 한국어 능력이나 사회 적응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증명한 후에 개별적으로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주민등록번호, 즉 '국민의 번호'가 없는 존재로서 난민은 행정적으로 비가시적인 존재이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자 및 그의 자녀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난민법 제33조 1항), 그 권리는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내가 여기에 있다'고 스스로 드러내고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난민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지만, 국민국가 체계를 이루는 장치인 국민교육에는 속하지 않는다. 국민국가 체계에서 배제된 이들을 관리하는 난민법에 의해 권리를 주장할 뿐이다. 이 가운데 난민의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국민의 번호가 없으므로 배제되고, 그러나 배제된 난민으로 한국에 포섭되는 이중적 위치를 드러낸다.

더욱이 난민의 자녀는 미얀마인 부모 아래 태어났으나, 미얀마 국적도 한국 국적도 없다. 제 부모 아래 태어난 것 이외에 난민이 될만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따라서 난민이라는 자각이 없을뿐더러,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났으므로 통과 의례상의 '분리'를 겪지 않고 선천적으로 경계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난민의 자녀가 경험하는 모호한 위치성은 생애 주기의 진행에 따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두드러진다. 권리는 존재하지만, 동시에 지속해서 '권리의 보장'을 주장해야만 한다.

경계적 상태를 통과하기 위한 실천의 하나로서 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국적을 앞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을 하여야 한다.[27] 실상 기존 국적의 포기를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거리 민족주

27) 난민이 한국 국적 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 혹은 배우자가 한국인일 경우 적용되는 제6조(간이귀화 요건),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이거나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제7조(특별귀화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귀화 요건이 적용된다. 난민이라는 지위가 귀화에 있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공익법센터 어필 2016년 8월 18일). 다만 국적법 제5조 일반귀화 요건에 따라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

의의 실천으로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해온 정치적 난민에게 국적 포기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문제이다. “민주화가 되면 내일이라도 돌아갈 거예요”가 난민 신청 당시의 주장이며, 시위 당시의 외침이었음을 상기하자.

[사례 Ⅳ-4] 쩌르윈 인터뷰: 2017년 1월, 한국.

> 줌머 사람들[28]은 한국 국적 받고 싶은 사람들은 받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국 국적 받고 싶은 사람 거의 없어요. 나는 버마 민주화되면, 꼭 가겠다! 이거에요.

귀화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 만난 정치적 난민 중 한국으로 귀화한 사례는 한 명이 있었다. 연구자와 만났을 때 그는 마침 도착한 귀화 합격 문자를 보여주었다. 이 귀화에 대해 그는 한국인 아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귀화라고 설명한다. 역설적으로 귀화하면 ‘한국인으로서’ 미얀마에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것도 이유였다.

[사례 Ⅳ-5] 진민 인터뷰: 2017년 1월, 한국.

> (지금의 한국인 배우자를) OO에서 만나서 OO년에 혼인 신고했어요. 하지만 미얀마에 돌아가 혼인 신고를 할 수 없어서, 체류 자격은 못 바꿨어요. F-2 비자 상태로 혼인 관계에 있는 거죠. 귀화하면 상황이 바뀌겠지만. … 제 귀화 신청은 어쩔 수 없어요. (본국의) 부모님도 못 보고, 아내는 외국인이고. 난민 취소하고 그런 것도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나 혼자만 다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내가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나 결혼을 통한 귀환도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한

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28)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 지대의 줌머족을 이름. 방글라데시 정부의 탄압으로 한국에 이주했으며, 줌마인연대는 미얀마 정치적 난민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적 난민 집단이다.

국인 배우자와 결혼할 경우, 결혼 이민(F-6) 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다만 사실 증명을 위해 출신국에서의 혼인 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민 씨의 경우, 미얀마에 돌아가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는 난민이기에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결혼과는 별도로, 진민 씨의 개인 차원의 귀화만이 길이었다. 난민 자녀의 교육 사례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난민은 인정 과정만큼이나 이후의 망명 과정에서 지속해서 경험되는 꼬리표이다. 미얀마에서 온 정치적 난민은 매 3년 체류 연장의 행정적이며 관료주의적인 절차를 통해 지속해서 한국인 아님을 주지하게 된다. 또한 미얀마로도 돌아갈 수 없으므로 “이곳도 저곳도 아닌” 경계적 상태에 머물게 된다. 여행증명서 등 난민을 규정하는 몇 가지 상징이 호출되는 상황에서, 난민은 경계성을 두드러지게 발견하며 지속해서 경험해왔다. 특히 이는 난민의 자녀 세대로 넘어갈 때 일종의 ‘상속된 주변성’으로서 생애의 주요 단계에서 경험된다. 경계적 상태를 종료할 수 있는 전략으로써 한국인과의 결혼, 한국 국적 취득(귀화) 시도의 사례가 있으나, 혼인 신고와 귀화라는 행정적 과정에서 난민의 경계적 상태는 고려되지 않으며 다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극복이 요구된다.

2) 미얀마의 변화와 경계성의 연장

한국에서의 망명이 연장되는 동안 미얀마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디페인 학살과 사프론 혁명, 군부 정권의 헌법 수정으로 민주화된 고국은 요원하게만 보였다. 그러나 2012년, 명목상이었지만 군부가 정권을 이양하고 테인세인 대통령의 민간 정부가 등장했다. 해외 망명자에 대한 귀환과 방문에 대한 독려가 이어졌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정치적 제스추어에 가까운 독려였으나, 이전의 독재 정권과는 달랐다. 이후 해외 망명객의 미얀마 방문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앞선 진민 씨의 사례처럼, 귀화를 통해 국적을 포기한 후의 귀환은 아니었다. 설령 난민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한국과 달리 관광 비자를 받아 본국 미얀마를 방문할 수 있었다. 바야흐로 망명 정

치의 시대를 지나 귀환과 방문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바, 진민 씨의 사례와 같이 귀화가 난민의 경계적 상태를 종료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라면, 또 다른 전략으로서 반대편에 귀환이 있다. 귀환하여 고국에 돌아가 '재통합'됨으로써 일련의 망명을 마치는 것이다. 2012년 이래 시작된 미얀마의 변화로 인해 해외의 망명자들은 조심스럽게 망명의 종료와 귀환의 미래에 대한 상상을 시작했다. 해외에 비호를 요청했던 난민으로서 누구도 쉽게 귀환을 결정하지 않으나, 경계적 상태를 벗어나는 전략으로써 귀환을 고심하고 고려하게 된다.

망명자가 감행하는 출신국 최초 방문과 잠정적 귀환(provisional return)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이로써 장기화된 망명 생활의 종료를 구상하며 집의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과 공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Muggeridge & Doná 2006: 426). 다만 경계적 상태에 있는 난민으로, 더욱이 망명 생활이 장기화된 난민으로서 고국 방문은 오랫동안 바랐던 것이나 쉽게 감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신국과 이주국의 법적·행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충분히 안전성을 타진한 후에야 방문이 시작된다. 방문을 통해 영구적 귀환은 천천히 구상된다(Long & Oxfeld 2004: 9).

마찬가지로 미얀마의 경우에도, 난민의 본국 방문은 연구가 진행되던 2017년 초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자가 미얀마 2차 현지조사를 위해 방문했던 2017년 2월, 해외에서 체류 중이지만 미얀마 NLD 본부와의 회의와 컨설팅을 위해 양곤에 방문한 정치적 난민을 만날 수 있었다. 그에게 일본, 영국과 노르웨이의 사례도 함께 들을 수 있었다. 난민이지만 동시에 이제는 과거처럼 위험하지 않은 본국을 방문할 수 있으니, 난민으로서 감내해야 했던 경계적 상태가 해소되거나 약화될 수 있었다. 다만 한국은 여전히 예외에 머문다. 지침과 정책 부재로 인해, 한국에 체류 중인 정치적 난민은 난민으로서 미얀마 방문 비자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중 국적 획득을 통해 유연한 접근을 펼칠 수 없는 상황도 이에 연결된다.

[사례 Ⅳ-6] 민묘 인터뷰: 2017년 2월, 미얀마.

NCUB(버마연방국가위원회; National Council of Union of Burma)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36개 기관이 속해 있고, 모두 모여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명자로서) 해외에서 다양한 종족을 만나서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거예요. … 저는 난민 지위 가지고 있지만, 관광비자로 양곤에 올 수 있어요. OO(노르웨이 이주)도, 일본도 오는데, OO(한국 지부 멤버)만 못 오고 있어요.

해외의 버마 민주화 운동에서 한국의 위치는 독특하다. 한국에서는 난민 심사 제도의 열악함은 물론이거니와, 난민 체류 비자의 지속적인 연장, 영주 자격이 형식상 존재할 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난민으로 오래 거주하여도 여전히 3년짜리 난민 비자로 살아야 하고, 이중 국적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귀화의 과정 역시 지난하고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본국으로의 방문과 귀환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한국에 체류하는 미얀마 난민은 체류 지위와 방문 비자에 대해 대사관과 한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난민이 가지는 "예외 상태"는 한국의 정책적 맥락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초국적 정치 실천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이주민이 이주국에서 경험하는 배제와 주변화가 이주민의 모국과의 동일시를 더욱 강화하는 경향을 지적한 바 있다(Smith 1998; Portes 1999, Østergarrd-Nielsen 2001: 263에서 재인용). 이주국의 경험에 따라 일종의 '반발적 정체성(reactive identity)'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사례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관찰된다. 미얀마 출신 정치적 난민이 한국에서 경험한 경계적 상태는 버마 민주화 운동을 급진적으로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Ⅱ장에서 살펴본 바, 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고 배타적으로 구성한 데에도 이 경험이 끼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디아스포라 정치를 펼치는 NLD-LA의 다른 지부에서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운동가들이 이중국적을 취득하여 이주국에 정착하고 사회에 통합되어 가면서 본래의 운동성이 희석되었다. 그에 반해 한국 지부의 회원들은 여전히 열정적으로 민주화에 투신해왔다는 이야기는 법·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경계적 상태를 제외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2. 삶의 지속을 위한 노동

한국에 도착하고 먼저 시작한 것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었다. 더구나 한국 체류가 길어지면서, 난민으로서의 경계적 상태 역시 지속되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걸려 난민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생계에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급선무는 한국 사회에 닻을 내리는 일이었다. 살아남는 일이었다. 요원한 조국의 민주화 앞에 노동은 선택 사항이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은 난민의 경계적 상태와 생존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실천으로써 필수적이었다. 특히 미얀마의 정치 상황이 악화되고 한국에서의 망명이 길어지면서, 이주노동자이자 난민이라는 이중 정체성에 기반을 둔 삶은 불가피한 것이었다(Kim 2012).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은 대부분 오랜 이주 노동 경험을 갖고 있다. NLD의 전신인 지하모임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것도 수원의 플라스틱 사출 공장이었고, 버마행동 한국의 전신인 미얀마이주노동자회는 이주노동자의 농성 현장에서 만들어졌다. 때문에 노동의 현장을 떠나서는 생존을 말할 수도 없지만, 운동을 말할 수도 없다. 노동 현장에서 정치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노동을 통해 단체를 세우고 유지해왔다. 송금으로 미얀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도 노동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주노동자로서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이는 경계적 상태라는 맥락에 따른 배움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또한 노동 현장과 정치 활동이 중첩되면서, 노동자와 민주화 운동가라는 정체성 사이의 위계로 인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노동을 이유로 정치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다.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은 한국 사회에서 난민으로서도 1세대이지만, 이주노동자로서도 초기 세대를 형성한다. 대부분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일을 해왔다. 이들의 일은 대개의 이주노동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임금・탈숙련 노동, 소위 3D업종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례 Ⅳ-7] 진민 인터뷰: 2017년 1월, 한국.

연구자: 그동안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해오셨어요?
진 민: 뭐 별거 다해봤어요. 사출 공장에서도 일했고, 요리 공장, 내장탕이랑 갈비탕 들어가는 재료 만드는 데. 인테리어, 샷시, 우산 만드는 거, 도복 아이러닝(ironing, 다림질), 가구, 실리콘 공장, CMC (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의 약자)…

이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은 민주화 운동의 뒷받침이 되었다. 대부분 6일 근무에 하루를 쉬는데, 시위가 평일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가 쉬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교대로 회사 사정을 보아가며 운동을 해왔다. 게다가 비정기적으로 일이 생길 때면 '사장님'에게 양해를 구해야 했다. '버마 민주화 운동 하는 외국인 직원'은 유례가 없던 것이기에 민주화 운동 참여는 해고의 사유가 되기도 했다. 난민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 취업이 되느냐고 반문하거나 거부하는 공장도 많았다([사례 Ⅱ-5] 참조). 그러나 때때로 '사장님'은 민주화 운동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이런 경우 회사 측과 안정적인 관계는 장기적인 운동에 중요한 뒷받침이 된다. '사장님'은 전반적인 한국 생활뿐 아니라, 정치적 난민으로서의 삶의 여정에서 든든한 지지 세력이 되기도 한다.

[사례 Ⅳ-8] 뚜라우 인터뷰: 2016년 9월, 미얀마.

95년부터 2003년인가 4년까지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배려를 많이 받았어요. … IMF 때 30~40명이던 직원을 10~15명으로 줄이게 됐었어요. 한국인 노동자들 파업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말이 '뚜라우가 있으면 공장이 돌아간다' 그래서 파업에 참여하자고 얘기도 들었어요.

[사례 Ⅳ-9] 아웅민쩌 인터뷰: 2017년 6월, 한국.

제가 일하는 회사들은 저한테 다른 데 가지 말라고 하는 회사에요. …

NLD에서 제가 미팅 있는데 OO이 안 가면 제가 가잖아요. 우리 사장님은 제가 가면은 괜찮아, 가~ 가~ 그래요. 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사장님은 돈도 내고, 백만 원, 이백만 원, 이렇게 또 해주고. 우리 부천에서 우리 아웅산수지 여사님 생일파티도 하면 사장님도 왔고.

물론 모두가 위의 사례처럼 안정적으로 일해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노동으로 인한 어려움이 배움의 여정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때의 노동은 생존과 생활의 기반을 쌓는 실천을 넘어선다. 이 연구에서 만났던 정치적 난민들은 난민의 경계적 상태가 그러하듯 노동 과정의 어려움 역시 일시적인 것이기에, 어려움을 다루는 과정은 더 나은 삶으로의 전환을 위한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는 서사로서 받아들였다. 이때의 노동은 생존을 위한 수단을 넘어서, 학습과 성숙의 과정으로 해석된다.

[사례 Ⅳ-10] 카웅모 인터뷰: 2017년 1월, 한국.

(NLD에서) 제일 많이 회사 바꾼 사람이 나야. 참는 걸 못해. 한국에서 회사를 많이 바꿨어. 못 참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다양한 일을 했었어. 그런데 나 그것도(성격 참는 법을) 대한민국에서 배웠어. 어딜 가도 참아야 살을 수 있는데, 그걸 대한민국서 배웠어.

미얀마 출신 정치적 난민 중에는 이처럼 3D 업종에서 노동을 하지 않고도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예외적인 사례도 있었다. 소수의 미얀마인은 민주화 운동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 각 단체의 회장 혹은 상근 활동가로 일하며 기존의 노동을 그만두고 운동에 전념했다. 그 대신 매월 모이는 회원들의 회비로 적은 봉급을 받았다. 아래 사례와 같이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운동과 불일치하는 노동을 해온 것과 달리, 시민단체에서 일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간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운동이 생존을 위한 노동, 즉 직업이 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사례 Ⅳ-11] 아웅또 인터뷰: 2016년 9월, 미얀마.

(버마행동 한국을 조직하고) 처음 4~5년은 일하면서 병행했어요. 특히 초반 2~3년은 제대로 일하고. 이후에는 친구들에게 신세를 지면서 활동에 전념했어요. 희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젊었고, 조국 상황은 가장 안 좋고… 시대가 준, 그에 따라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겠다.

[사례 Ⅳ-12] 뚜라우 인터뷰: 2016년 9월, 미얀마.

… 그러나 공부하고 운동만 하고 싶다. 생계만 해결된다면, (회사) 기숙사에서 나와서 활동하고 싶다. … 그리고 2004년, OO 선생님의 제안으로 OO(시민단체)에서 인턴 활동을 했어요. 생계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죠.

그러나 많은 정치적 난민들이 경계적 상태를 극복하려는 방안으로 노동을 실천하고, 운동과 노동이 일치하는 예외적인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NLD 회원은 노동과 운동에 대해 위계화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강경파 회원들은 민주화 운동을 노동보다 높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규범을 내면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들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을 겪고 또 이를 기준으로 동료를 평가하기도 하였다. 실상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노동에 쏟아부으면서도, 이들에게 더 우선된 정체성은 '정치적 난민', 더 정확하게는 민주화 운동가여야 했다. 일은 부업이었다. NLD의 노동에 대한 저평가는 앞서 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주민 정치에 대한 평가와 연결된다. 민주화라는 대의 앞에 이주 노동의 문제는 부차적인 사안으로, 그리하여 이주노동자의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를 이주노동자로 위치 짓지 않으려는 역설적인 행보를 보였다.

[사례 Ⅳ-13] 쩌르윈 인터뷰: 2017년 1월, 한국.

(우리는) 이주노동자에요. 그런데 정치적 난민으로 활동하자는 거예요. … 이주노동자에요 저도. 나쁜 생각 없어요. 그러나 목적이 섞이지 않게 하

기 위해서. (버마행동 한국이 나타나는) 2004년 전까지는 저희도 활동 열심히 했어요.

[사례 Ⅳ-14] 시민활동가 B 인터뷰: 2016년 12월, 한국.

(NLD 회원이) 민주화 투사로 변모해가면서, 노동 문제에 등을 돌리게 돼요.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노동자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민주화 투사라고. … 2003년에 고용허가제가 생기면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노동자들 자진출국해라 하다가 그해 11월부터 단속 세게 하고… 전국적인 농성운동으로 변화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NLD는 자기가 노동자 아니라고. 체류 자격 안정 되었으니. 오히려 비판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죠.

NLD의 이러한 행태는 이들을 지지해왔던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시민활동가로서의 기대는 이주민 인권의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관계를 맺어온 만큼, 이들의 활동을 통해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신장되기를 바랐다. 버마행동 한국의 행보는 그 지점에서 시민사회 단체의 기대와 일치했다. 그 단체의 전신이 탄생한 곳이 이주노동자 농성장이었던만큼, 이들의 활동은 미얀마 이주민, 나아가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 전반을 향한 것이었다. 그러나 NLD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민 개념의 위계화를 통해 '정치적 난민'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주장하였던 것처럼, 민주화 운동과 이주민 운동의 경계를 분명히 지었을 뿐 아니라 이를 위계화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기치 아래, "난민 신청은 하지만 난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노동에 쓰면서도 '우리는 이주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자기 인식이 명확했다. 이처럼 노동과 운동 간에 위계를 설정함으로써, NLD는 버마 민주화 운동이라는 제한된 영역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NLD의 활동은 시민사회 단체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었으며, 때문에 "경직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다른 연대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제한된 영역에 집중한 태도는 한편으로 이들의 민주화 운동이 그토록 헌신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노동과 운동의 위계는 외부에서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NLD 내부에서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할 것을 강조하였으나, 이주노동자의 삶에서 대부분 단 하루 쉬는 휴일을 민주화 운동에 다년간 투신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한국에 적응하여 개인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노동과 운동은 공존할 수 없었다. 식당과 같은 서비스업을 시작하면, 일반 노동자가 쉬는 주말이 바쁘므로 NLD의 일정을 함께 하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개인의 사정을 구실로 탈퇴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하였다.

[사례 Ⅳ-15] 카웅모 인터뷰: 2017년 1월, 한국.

당의 법에 따라서 (시위나 회의에서) 리브 레터(leave letter) 제출한다고 해도, 여러 번 안 나오면 빼지. 개인적인 일, 한 번, 두 번은 이해하지만, 세 번은 안돼. 그래서 부평에 보면 NLD 탈퇴하고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 살기 위해서 개인 사업 해야지. F-2 비자 받은 다음에.

반면 버마행동 한국은 도리어 이주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조직의 시작이 이주노동자 시위 현장이었으며, 주 관심사가 한국에 있는 단기이주노동자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버마행동 한국은 이주민방송 MWTV, 이주민영화제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일에 큰 관심을 가졌다. NLD에게 장기화된 망명 생활의 노동은 경계적 상태의 모호함 가운데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자, 모국을 향한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배움을 얻기 위한 생존수단이었다면, 버마행동 한국에게 노동은 생존을 넘어 버마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관심사이고 활동 영역이었다. 따라서 버마행동은 이주민 정치의 행위자로서, 또 자신이 이주노동자로서 이주 노동의 현장과 문제에 폭넓게 관여하였다.

3. 공부와 삶의 활로 찾기

장기화된 망명 생활의 방향성을 고민하며, 지속되는 난민의 삶에서의 경

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정치운동가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몇몇 정치적 난민은 한국에서 교육의 기회를 누렸다. 이들의 이주 초기 이야기를 담은 방송을 참조하면, “한국에서 민주화를 배우고, 대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것은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들이 장래에 대해 갖고 있던 일반적 서사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당시에 대부분 20세 전후로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중도에 하차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민주화에 대해 배워가겠다는 의욕 역시 있었다. 앞서 살핀 터너의 연구를 다시 적용해본다면, 이미 민주화를 이룩한 한국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아(경계적 상태), 고국에 기여하겠다(재통합)는 상상, 귀환의 신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상 한국 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해 많은 시간을 노동으로 보내었기에, 실제로 수학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 과정은 한국의 시민사회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례 Ⅳ-16] 뚜라우 인터뷰: 2016년 9월, 미얀마.

한국에서도 공부가 필요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공회대 노동대학에 들어갔어요. 노동자를 위한 야간대학 같은 곳인데, 제가 첫 번째 외국인이었어요. … 노동대학을 졸업한 후에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04년부터는 성공회대 정치 NGO 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런 소수 사례를 대표하는 인물이 뚜라우 씨이다. 그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활동가로서의 인큐베이팅을 받았다. 그는 NLD의 운동 방향성을 고민하고 회의하며, NLD가 미얀마 정치에 머물 것이 아니라 폭넓은 공감과 협력을 위해 한국의 시민사회와 연대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NLD의 주류 그룹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자신의 방향성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시민사회 단체와 지인의 조언을 통해 일과 병행하여 야간대학을 졸업하고, 이후 고민과 배움을 이어가기 위해 주간 대학원에서 공부를 계속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8년간 일했던 직장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정치운동가로서의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근무 시간은 줄어들게 되므로 생계의 문제를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주간 대학원을 직장과 병행하기 어려웠다. 활동가로서의 계획

과 생계 사이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그와 친하게 지내던 시민활동가들은 생계와 활동을 돕기 위해 '뚜라우와 함께'라는 모임을 만든다. 일종의 계 방식으로 돈을 모아 생계를 지원하며, 그가 공부와 활동을 병행하도록 도운 것이다.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는 미얀마에서의 교육 과정을 입증할 수 없기에, 야간대학 동기들이 입학 심사를 위해 약 300쪽에 육박하는 책을 만들어 그간의 활동 이력과 시민사회에서의 교육을 증명하였다. 또한 한 시민단체에서 인턴직 제안을 받았다. 이러한 지원 속에 뚜라우 씨는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한편으로는 활동과 학업에 대한 배려를 받아 대학원 공부와 한국어 학습, 그리고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의 지지 가운데 뚜라우 씨는 민주화 운동가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시민활동가, 나아가 아동교육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새로이 발견하고 구성해가게 되었다.

[사례 Ⅳ-17] 나잉 인터뷰: 2016년 9월, 미얀마.

한국에서 살아도 한국어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NLD에서도 OO나 OO가 한국어를 제일 잘하잖아요. 나도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OO 교수님 추천으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 들어갔어요.

나잉 씨의 사례는 장기 이주민이 한국에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해왔음을 예시하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실제로 NLD에서 정치 활동을 오래 해온 정치적 난민의 한국어 능력은 사람에 따라 격차가 크다. 한국에서의 망명 생활이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기에, 초창기에는 대부분 한국어를 필요 이상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기 NLD의 한국어 소통은 임원진, 특히 한국어가 상대적으로 능숙한 대변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대부분은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한국어만을 소화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망명 상태가 연장되면서 한국 사회와 접촉하는 단면이 넓어졌다. 한국어 구사 능력은 이주민을 평가하는 또 다른 척도이기에, 한국어 능력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나잉 씨는 이 과정에서 정치 운동을 하며 이어진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공부한다. 오전에는 유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야간에 공장에서 근무하는 녹록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때의 교육을 기반으로 한국어 교사의 길을 걷게 됐다. 나잉 씨의 사례는 경계적 상태에도 불구하고, 삶의 활로를 찾기 위해 교육을 활용한 또 다른 사례라 하겠다.

이외에도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은 여러 교육 기관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 특히 지리적 근접성과 학교의 특성으로 인해 성공회대와 각별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노동자 대상의 야간대학인 노동대학과 아시아 전체의 시민사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비정부기구학과(메인즈 MAINS· Master of Arts in Inter-Asia NGO Studies)는 이들이 참여했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NLD와 버마행동 한국의 여러 회원은 장학금을 받으며 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국에서의 체류를 교육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장기화된 망명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정치적 난민의 한국살이를 살펴보았다. 특히 터너의 연구를 참조하여, 그가 주목한 경계적 상태가 출신국과 이주국 사이에 있는 난민의 망명 생활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한국에 살지만 한국인이 아니고, 난민으로 인정받았지만 지속해서 체류를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되며, 반대로 버마 민주화 운동의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군부가 통치하던 버마로는 돌아갈 수 없는 위치는 “사이에 낀” 경계성을 나타낸다. 특히 이러한 경계성은 난민 본인에게 나타날 뿐 아니라, 체류 지위와 함께 다음 세대에 대물림된다. 이주와 운동을 수행하지 않고도 난민으로 ‘태어난’ 자녀는 이를 한국 사회에서의 주변성으로 경험한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미얀마의 정치적 변화에도 여전히 변화 없는 한국 사례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미얀마의 변화에 따라, 난민이지만 비자를 받아 고국인 미얀마를 방문하는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행정당국과 주한미얀마대사관의 정책적인 무관심과 비협조로 인해 여전히 고국을 방문할 수 없는 난민으로 머물고 있어, 그 경계성은 더욱 연장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한국의 정책적 환경은 경계성을 더욱 강화하는 배경이 되었고, 강화된 경계성은 운동의 급진성으로 이어져 다른 국가의 운동 사례와 비교하여도 한국의 버마 민주화 운동은 오랫동안 역동적으로

유지되었다.

장기화된 망명 생활에서 경험되는 경계적 상태는 다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치적 난민은 경계성을 타개하고 삶을 세워가기 위한 실천으로써 노동에 종사하였으며 또한 교육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노동은 생계와 생활을 위한 실천으로서 불가피한 것이었고, Ⅲ장에서 살펴보았던 송금을 가능케 했던 실천이었다. 예외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그의 일이 되어 이를 통해 생계를 꾸리거나, 민주화 운동을 위해 시민사회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저임금 탈숙련 노동에 종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은 통과 의례와 같이 이주와 귀환 사이의 경계적 상태에서 성장하기 위한 발돋움으로 인식되었다.

본고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받았던 몇몇 사례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때의 교육은 난민의 경계적 상태를 벗어나서, 이후의 삶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한국 시민사회의 도움을 통해, 학위 과정, 언어교육 과정 등을 밟았으며, 이때의 교육은 경계적 상태에서 머무르게 된 한국에서의 배움을 통해, 귀환 후 조국에 기여하겠다는 통과 의례의 서사와 귀환의 신화 아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귀환의 선택지 앞에서

2011년 군부의 정권 이양이 가시화되면서 미얀마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군부의 여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형식상이나마 오랜 군부 통치를 마감하고 테인세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다. 테인세인 정권에서는 일부 정치범이 석방되고, 아웅산수지와 NLD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하게 되는 등 정치적 자유가 부분적으로 주어졌다. 경제 정책에서도 군부 중심의 폐쇄 경제에서 개혁개방으로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변화를 바라보며 한국의 프리 버마 캠페인 역시 2012년 4월,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며 중단되었다. 군부 독재의 겨울을 지나 봄이 돌아올는지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테인세인 대통령의 5년간의 집권이 끝나고 2015년 11월에는 역사적인 총선이 치러졌다. 이 총선을 통하여 미얀마는 1960년 이래 근 60여 년 만에 선거를 통한 첫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이로써 2016년 4월 틴쩌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NLD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최근 몇 년의 변화 가운데, 한국에 거주하는 정치적 난민에게 귀환의 가능성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난민이 발생한 정황에 변화가 생길 때 난민의 거취와 지위는 다시 주목을 받는다. 본국의 박해를 피해 난민이 되었지만, 본국의 변화에 따라 난민은 다시금 선택의 기로에 선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의 경우에도 미얀마의 정치적 변화와 귀환의 가능성을 연결 짓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고향을 떠났던 난민이 귀환하여 그가 속한 곳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망명이 완성된다는 정주 중심의 분석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자 한다(Malkki 1995a: 509).

물론 본국의 상황이 변화한다고 해서, 난민 지위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난민협약이 정지 조항(cessation clause)을 통해 명시한바, 난민이 자발적으로 국적국에 귀환하거나,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 기존의 난민 지위는 중지될 수 있다(난민협약 제1조 C항). 그러므로 출신국의 상황 변화가 아니라, 난민의 선택과 대응에 따라 난민 지위는

조정된다. 특히 난민 캠프를 중심으로 유엔난민기구와 비호국의 협력하에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난민의 '자발적' 선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변화가 시작된 미얀마는 망명자들에게 돌아와 새로운 미얀마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하였다. 2011년 테인세인 정부로 시작된 귀환 독려는 2016년 NLD 정부의 출범 이래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AsiaNews 2012년 5월 16일자; Radio Free Asia 2016년 5월 26일자). 입국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간 귀국할 수 없었던 운동가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졌다. 민주화 운동으로 수감되어있던 정치범과 학생운동가도 석방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저명한 반정부인사들은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2년 초부터 귀환하여, 새로운 흐름을 끌어내고자 분투를 시작했다(Egreteau 2012: 137; The Irrawaddy 2012년 9월 6일자).

미얀마 사회의 변화로 가시화된 귀환 가능성은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얀마 출신의 정치 망명가와 이주민에게 모두 유효한 것이지만, 특히 한국의 미얀마 난민에게 있어 중요한 사안이다. Ⅳ장에서 살펴본 바처럼, 한국의 국적법상 이중국적은 허용되지 않으며, 난민으로 오랜 시간 거주하여도 한국 국적의 취득은 별도의 귀화 신청과 기존 국적의 포기를 통해 가능한 일이다.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해 어렵게 취득한 거주자격(F-2)도 3년마다 지속해서 연장해야 한다. 미얀마로의 귀환을 오랫동안 상상하며 기다려왔지만, 미얀마의 상황은 여전히 암울했고, 한국에서는 출신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체류 연장 없이는 머무를 수 없는 불안정한 조건에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았을 때도 귀환은 가벼운 문제가 결코 될 수 없다. 대부분 20세 전후에 한국에 이주하여 평균 20여 년을 거주하였다. 그렇다면 자신이 살아온 만큼을 이주민으로 지내온 한국은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타향인가? 오히려 돌아가기를 고대해온 '버마'가 더 낯선 타향이 되지 않았는가? 장기화된 망명은 난민은 물론이고 미얀마 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안겼을 터, 이때의 귀환 결정은 왜 이루어지며,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리하여 귀환 후의 삶은 어떤 것일까? 혹은 귀환을 보류한 경우, 다른 여정을 택한 이는 어떻게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인가? 이 장에서는

미얀마의 정치적 난민이 귀환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삶을 이어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귀환자의 선택

이 연구에서 만났던 정치적 난민 중 누구도 미얀마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단언한 사람은 없었다. 요컨대 '때'가 되면 꼭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돌아갈 시기에 대한 판단은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필연적으로 한국에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다. 한국에서의 사명이 유효한가, 효과적인가, 그리고 내가 있을 곳이 여기인가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적어도 이 연구에서 살펴본 귀환 사례들은 이런 질문과 대면하며 회의를 하고, 귀환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가 정치적 의견의 표명으로 난민이 되었다 할지라도, 귀환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정치와 민주화 운동이라는 요소 이외에 경제적 요소, 가족 재결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귀환의 결정은 단번에 내려지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만난 귀환 난민은 제각기의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귀환과 귀환 과정을 계획하면서 이를 감행했다. 따라서 본 소절에서는 귀환을 감행하는 다양한 동기를 탐색하고, 이를 선택하고 수행하는 전략에 대해 살필 것이다.

다만, 귀환을 감행한 이들 사이에서도 귀환을 결정하는 과정과 이후의 삶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연구자는 귀환자 각각의 결정과 문제의식에 대해, 그리고 돌아간 후의 삶의 자리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이는 귀환의 결정이 대단히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더라도, 귀환하는 난민은 그 결정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며 설명하기 때문이다(Israel 2000: 37).

1) 귀환의 다양한 동기

한국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에 젊음을 투신했던 이들에게 민주화된 조국

으로의 귀환은 함께 꿈꿔왔던 미래였다. 그러나 귀환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실제로 귀환을 결정하고 감행하는 과정은 각 개인의 개별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귀환을 추동하는 요인은 한국에서의 버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기도 했고, 정치와 운동 이외에 경제적인 요인과 가족 재결합 역시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와 같은 귀환 결정은 개별 귀환을 허용하지 않는 NLD의 회원에게 있어 쉽지 않은 문제였다. 귀환을 수행하는 경우 한국을 떠나기 이전에 NLD를 떠나야 했다. 반면 귀환을 앞둔 단기 이주노동자와 협력하여 일해온 버마행동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결정으로 귀환이 이루어졌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다른 방향성은 귀환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데에서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 체류하던 정치적 난민이 귀환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한국에서의 버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이다. 해외에서 이주노동을 하며 참여하는 디아스포라 정치가 과연 효과적인가, 혹은 이 방향성이 맞는가 하는 고민은 정치적 난민이라면 누구나 오랫동안 해온 것이다. 특히 모국을 향한 정치 활동에 집중했던 NLD의 경우 이러한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귀환 난민은 이에 대해 회의하고 본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기 위해, 혹은 단체를 나와 자신의 노선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귀환을 결정하게 되었다.

나잉 씨와 마우툰 씨는 정치적 난민 중에 가장 일찍 귀환한 사례로 꼽힌다. 한국에서 NLD 활동을 하던 두 사람은 여전히 군부 정권하에 있었던, 심지어 사프론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2007년 4월에 귀환하였다. 나잉 씨와 마우툰 씨는 지하활동 시절부터 NLD에 참여했던 설립 멤버이고, 그 당시 지난한 난민 심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난민 자격을 심사하는 동안 그는 한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회의하고 있었고, 9년의 기다림 끝에 2008년 9월, 난민 지위 최종 인정 결과가 나왔을 때 두 사람은 이미 미얀마 땅에 돌아간 이후였다.

[사례 Ⅴ-1] 나잉 인터뷰: 2016년 9월, 미얀마.

(한국에서) 왜 그 활동을 여기서 하냐는 비판을 자주 받았어요. 너네가 하는 그거(민주화 운동)는 미얀마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99년부터 2005년까지 국회와 대사관에서 시위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나중엔 싫증 났어요. 효과적이지도 않은 것 같았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우툰 형이 같이 가자고 했어요. 같은 동지이고, 의형제로서. 그래 같이 가자!

나잉 씨와 마우툰 씨의 사례는 한국의 버마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 관찰된 최초의 귀환이다. 두 사람이 귀환을 결정한 주요 요인은 디아스포라 정치의 효과성에 관한 문제 제기였다. 치열하게 9년 정도 버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지만, 과연 한국에서의 정치 실천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주요한 지원 방안이었던 송금을 지속해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송금 이상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활동은 "미얀마에 가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질문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디아스포라 정치로 인한 피로감, 그리고 지속적인 초국적 정치 실천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성해지는 군부 정권에 대한 분노는 "위험하지만 귀환해보자"라는 승부수를 던지게 하였다.

이스라엘(Israel 2000)의 연구에 따르면 난민 그룹에서도 최초의 귀환은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귀환은 귀환 가능한 조건을 넘어서 본국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의무, 이른바 '귀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나잉 씨와 마우툰 씨에게서 관찰되는 것은 송금만으로는 버마 민주화에 충분히 이바지할 수 없다는 의문, 그리고 결국 돌아가야 하겠다는 의지가 귀환 이데올로기로 귀결하였다는 점이다. 때문에 불확실성과 위험이 대단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귀환을 준비하고 귀환을 수행한 것이다.

2015년에 귀환한 또 다른 사례에서도 운동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를 엿볼 수 있다. 세인툰 씨는 NLD의 초기 멤버로서, 미얀마 방문을 이유로 제명당하기 전까지 NLD 한국 지부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그는 2011년에 테인

세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2년 보궐선거로 아웅산수지 여사가 국회에 진출하자, 귀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례 Ⅴ-2] 세인툰 인터뷰: 2017년 2월, 미얀마.

해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무리 됐어. (이제) 버마 들어가서 운동해야 좋을 것 같아. … 대사관에서 시위하면 뭐해? 이미 다했어.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노력하면서 홍보 많이 했어. 더 이상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없어. … 민주주의 되면 돌아간다고? 한국 민주주의 됐냐고 물어봐. 지금 돌아가서 일해야 해.

버마 민주화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는 해외에서 지원할 시기가 아니라 돌아가서 일할 시기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미얀마의 상황에 대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 '완전한 민주화'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과거 난민 지위를 신청할 당시 "민주화되면 돌아간다"는 모두가 공유하는 결의였다. 반면 이제는 디아스포라 운동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 그리고 민주화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귀환은 당위가 되거나 혹은 보류할 아젠다가 된다.

한편 뚜라우 씨의 사례는 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귀환을 준비한 경우이다. 그는 NLD의 방향성에 대해 회의를 느껴 일찍이 탈퇴한 후 자신의 길을 밟아갔다. 앞선 나잉 씨와 마우툰 씨, 세인툰 씨의 사례가 디아스포라 정치의 효과성에 관한 의문 제기였다면, 뚜라우 씨는 운동의 효과성보다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뚜라우 씨는 초창기부터 NLD의 활동에 이견을 제시했다. 다소 배타적인 자세로 버마 정치에 집중하는 구성원들에 반해, 그는 NLD가 한국 시민사회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버마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치뿐 아니라 아동 교육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뚜라우 씨는 미얀마로의 귀환을 결정하기 훨씬 이전인 2002년 말 NLD 내부의 갈등으로 NLD를 먼저 탈퇴하게 된다. 뚜라우 씨의 주장은 '한국화' 된 것으로 평가되고, "민주화가 중요하지 교육이 웬 말이냐"는 비난을 받았

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와 다른 구성원 사이의 이견은 도무지 좁혀질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버마 정치가 아니라 버마의 시민사회, 특히 어린이 교육으로 관심을 돌릴 때라고 믿었다.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었다. NLD 초창기 멤버로 민주화 운동과 동료들에게 큰 애착을 가졌던 뚜라우 씨였기에, 그에게 이 충돌과 갈등의 시간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한국 체류뿐 아니라,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이었다고 회상한다. 그리고 "NLD에서 나올까, 죽을까?" 하는 고민 끝에 그는 NLD를 탈퇴한다. 이후에는 한국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정치운동가에서 시민활동가로서 전향을 이루게 된다.

뚜라우 씨의 고민이 깊었던 만큼 이후 시민운동가로의 전환과 고국으로의 귀환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아동 교육 문제를 다루는 시민 활동가로서 전환을 시도하며, 뚜라우 씨는 먼저 한국의 미얀마공동체 내에서 미얀마에 학교를 설립하는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주자 중심의 운동이 가지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결국 한국에서 버마 아동 교육 NGO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그의 NGO 사업이 미얀마에 도서관을 설립하고 어린이를 교육하는 것이었기에, 뚜라우 씨의 귀환은 예정된 순서였다. 이후 귀환의 방식 문제로 인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뚜라우 씨는 2013년 미얀마로 귀환한다. 뚜라우 씨가 귀환한 현재에도 이 NGO는 한국 사무국과 버마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사례 Ⅴ-3] 뚜라우 인터뷰: 2016년 9월, 미얀마.

(학교를 짓는) 이런 활동이 버마 평화 운동으로, 한국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에게도, 한국 사회에도, 또 버마에도 함께 연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08년에서 2009년 즈음 불법체류자 단속이 심화되면서 당시 모금을 돕던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귀국을 하게 되었어요. 운동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시민사회 단체로 만드는 것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OO 선생님과도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 OOO 선생님의 지원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또 정부가 바뀌면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어요. 기다려야 했죠. 그리고 2010년이 되어서 OO(버마 어린이 교육 NGO)를 설립하게 됐어요.

모국의 정치에 집중하며 한국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이라는 한 길을 달려온 NLD와는 달리, 버마행동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 한국 사회를 아우르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활동을 해왔다. 따라서 시기와 귀환에 대한 평가에서는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지만, 귀환의 문제에 대해서 NLD와 버마행동 한국은 사뭇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웅또 씨의 사례는 버마행동 한국의 귀환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아웅또 씨는 2016년 3월에 잠정적 차원에서 귀환한 이후 영구 귀환을 결정하고 미얀마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례 Ⅴ-4] 아웅또 인터뷰: 2016년 9월, 미얀마.

(버마행동 한국 멤버는) 현재 절반 정도 귀환했어요. 더 이상은 단체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 왜요?) 정부 반대를 위해,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버마행동 한국의 활동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이주노동자의 귀환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미 '돌아갈 때'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한국에 방문한 단기 이주노동자를 교육하면서, 이들이 미얀마로 돌아간 후에도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미얀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간직하고 그곳에서 지하활동을 지속하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그가 귀환하기 이전인 10년 전부터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먼저 귀환하여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아웅또 씨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귀환을 품은 활동을 해왔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그리하여 버마행동 한국의 구성원들은 최근 귀환의 가능성이 가시화되자, 개별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연스럽게 흩어졌다. 이런 연유로 버마행동 한국에서는 NLD와 달리 귀환의 방식이 문제시되지 않았다.

귀환의 결정에 있어 NLD와 버마행동 한국의 차이는 II장에서 살펴본 바

처럼, 각 조직이 가진 활동의 지향과 이어진다. NLD는 디아스포라 정치를 지향하며, 버마 민주화라는 정치적 이상이 대단히 분명한 조직이다. 따라서 귀환의 결정은 한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견에서 시작된다. 효과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아예 '투사'로서 일찍이 귀환하거나 혹은 '공식적' 귀환을 기다리는 NLD 한국 지부와의 불화 속에 먼저 개별적으로 귀환하였다. 뚜라우 씨의 사례처럼 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갈등으로 다른 길을 걷기도 한다. 다만 NLD-LA 한국 지부 출신의 귀환 난민은 모두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NLD-LA 한국 지부를 떠났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반면, 버마행동 한국 출신 난민의 귀환은 NLD 출신의 귀환보다 훨씬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기반을 든든히 가지고, 미얀마의 정치적 변화를 관찰한 후에 귀환을 시작하였다. 모국의 정치를 강조하고 더불어 돌아갈 것을 난민 지위를 신청할 때부터 누차 역설했던 NLD에서는 귀환의 움직임이 여전히 불안정한 시기에 시작되었다면, 이주자 정치를 강조하고 실용적인 위치성을 강조했던 버마행동 한국은 본국의 변화를 충분히 살피고 또한 한국에서의 기반을 잘 닦은 후에 귀환을 감행한 것이다.

NLD 출신이 모두 위와 같은 정치와 운동에 대한 평가에 따라 귀환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버마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정치적 난민'이 되었다 할지라도, 귀환의 선택에 있어 정치 이외의 여타 다양한 요인이 작동한다, 칠레와 이란, 폴란드에서 스웨덴으로 이주한 난민과 그들의 귀환을 다룬 클린탤(Klinthäll 2007)의 비교 연구에 따르면, 난민의 귀환은 단지 정치적 요인에 촉발되지 않는다. 난민의 귀환에 있어 '정치적 상황'의 변화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며,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함께 있어야만 귀환이 촉발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 등장하는 칠레와 폴란드 출신의 난민은 모두 출신국의 전쟁과 독재정권의 영향으로 스웨덴에 이주하였으며, 출신국이 1980년대 이후 민주화를 거치는 것을 본다. 그러나 민주화 이외의 경제적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칠레는 민주화와 더불어 단계적인 경제 발전을 이룸으로써 난민들이 귀화를 고려할 만한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는 반면, 폴란드는 민주화 과정에서 급격한 정치적 지평의 변화로 인해 경제적인 불안정이 극심하여 귀환 이주를 견인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의 사례에서도 정치가 그들의 활동에 중심이었지만, 이후의 거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요인이 가진 영향력이 상당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정치적 난민이 경제적 요인에 추동되어 귀환을 감행할지라도, 영구 귀환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에는 가족의 요소가 있음을 함께 확인하였다.

NLD 출신의 마웅텟 씨는 한국 기업을 통해 잠정적 귀환을 결정하고 미얀마에 돌아왔다. 그의 여정은 정치 난민의 귀환이 반드시 정치적인 동기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낸다. 나잉 씨, 뚜라우 씨와 함께 NLD의 초창기 멤버인 마웅텟 씨는 특유의 적응력으로 NLD에서도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멤버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뚜라우 씨와 마찬가지로 NLD의 강경한 정치 의식에 거부감을 느끼고 활동을 오래 하지는 않았다. NLD와 거리를 둔 이래로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한국 기업의 미얀마 석유 개발 사업 진출을 돕는 현지 코디네이터 직을 제안받는다. 그는 이를 “(경제적으로) 엄청난 기회”로 회상한다. 미얀마 시장이 해외에 조금씩 문을 열고 있던 터라, 미얀마 현지를 알면서 한국인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귀환을 결정하는 데에는 경제적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조하여, 난민의 귀환을 당연시하는 접근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발전, 근대성, 진보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오늘날, 망명자로 하여금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위하여 이주국에서 누리던 높은 생활 수준을 포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적인 잣대이다(Hammond 1999: 231). 돌아간 이후의 생활 수준과 나아가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며 그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며 귀환을 타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접근이다.

그리하여 마웅텟 씨는 경제적 동기에 영향을 받아 2008년 미얀마로 일시적으로 돌아왔다. 당시의 귀환은 잠정적인 것이었다. 막상 당시에는 그 기회를 통해 미얀마에 정착할 계획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잠정적 귀환의 목적이었던 사업 입찰에 실패했으니 기존 계약에 따라 한국에 돌아가야 했으나, 마웅텟 씨는 잠정적 귀환의 경험을 통해 영구 귀환을 결심하게 되었다. 경제적 요인이 귀환의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나, 영구 귀환을 결정하게 만든 요인은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고향의 가족이었다.

[사례 Ⅴ-5] 마웅텟 인터뷰: 2016년 9월, 미얀마.

마웅텟: 근데 (사업 입찰에) 실패했어요. 이젠 내가 미얀마를 몰라서. 15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내 사고 방식이 한국이 되어서. 미얀마인이 한국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걸림돌이 된 거죠. 원래 계약 조건은 실패하면 저를 다시 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와보니까, '여기가 내 나란데!' 가족도 여기에 있고, 원래 여기 사람이고.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연구자: 귀환하려고 그때 온 거 아니었어요?
마웅텟: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귀환 계획 없었어요. 생각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음… 가족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 아. 이제 떠나면 안 되겠다…

그는 귀환 후 1년 정도 "우왕좌왕하는 시간"을 보냈으나, 살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뤘다. 귀환의 계기가 그러하였듯, 마웅텟 씨는 최근 한국 기업의 '부장님'이 되어 한국 기업을 미얀마에 연결하는 중개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차 한국에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 방문하고, 사업으로 서울과 양곤을 오가며 16년의 한국 체류를 회상할 기회를 자주 갖는다.

[사례 Ⅴ-6] 마웅텟 인터뷰: 2017년 2월, 미얀마.

(한국에서) 예전에는 불법 체류를 했었는데, 이제는 갈 때 비즈니스 비자 3개월 주는데, 2주 있다가 와요. 이젠 한국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 내가 16년 동안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지? 미얀마가 집이 된 거죠.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 연로하게 된 부모님을 만나고 다시 가족의 일

원이 되는 것은 귀환을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가족은 귀환 이후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기도 한다. 미얀마는 소중한 고국(homeland)이지만, 오랜만에 찾은 고국이 곧바로 내 집(home)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Doná 2015: 69). 아래의 뚜라우 씨의 사례를 참조하면, 그는 귀환하여 20여 년 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지만, 동시에 망명의 시간을 견디는 동안 가정에서 자신의 자리가 지워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가족에 내 자리가 없다"는 충격을 마주해야 했다.

[사례 Ⅴ-7] 뚜라우 인터뷰: 2016년 9월, 미얀마.

가족에서 제 자리가 없어요. 가족이 뭐냐, 하는 질문. 피를 나눈 게 가족이냐, 같이 사는 게 가족이냐? 저도 형, 누나가 있어요. 처음 몇 주간은 환영했어요. 손님이니까. 그런데 곧 모두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전 돌아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싸우고 짜증 내고 행복도 즐거움도 같이 하는 게 가족인데, 20년간 제 자리가 점점 없어진 거예요. 특히 조카들한테는, 제가 없던 사람이니까.

망명 기간 동안 늙어가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귀환의 당위성을 확인했던 그는 귀환하여 형제와 처음 보는 조카들과의 관계에서 핏줄이지만 손님이고, 삼촌이지만 너무나 낯선 사람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귀국(歸國),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과 귀가(歸家),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같지 않다. 때문에 귀환은 귀국 이후, 기존의 관계를 확인하고 재정립하며 새로운 집을 만드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귀국이라는 차원의 귀환을 한 이후에도 적응의 차원에서 귀환 이주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은 이 때문이다.

귀환한 고국에서 새로운 집을 만나는 과정에서는 결혼과 새 가정 꾸리기가 수반된다. 이 연구에서 만난 귀환 난민의 공통점은 한국에서는 미혼이었거나 이혼한 상태였으나, 귀환 후에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중 몇몇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 오래전의 가족을 만나기도 하지만, 오랜 망명 이후 돌아간 고국에서 집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장소를 의미한다. 귀환 난민은 과거의 이주국과 돌아간 고국에서 모두 스스로를

외부자로 느낄 수도 있다(Long & Oxfeld 2004: 5). 따라서 귀환은 국경을 넘어 출신국의 영토에 진입함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집'을 만드는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 귀환은 이전의 관계들을 재정립할 뿐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고 타협하는 실천을 포함한다(ibid.: 13). 이 점은 귀환을 보류하고 한국에서 체류를 연장하는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귀환 후에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다면, 다른 한 편에서는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림으로써 그곳에 '집'을 구성함에 따라 귀환을 보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2절에서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2) 귀환의 선택과 전략

기존 운동의 효과성이나 방향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집의 존재가 귀환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귀환을 바로 결단할 수는 없었다.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정도로 '상당한 박해의 위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귀환 이주에는 별도의 전략이 필요했다. 앞서 살펴본 여러 사례에서도 귀환의 시기와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안전을 위해 각자 전략적으로 귀환을 준비하고 수행하였다. 출신국으로의 귀환 전략을 준비하고 구사하는 이 과정에서는 이주국인 한국에서 불화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귀환 이주에서 가장 전략적인 대응을 보인 것은 뚜라우 씨의 사례이다. 그가 귀환을 결심한 이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은 귀환의 시기이다. 그는 이미 이주와 귀환을 경험한 한국인 활동가 사례를 참조하며, 귀환한다고 해도 자리를 잡는 것은 다른 문제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정부의 사과 없이는 미얀마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때 가서 자리 잡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다. 귀환 이후의 삶을 고려한다면 위험을 감수해야겠다는 전략적 결정이었다.

[사례 Ⅴ-8] 뚜라우 인터뷰: 2016년 9월, 미얀마.

아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 지금 가는 게 위험할 수 있지만, 자리를 먼저 잡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적응이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돈도 없는데. … 위험하지는 않을까? 감옥에 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혹시 위험해도, 88세대 운동권에게 감옥 경험은 중요하니까. 좋은 걸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뚜라우 씨는 2012년부터 귀환을 타진하기 시작하여 2014년 실행에 옮긴다. 대부분의 귀환 난민은 태국 메솟을 경유하는 비공식적인 루트로 귀환을 하는데, 뚜라우 씨는 정식으로 난민 지위를 '반납'하고 주한미얀마대사관을 통해 양곤으로 '공식적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사관에서는 공식적 귀환의 시기에 대한 답변 없이 그저 기다리라는 답변을 할 뿐이었다. 이후 2~3년을 기다렸으나 무응답이 이어지자, 결국 뚜라우 씨는 태국 국경을 통해 미얀마로 들어가는 비공식적 귀환을 시도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공식적 귀환의 첫 사례가 되고자 하였으나, 귀환의 공식적 절차의 부재와 한국과 미얀마 양국의 정책적 비협조로 인해 기존의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반면, 2015년에 귀환한 세인툰 씨는 여러 번의 확인 방문(go-and-see visit)을 토대로 귀환을 결정하였다. 다만 Ⅳ장에서 확인한바, 난민의 지위로 한국에서 미얀마를 직접 방문할 방법은 없기에 태국 국경 지역을 거치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미얀마를 방문해야 했다. 이처럼 수차례의 태국 방문, 그리고 태국 국경지대를 통한 미얀마 방문을 통해 그는 미래의 귀환을 구상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

[사례 Ⅴ-9] 세인툰 인터뷰: 2017년 2월, 미얀마.

(최초 방문 때에) 2005년 7월인가 8월, 비가 많이 올 때, 차 타고 집 앞에 갔었어요. 주소는 같은데, 주변은 다 바뀌어서 구글 지도로 미리 보고 갔어요. 가서는 집 앞에 있다가, 10분 정도 보다가, 인사를 안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요. 내 소식 다 알고. 소문이

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가서 전화했어요. "저 갔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엄마가 많이 울었어요. 왜 안 보고 갔냐고. 시골 가족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 (2차 방문) 그다음에 갔을 때는 밖에서 만났어요. 버고 시내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 (3차 방문) 그때는 동네에 가서 집 가서 사람 다 찾아가고 만났어요. 친구들이, 여자애들은 다 아줌마가 되고, 애 둘씩 달고. 하지만 부모님한테 계속 물어봐야 해, 누가 누구인지.

미얀마에 방문하기 이전에도 세인툰 씨는 태국 메솟에 방문하여, 미얀마의 상황을 타진하였다. 카렌족 연합(KNU; Karen National Union), 전(全)버마학생운동전선, NLD-LA 본부 등 국경 지대에 있는 여러 단체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상황을 살피면서 미얀마로의 확인 방문을 시도한 것이다. 여러 차례의 확인 방문을 통해 세인툰 씨는 고향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이후의 삶을 구상하며 안전하고 순탄한 귀환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확인 방문의 전략은 한국에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태국과 미얀마 방문 후 돌아오던 세인툰 씨는 NLD-LA 한국 지부로부터 제명 메일을 받는다. 미얀마에 불법으로 들어갔다는 이유였다. NLD-LA 한국 지부에서는 아직 미얀마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귀환을 할 수 없으므로, '몰래' 들어가면 NLD 본부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당 차원에서 귀환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NLD에서의 집단 면담과 이후의 개인 면담을 통해 연구자가 여러 차례 확인한 사항이다. 혹여나 군부에 조사를 받게 될 때 'NLD-LA'의 당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미얀마 국내 활동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조국으로의 귀환은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버마 민주화를 위해 함께 운동하였지만, 오랜 망명 생활 동안 각자가 상상해온 귀환(imagined return)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인툰 씨의 경우처럼 "합법적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안 된다면, '공식적 귀환'의 규칙을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귀환하지 않은 이들의 "우리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우리는 존엄한 귀환을 하고 싶다"의 주장과 충돌한다.

[사례 Ⅴ-10] 세인툰 인터뷰: 2017년 2월, 미얀마.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길은 잘못된 것인가? 불법적으로 미얀마 들어가는 것은 수지 여사님의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지. 합법적으로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 합법적으로 들어오려는데 안 되잖아. 그게 안 된다면 그걸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

마지막으로 나잉 씨와 마우툰 씨의 귀환 사례를 보면, 2007년은 미얀마 사회가 대단히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귀환에 각고의 주의와 전략이 필요했다. 2007년은 여전히 군부 정권이 득세하던 시기로, 상식적으로 귀환에 "적합한 때"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뇌물, 시간 여백을 통한 과거의 세탁, 단체활동의 지양과 같은 전략을 통해 안전한 귀환을 준비했다.

나잉 씨와 마우툰 씨는 일종의 전략적 과거 세탁을 시도했다. 귀환을 결정하고 두 사람은 2006년 말 NLD를 탈퇴한다. 그리고 4개월 정도 일도, 활동도 안 하고 집에 지내면서 한국 활동에서 자신의 존재를 서서히 지워갔다. 조용히 지내며 당국에 보고될 여지를 줄이면서, 동시에 본국의 상황을 살피며 군부 내부에 세력 다툼이 난 틈을 타 귀환을 실행에 옮겼다.

양곤으로의 직접 귀환을 시도하는 만큼, 입국 단계의 보안이 중요했다. 민주화 운동을 한 이력과 그가 한국에서 가져가려는 물품과 자료 때문에 비공식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잉 씨는 부모님을 통해 미리 양곤공항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뇌물을 썼다. 그는 공항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서 심사를 받던 그 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활동 이력으로 입국 후 바로 투옥된 사례를 들어왔기에, 위험을 안고 귀환을 감행한 것이다.

돌아와서도 정치적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단체 활동을 멀리했다. 가족에게 정치 활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단체 활동은 하지 않았다. 귀환의 결정과 수행, 그리고 이후 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촘촘히 진행하기보다는, 사이사이에 충분한 여백을 두었다. 이는 그에게 심리적으로도 필요한 여백이었겠지만, 불확실한 귀환의 안전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3) 귀환자의 초국적 실천

상상해온 귀환을 감행한다고 해도, 귀환으로 이주가 종료되지 않는다. 일련의 이주와 귀환의 과정을 통해 귀환 난민이 이주국과 맺어온 관계는 유효하며 이주국에서의 변화를 여전히 그가 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귀환자의 새로운 역할, 초국적 실천에 주목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때의 초국적 실천은 귀환 난민의 전략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난민과 귀환을 설명할 때에 식물의 비유를 쓰거나(뿌리뽑힘(uprooted), 장소 바꿈(displaced), 이식(transplanted) 등)(Hammond 1999: 232), 귀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재통합', '재건' 등 접두사 '재-'로 시작되는 단어를 귀환의 목표로 둔다. 그러나 귀환은 과거의 특정 자리로의 돌아가는 방식으로 경험되지 않는다. 오랜 망명의 시간으로 이미 많은 변화를 거쳤거니와, 귀환 난민은 귀환 이후의 삶을 전략적으로 세워간다. 오랜 한국 생활은 이들이 미얀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이 되며, 이 자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이 연구에서 만났던 귀환 난민은 난민 지위를 두고 본국으로 귀환하였으나 한국을 완전히 등지지는 않았다. 귀환 난민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예외 없이 활발하게 한국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주로 협력의 관계로 나타났으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한국에서 정치적 난민이자 이주노동자로 지냈던 과거를 통해 이들은 한국을 새로이 조망하기도 했고, 이제는 난민도 노동자도 아닌 "미얀마인"으로서 한국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과거 한국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대학부설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웠던 나잉 씨는 현재 양곤에서 한국어 학원을 운영한다. 자원봉사로서 NLD 아카데미에서 한국어 강의도 하였고, 한국 사회에서 배운 자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NLD 아카데미는 나잉 씨와 같이 해외 망명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를 미얀마인에게 가르치는 곳으로, 망명자의 이주 유산을 교류하는 장이 된다.

마웅텟 씨 역시 한국과의 연결을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미

얀마 진출을 돕는 과정에서 귀환하게 된 그는 이후에도 한국 기업과 거래하면서 해외 진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자산과 한국 기업의 필요를 잘 파악하고 있다. 자신은 한국에서 "좀 놀아봤기에" 한국인을 가깝게 경험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미얀마 출신으로 미얀마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기에, 비단 소통하는 언어를 통역할 뿐 아니라 문화를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 진출에 있어 기업이 가진 필요가 바로 그 점이라는 것을 그는 이해하고 있다.

뚜라우 씨의 사례는 한국과의 협력 아래 귀환 후의 삶을 꾸려가는 여정을 나타낸다. 전술하였다시피 한국에 NGO를 세우고 해당 기관의 양곤 사무소를 설치하여 귀환한 그는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속에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재정은 대부분이 한국에서 충당되며, 그래서 NGO가 발간하는 어린이 동화책은 버마어로 출판되지만 NGO의 소식을 담은 자료는 대개 한글로 발간된다. 2016년 한국의 촛불 시위에도 버마 민주화 운동가로서 여전한 지지를 보내는 그의 삶은 한국과 미얀마를 걸쳐서 혹은 그 위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뚜라우 씨의 귀환은 한국의 언론과 지자체, 시민사회로부터 대단한 주목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의 귀환은 미얀마인의 귀환이기도 했지만, 그가 교육을 받고 관계를 맺은 한국 시민사회의 사회적 송출이었기 때문이다. 뚜라우 씨가 오랜 한국 생활을 통해 시민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NGO를 설립하기에 이르는 과정은 한국 시민사회의 인큐베이팅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를 미얀마로 '보낸' 것은 NGO를 통해 한국에서 학습하고 경험한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전달하는 채널로서 보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뚜라우 씨는 귀환을 통해 한국에서 배운 사회문화적 개념을 본국으로 가져간다는 점에서 사회적 송출의 행위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가 미얀마를 향해 송출한 결과물 자체로 볼 수 있겠다.

이주노동자의 귀환은 이들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채수홍(2007)은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귀환 사례를 통해 귀환 이주노동자가 경제적 유인에 따라 한국 재입국을 시도하거나 혹은 한국에서 형성한 관계와 경험을 활용하고자 하나 이러한 시도가 좌절되고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채수홍 2007: 32). 연

구자가 미얀마 현지 조사에서 만났던 귀환 이주노동자들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들은 미얀마로 귀환한 이후 한국으로 재입국하는 방안을 통해 이주 노동의 경제적 이점을 활용하는 데 집중하거나, 한국에서 익힌 언어 자원(한국어)을 통해 미얀마에서 활로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미얀마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등 성공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국으로의 송금은 이미 이주민 당사자가 귀환하기 이전에 대부분 소비되므로, 준비되지 않은 귀환은 경제적으로도, 또한 정서적으로도 고단함을 안긴다. 때문에 한국에서 이주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로부터 소외를 겪는다면, 귀환 후에는 이주 기간 동안 소원해진 가족 안에서 "언제 다시 나가나" 쳐다보는 시선을 받으며, 가족과 사회로부터 또 다른 소외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29]

한국에서 이주 노동을 하며 겪은 부정적인 경험이 귀환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도리어 한국에 대한 비판적이고 경계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다. 연구자는 마웅텟 씨의 소개로 귀환한 이주노동자의 모임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 이주 노동을 하다가 귀환한 이들이 조직 중인 이 모임은 이제는 귀환 후 '바뀐 입장'에서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사람의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모임이다. "한국에서도 당하다가 왔는데", "그곳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왔는데" 그 한국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미얀마인을 괴롭히게 둘 수 없다는 것이 모임의 취지였다. 이들은 한국의 각종 접대 문화와 노동 착취가 미얀마에 도입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같은 이주민의 귀환이라도 정치적 난민의 귀환은 한국에서 경험하며 갖춘 자원을 활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때문에 한국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물론 정치적 난민도 노동에 종사하였으나,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에 전념하였던 여타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버마 민주화 운동을 통해 한국의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일부는 추가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사회에서 풍부한 경험과 인맥을 쌓을 수 있었다. 때문에 한국 이주 경험의 기간과 별도로, 풍성한 한국 경험과 그 경험에 따른

29) 시민활동가 B와의 면담(한국, 2016년 12월).

자산을 가지고 있기에, 귀환 전후의 행보에서도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 난민이 귀환하여서도 경험하는 초국적 맥락에서 나잉 씨처럼 다시 한국을 방문할 것을 꿈꾸는 이도 있었다. 그는 한국에 곧 재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싶은 의지를 보였다. 한국에서 쌓아온 경험이 미얀마에서 가지는 가치를 확인하면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와야겠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다만, "노동자로는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힘들고 외로웠던 경험들이 많아, 이제 방문한다면 "미얀마인으로서 당당하게" 들어가 걱정 없이 관광하고 싶다고 했다. NLD에서도 가장 먼저 귀환을 감행했던 나잉 씨에게 있어, 한국은 이제 또 다른 귀환을 상상하게 하는 향수이자 그 전략적 가치를 확인한 과거의 이주지인 것이다.

본 소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LD 출신이 귀환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인에는 한국에서의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와 회의가 있다. 이들의 한국 생활의 중심에 민주화 운동가로서의 활동이 있었기에, NLD에서의 불화는 한국 이주에 대한 회의와 성찰로 이어졌다. 반면, 버마행동 한국 출신의 귀환은 한국에서의 활동에 대한 회의를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그 활동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 교육에 집중함으로써 이미 귀환 가능성을 품은 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버마행동 한국 구성원의 귀환은 탈퇴를 필요로 하거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NLD 출신이든 버마행동 한국이든, 귀환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모두 달랐다. 이는 정치적 난민 이후의 삶에 대한 구상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개인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민의 자리로, 아동 교육을 통해 미얀마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민 활동가의 자리로, 어느새 많이 늙은 부모님과 가족 곁으로 돌아가는 미얀마인의 자리로, 혹은 사업가의 자리로 이동해간 것이다.

2. 보류된 귀환, 연장된 망명

1) 귀환 보류의 이유

이르면 2007년부터 귀환의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NLD 한국 지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아직 미얀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화 운동은 집단으로 수행하였으나, 귀환은 개인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지며 아직 조직 차원에서는 귀환에 관한 어떠한 권고나 지원도 제공하지 않는다. 미얀마로의 비공식적인 방문을 일삼다가 당에서 제명된 사례까지 있으니, 이 귀환 금지는 전혀 유연한 규정이 아니다. 때문에 버마행동 한국에서는 정주와 귀환의 선택이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NLD에서는 귀환한 사례는 모두 탈퇴의 과정을 거쳤다.

NLD의 귀환 보류 결정은 버마 민주화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근거한다. 작년 11월의 총선이 역사적인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버마 민주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은 근거가 없지 않다. 2008년에 수정된 헌법으로 국회 의석의 1/4은 군부에게 고정 할당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평가는 양면적이다.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있는 이행모델"(박은홍 2016)로 해석되기도 하고, 긍정적인 정치발전을 기대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장준영 2016). 신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주화를 중요한 과제로 내걸고 있으나, 이는 한 번의 선거 승리로 얻은 5년에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군부의 독자적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상존한다. 그래서 다음 선거인 2020년 총선이 "또 다른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있다(ibid.: 251). NLD의 현 목표는"또 다른 갈림길"로 예상되는 2020년에 있을 총선에서도 승리하여 안정적인 정국을 이루는 것이다.

연구자가 미얀마 현지조사를 통해 만난 활동가들 역시 "민주화는 아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30] 군부 중심으로 개정된 2008년 헌법[31]이 유효한 이

30) 연구자는 국내의 상황을 함께 살피기 위해, 미얀마 국내에서 여러 NGO 및 정치 조직과 인사를 방문한 바 있다. 〈표 2〉 참조.

상, NLD가 중심이 되어 정부를 구성했음에도 여전히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생 운동가들이 세운 새사회민주당(DPNS, Democratic Party for a New Society)의 린카잉 씨는 "우리는 막 시작했을 뿐, 아직 전환기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단한다.[32] 현재 미얀마에는 2개의 정부, 즉 기존 세력을 유지하는 군부와 선거로 선출된 아웅산수지의 정부가 공존하므로, 과거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으나 막연한 낙관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미얀마는 이제 변화의 시작 단계에 있으므로, 해외에서 망명 활동가가 수행할 역할 역시 유효하다. NLD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아웅산수지 국가 고문이 "여전히 해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주요한 근거로 역설했다.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면 누가 지원할 것이며, 누가 외부에서 감시할 것인가?' 변화의 시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NLD의 역할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 점에서 NLD-LA는 2016년 10월, 본국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사명이 있으므로 조직의 이름을 바꾸어 위치의 재설정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이름은 미얀마 내부의 NLD와 구별하고자 해외의 자유지역(liberated area)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정치적 난민들은 스스로를 NLD의 구성원으로 여겼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NLD-LA는 별도의 조직이지 NLD에 속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NLD 정부가 세워진 이후, 미얀마 이외를 자유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협력위원회(Organizing Committee, 이하 OC)로 변경하고, 이제는 독립 조직이 아니라 NLD의 하위 조직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NLD-LA 한국지부가 아니라 'NLD 협력위원회(국제) 한국(NLD-OC (International) Korea, 이하 NLD-OC 한국)'이 된 것이다. 조직이 NLD 본부에 포섭된다는 것은 장래의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나, 이러한 개명은 앞서 구성원들이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한 사명'이 있음을 예시한다.

미얀마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 NLD의 귀환 보류 결정 이외에, 두 번째로 각 개인이 귀환을 보류하는 다른 요인은 귀환의 방식 문제이다.

---

31) 2008년 나르기스 헌법의 내용과 개정 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는 다음을 참조. 대한변호사협회, "2008 미얀마 헌법에 대한 대한변협 의견서", 2014년 4월 30일.

32) 2017년 2월 20일 인터뷰(미얀마 양곤 DPNS 당사).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귀환은 민주화 운동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문제였다. ‘그날이 오면’ 민주화된 조국에 돌아가리라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었다. 모두가 “돌아가고 싶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랜 시간 상상해온 귀환이 과연 지금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다. 대부분의 귀환 난민은 ‘공식적으로’ 양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지 못한다. 대부분이 태국을 통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미얀마에 들어간다. 태국에 입국한 후, 국경지대를 통해 미얀마로 들어간다. NLD에서는 이러한 귀환이 나름대로 고생하며 민주화 운동을 해온 우리에게 합당한 귀환인지 질문하는 것이다. 그런 귀환은 우리가 상상하던 “존엄한 귀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앞선 귀환 난민에게 중요했던 것은 귀환의 방식이 아니라, 귀환의 이유이고 귀환의 시기였다. 그러나 귀환을 보류한 이들은 오랫동안 구성해온 귀환이 과연 이것인가 하는 질문에 직면한다. 이들이 20여 년 동안 상상해온 귀환은 결코 심리・실존적으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귀환이 가능해진 현실 속에서 이들이 그간 꿈꿔온 방식의 귀환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뒤에 귀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미얀마로 확인 방문(go-and-see visit)이 불가능한 상황은 귀환을 계획하기조차 어렵게 한다. 물론 앞서 귀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차례의 확인 방문을 통해 귀환의 가능성을 타진해본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확인 방문을 한 뒤에 귀환한 사례는 태국의 국경을 넘은 비공식적 이주였다. 정치적 난민은 많은 경우 비공식적 이주를 통한 귀환에 대해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며, 안전하지 못하다고 평가한다.

[사례 Ⅴ-11] 진카인 진술: 2017년 4월, 한국.
- NLD의 회의 참여관찰 상황: 회의에 방문한 한국인 활동가와 태국을 통한 비공식적 귀환에 관해 대화 중에.

그렇게(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가도 되는 거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 운동하다가, 어렵게 피해 다니다가 이렇게 왔는데. 다시 들어가서 그 생활 할 수 없어요. 위험해요. 태국으로 가면 되는 거 알지만 그럴 수 없어요. (최근) 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선생님들과 같이 가고 싶어요.

귀환은 단숨에 성취하거나 종료되는 사건이 아니다. 앞선 귀환 사례에서 귀환 이후에도 이주의 과정이 종료되지 않음을 확인한 바와 같이, 귀환을 감행하기 이전에 귀환은 준비되어야 한다. 이때 잠정적 귀환은 정체성, 집과 소속에 대한 느낌을 재협상하는 단계로서 기능한다(Braakman & Schlenkhoff 2007: 18). 더구나 평균 20여 년을 고향에 가 본 적이 없고, 한국에서 사는 동안에 교육을 받은 사례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은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기보다 공장 노동에 종사하며 운동을 해왔다. 돌아간 후에는 그리던 고국이라도 생존의 문제에 다시 직면하게 한다. 따라서 귀환을 결정한다 한들 귀환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나, 현재 한국의 미얀마 정치 난민이 마주한 어려움은 귀환하고자 한다면 단번에 미얀마로, 그리고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례 Ⅴ-12] 시민활동가 B 인터뷰: 2016년 12월, 한국.

난민 그룹에게 미얀마는 그간 갈 수 없는 나라였죠. 내심 속상하죠. 20년 있었는데… 자기 계획을 갖지 못하고 늙어가는구나. 본인들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일 거예요. 이제는 조금씩 오가고 있지만. … 고향, 가족 그리운 거… 처음엔 상상도 안 되다가, 처음에 가면, 그걸 경험해보면… 끈을 만들죠. 거기서 일을 만들어 내고. 결국, 난민 정책의 끝이 뭐겠어요, 행복한 귀환? 자기 사회를 원하는 만큼 방문해서 끈을 만들고 그 끈을 잡아야 가죠.

세 번째로, 버마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정치적 난민이 미얀마로의 귀환을 보류하는 요인으로는 오랜 정주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 평균적으로 20여 년을 한국에서 지내면서 적지 않은 정치적 난민이 가정을 꾸렸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이후에는 비록 지금이 귀환할 시기라는 판단에 이른다 하여도 귀환은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이곳 역시 "나의 집"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정을 이루면서 귀환과는 별개로 단체를 탈퇴하는 경우

도 종종 있다. 이들은 이제 이주 노동 외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에 쏟던 “총각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 활동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한다.

[사례 Ⅴ-13] 쩌르윈 인터뷰: 2017년 1월, 한국.

(NLD에서) 2013년에 탈퇴했어요. 가족들이 있어서, 시위에 참여하기가 힘든 상태가 됐어요.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와이프에, 아이도 태어나니까. 돈도 한 푼도 없고… 먹고 살기는 해줘야 하니까요. 주말에는 애도 봐줘야 하고. … 민주화 변화가 시작되고, 이 정도면 됐다. 나도 가정이 있으니까, 가정을 키워보자. … 제가 총각이면 갈 수 있어요. OO도, OO도 혼자였잖아요. OO, OO도. 혼자는 가기가 쉬워요. 나도 당장 (미얀마로) 가고 싶어요.

쩌르윈 씨의 상황에서는 “지금이 버마에 들어가기 좋을 때”라고 진단하면서도,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동시에 “한국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살기가 힘들어요.” 등의 복잡한 생각이 교차할 수밖에 없다. 쩌르윈 씨는 자신이 열정적으로 버마 민주화 운동을 했기에 누구보다 귀환을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대외협력의 역할을 맡아 한국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도 태어났다. 그래서 뒤에 두고 떠나고자 했던 그 집도 이제 그에게는 집이다. 장기거주자의 이러한 딜레마가 귀환을 보류하게 한다.

한국에서 낳은 자녀가 자라날수록 정주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진다. 아웅민쩌 씨는 1992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25년째를 맞았다. 미얀마에서 태어나 살았던 시간보다 한국에서 더 오랜 시간을 살았다. 이제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삶을 꾸렸을 뿐 아니라, 부모님의 소개로 미얀마 여성과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도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상상해온 귀환과 오늘날의 현실을 견주며 살고 있다.

[사례 Ⅴ-14] 아웅민쩌 진술: 2016년 10월, 한국.

아마 귀환을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해야 할 거예요. 저희 애는 미얀마 못 가요. 교육도 그렇고, 얘는 미얀마가 싫대요. 모기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 왔다 갔다 하든지 해야 해요.

NLD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초창기 멤버로서 그가 상상한 귀환은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정주해온 25년의 생활의 무게는 그로 하여금 타국에서의 생활을 그저 훌훌 털고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자녀를 고려하면 그에게 귀환은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된다. 미얀마 부모 아래에 태어났지만, 미얀마를 경험해본 적 없는 자녀는 Ⅳ장에서 분석했듯 한국 사회에서 법적·행정적으로 주변성을 경험한다. 그러나 망명의 서사에서 귀환을 상상하는 부모와 달리, 이주국에서 태어난 이주자의 자녀가 자신의 뿌리(roots)와 여정(routes)을 결합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Braakman & Schlenkhoff 2007: 15).

그 역시도 이제 미얀마가 낯설다. 막걸리를 즐겨 마시고, 한국식으로 집을 꾸며 살아가는 삶의 익숙함은 귀환을 쉬이 계획할 수 없게 만든다. 20세 전후에 한국에 혈혈단신 들어와, 안정된 직장을 찾고, 공동체를 이루며, 가정을 이루는 일련의 과정은 연장된 망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가 성장하면서 집을 만들어간 과정이기 때문이다. 귀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귀환한다면 이곳에서처럼 다시 "떠났던 그곳에서 또 다른 장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Stake 1996: 199, Long & Oxfeld 2004: 13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는 귀환을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귀환이 '불가능'하게 된 사례를 부연하고자 한다.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 중 일부는 한국에서 장기간 노동하고 체류하면서 여러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질병으로 노동할 수 없게 되어, 한국의 지자체나 동료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귀환한다면, 미얀마의 열악한 의료 체계와 기술 문제로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 명백하다. 얼마나 귀환을 꿈꿔왔고 정치적으로도 강경한 노선을 고집해 왔는지와 별도의 문제로, 이들의 몸이 길어진 망명의 시간을 버티지 못한 것이다.

어떤 이는 장기화된 망명 생활 중에 사망하기도 한다. 2015년, 한국에서 사망한 고(故) 내툰나잉 씨의 경우이다. NLD의 설립 멤버이자 당시 회장으로서 내툰나잉 씨는 한국과 미얀마에 열정적으로 버마 민주화를 알려왔으며, 총선 이후 귀환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한국 사회와 연대하며 운동하였던 인물이었기에, 그의 죽음은 언론과 시민사회의 애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연합뉴스 2015년 9월 5일; 한겨레21 2015년 9월 16일 등). 부천 석왕사에서 치러진 그의 장례는 NLD뿐 아니라 석왕사 주지 스님, 성공회대 교수, 정치로 연대했던 국회의원과 시민활동가, 난민 심사를 도운 변호사를 아우르는 사회장 장례위원회 주도로 치러졌다. 그간의 연대와 협력 관계를 기리는 장례식이었다. 아직도 NLD 사무실의 한쪽에는 그의 방에 있었던, 한국 사회와 버마 사회의 민주화를 공부했던 책이 쌓여있다. 그의 영향력은 여전하여, 연구자는 그가 죽은 이후에 연구를 시작했으나, 현장 연구를 진행하는 내내 그의 그림자와 함께 하는 듯했다.

살펴본바 한국에 체류하며 귀환을 보류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NLD 단체의 입장으로서 여전히 망명 정치의 사명이 있다는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공식적 귀환과 확인 방문이 불가능한 상황, 오랜 정주의 영향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질병과 죽음으로 인해 귀환이 불가능해진 사례 역시 존재함을 살펴보았다.

2) 남은 자의 새로운 역할

2015년 총선으로 NLD가 집권당이 된 이래, NLD-OC 한국 지부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다. 많을 때는 매주, 매일 열렸던 시위가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회원 수가 많을 때는 60명에 육박했으나, 어느 시기부터는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지 않고 도리어 탈퇴가 이어져, 이제는 12명의 회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버마 민주화라는 기치, 그리고 민주화 운동가 혹은 정치적 난민으로서의 역할이 가지는 긴급성과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NLD의 활동은 내부 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 달에 1~2회 일요일에 모여 본부의 지침을 공유하고, 모은 회비로 지원하는 구호의 내용을 전달하고, 미얀마의 최근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본부와 OC 지부 간의 소통은 여전하지만, 운동 전반의 역동성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

반면 주한미얀마대사관과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미얀마대사관은 오랫동안 버마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이에게 적이나 다름없었다. 미얀마 국기를 태우고, 군부 수장의 사진을 발로 밟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구호를 외치던 시위는 주로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이루어졌다. 미얀마대사관에 의해 이들의 사진과 신상명세는 본국과 공유되었으며, 그것이 박해의 위험을, 난민의 근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NLD 정부가 들어선 후, 더는 한국에서 미얀마대사관이 상징하는 미얀마 정부를 반대할 이유가 사라졌다. 여전한 긴장은 있으나 미얀마대사관 역시 NLD-OC 한국 지부를 우호적으로 대하게 되었다. 이제 NLD는 미얀마 대사와 함께 각종 미얀마 이주민 행사에 VIP로 참석하여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다.

게다가 신정부 출범 이후 교류가 급증하면서, NLD는 한국에서 비공식적 민간 대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NLD 출신의 관료가 정부에 많아진 데다, 미얀마의 경제 개방과 경제 협력을 위해 방한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방한 일정은 NLD 한국의 임원과 공유되어,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시위로 바빴던 임원은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미얀마 인사와의 만남으로 분주하다. 최근의 주목할 사례로는 2017년 5월, 미얀마의 학생 운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민코나잉(Min Ko Naing)의 방한이 있었다. 미얀마의 정치적 변화 없이는 어려웠을 그의 내한 행사에서 NLD와 버마행동 한국 출신의 정치적 난민은 일정 내내 동행을 담당했다. 이처럼 오랜 한국 생활로 한국을 이해하고, 또 미얀마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정치적 난민은 한국에 체류하면서도 미얀마와 한국을 잇는 민간 대사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받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와의 관계도 새로이 설정되고 있다. 2000년대에는 버마의 민주화를 주제로 한국 시민사회의 조력을 얻었다면, 이제는 NLD를 중심으로 정치적 난민의 새로운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에는

2016년 말에 미얀마의 라카잉 주(Rakhine state)에서 일어난 로힝쟈 족 인권 침해 문제를 주제로 NLD와 한국의 미얀마 및 인권 관련 시민 단체 간에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미얀마의 역사와 함께 미얀마 내에서의 쟁점을 설명하면서, NLD 정부의 시각을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NLD와 시민사회 단체와의 달라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사례 Ⅴ-15] 참여관찰 사례: 2017년 5월 21일, NLD 사무실.

미얀마 로힝쟈족 인권 침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NLD를 찾아왔다. 미얀마의 시각, NLD 정부의 관점을 소개해달라는 것이었다. 한국인 활동가의 질문과 서로의 토론이 오가는 시간이었다. (중략) 마지막에는 대화를 마치고 최근의 소회와 서로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다.

르윈망망: 예전에는 군부 정권 때문에 NLD가 힘든 일이 있으면 여기(한국 시민사회)를 거쳐서 요청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지 여사님 당(NLD)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여기를 거치지 않아도 미얀마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활동을 오픈 마인드로 할 수 있습니다. NLD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수지 여사님을 지지하며 활동하고 있으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중략)

시민활동가: 저는 (NLD 사무실에 붙어있는 예전의) 사진 보니까, 예전 대사관 앞에서 함께, 2008년에 시위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이제 바뀌었잖아요. 당시에는 우리가 같이 군사정권에 대해 싸웠다면, 지금은 선거를 통해서 NLD에서 국회를 책임지시니까.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략) 일단 오랜만에 봐서 반갑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해체된 버마행동 한국과 달리, NLD로서는 다음 역할이 무엇인지를 자문해야 하는 때이다. 난민성을 자각하고 난민성을 중심으로 갈등하거나, 맹렬하게 버마 민주화를 외치던 시대는 지나갔다. 누군가는

NLD 한국 지부를 해체해야 마땅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20여 년 동안 축적된 한국 사회와의 관계,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미얀마 사회에 대한 여전한 관심과 운동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역할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33]

[사례 Ⅴ-16] 마웅텟 인터뷰: 2017년 2월, 미얀마.

이제는 주제를 바꿔야 해요. 이제 NLD가 여당이니까, 야당 역할이 아니라 여당 역할로. 미얀마공동체와 손을 잡고, 미얀마 이주노동자 위해서 일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어지려면. 저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한국에 있는 노동자와 유니티(unity, 연합) 안 되는데, 민주화할 수 있겠어요? 미얀마 사람들 돌봐주고 관리하면서…

또한 개인의 수준에서는 미얀마로 귀환하기보다 한국으로 귀화하여 한국에 남는 것 또한 오랜 정주 끝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NLD의 초창기 멤버였으나 2012년에 탈퇴하고, 한국에 있는 미얀마 소수민족인 카렌족 연합에서 일했던 진민 씨는 귀화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했다. 귀환 결정은 97년에 한국에 들어온 후 20여 년을 지내면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어 내린 것이었다.

[사례 Ⅴ-17] 진민 인터뷰: 2017년 1월, 한국.

미얀마 가서도 부모님 밖에 없고, 돈 때문이 아니라, 부인이 한국인이잖아요. 둘이 재밌게 살라고… 미얀마에 언제까지 삥 둘러서 가야해요? … 귀화하면 미얀마에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 민주화 운동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오디너리 피플(ordinary people),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33) 이점에서 한국의 해외 민주화 운동은 미얀마의 상황과 유사하여 참조할 가치가 있다. 해방 이후 해외의 이주민이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의 행보를 우려하며 활동한 것이 초기 단계라면, 1980년 광주 항쟁 이후 민주화 운동은 대중화되어 통일운동으로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민주화가 이행되어감에 따라 해외의 운동은 정체성을 잃고 소강 상태에 들어가거나, 현지의 한국인 이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운동으로 변화해갔다(조현옥 2005).

진민 씨는 민주화가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얀마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개탄한다. 오히려 한국인으로 국적을 바꾸는 것이 그에게는 미얀마 방문을 위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다. 미얀마 국적을 버리고 "미얀마도 내 나라지만, 이제는 한국이 내 나라."라고 하는 진민 씨는 버마 민주화 운동을 하는 정치적 난민을 넘어서 한국에 집을 둔 '한국 사람'이 되어간다.

개개인이 모국과 맺는 관계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국경을 넘어 난민이 되는 경험은 문화와 역사가 박탈되고, 탈영토화되는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다(Hammond 1999: 232). 진민 씨의 사례에서도 그의 귀화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한국의 미얀마 이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미얀마 식당을 운영하고 한국의 미얀마 이주민을 조력하며, 그는 미얀마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으로서 삶을 구축해간다. 국가와의 관계는 변화하고, 새로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빚어진다(ibid.).

3) 귀환과 망명 사이에서

귀환은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결정이다. 귀환의 결정은 난민의 현재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상황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귀환 혹은 정주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난민의 삶을 측정할 수 없다(Omata 2013: 1293-1294). 이 연구에서 살펴본 미얀마 정치 난민의 여정도 그러하다. 연구의 시점상 불가피하게 귀환을 한 사례와 망명 생활을 지속하는 사례를 나눌 수밖에 없었으나, 어디까지나 현재 시점의 관찰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어떤 결정이든 그 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의 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마지막으로 귀환과 망명 사이의 실천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비공식적이고 잠정적인 귀환과 두 번째로 귀의(歸依)로서의 귀환을 준비하는 사례가 그것이다. 이들은 본국으로의 귀환을 감행한 것은 아니나, 한국 사회에서의 정주를 선택한 것도 아니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귀환과 망명 '사이'의 실천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 과정과 실천 양태를 살피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비공식적이고 잠정적인 귀환을 실천하는 사례이다. ‘우리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미얀마에 들어갈 수 있는가’는 한국에 사는 미얀마 출신 정치적 난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난민 지위로 소지한 여행증명서 이외에는 대부분 미얀마 여권은 만료된 지 오래고, 여행증명서로 미얀마를 방문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재한미얀마대사관에서는 그 비자가 제공되지 않는다. 미얀마 여권을 새로 만들고자 하면 터무니없이 비싼 세금(해외체류세)을 지불해야 하며, 여권을 만들어도 본국의 박해 가능성으로 난민이 된 이들이 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NLD-OC를 포함하여 해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입국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치적 난민이면서 동시에 잠정적인 귀환을 시도하고 있는 몇몇 사례가 있다.

쩌카웅 씨의 사례는 태국 국경을 통한 비공식적 귀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이다. 버마행동 한국의 출신인 쩌카웅 씨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미얀마의 상황을 살피고 이후의 생활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최근 미얀마로 귀환한 이주노동자 친구들과 미얀마에 한국어학원을 열었다. 운영은 현지에 지내는 친구가 주로 하나, 그는 재정을 챙기고 이따금 방문하여 학원 경영을 살핀다. 한국과 미얀마 양쪽에 사업체를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얀마에서의 사업 시작에도, 쩌카웅 씨가 당장 귀환을 계획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그는 한국에서 일과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비공식적인 방문으로 미얀마의 변화하는 상황을 충분히 살피면서, 두 나라를 오가는 사업가가 될지 혹은 미얀마에 자리를 마련하고 귀환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반면 카웅진 씨의 사례는 귀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쩌카웅 씨와 마찬가지로 미얀마와 한국을 오가고 있는 그는 정치적 난민이며 버마행동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한국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한국에서 일하며, 한국인의 미얀마 방문에 통역으로 동행하는 등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 그는 최근 양곤 공항을 통해 미얀마 방문에 성공했다. 주한미얀마대사관을 통해 (세금을 지불하고) 발급받은 여권과 난민 여행증명서를 함께 이용하여, 미얀마인과 난민 지위를 넘나들며 미얀마를 다녀온 것이다.

여기에는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협조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른 것도 아니다. 게다가 개인 역량의 요소가 있으므로, 이 방문의 방식을 일반화된 지침으로 유통하기에는 위험이 있다. 다만 잠정적 귀환의 방식을 태국 국경지대가 아닌 공식적 출입국 항을 통해 시도하고 성공한 사례는 그 자체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적어도 귀국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귀환인가'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 대사관과 당국의 협조 아래, 남은 이들에게 방문이라는 선택지가 생긴다면 전술한 정주의 사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쩌카웅 씨와 카웅진 씨의 한국과 미얀마를 오가는 실천은 그저 귀환이라고도, 혹은 한국에서의 체류를 결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굳이 명명하자면, 잠정적 귀환이자 모호한 귀환(ambivalent return)이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례는 잠정적이고 모호한 귀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출입국 경로가 비공식적인 국경 지역을 통하는지, 양곤을 통한 공식적인 출입국을 실천하는지의 차이가 있다. 이들은 모호한 귀환을 감행하는 과정을 지나, 앞서 살펴본 마웅텟 씨의 사례처럼, 잠정적 귀환을 통해 미얀마 정착을 결정지을 수도, 반대로 지금까지 그래왔듯 한국에 머물며 방문을 하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그리고 비공식적 출입국을 반복할 경우의 위험은 있으나, 두 나라를 오가며 사업을 진행하고 삶을 영위하는 초이주자(transmigrant)로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초이주자'란 국경을 넘어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상호연결에 따라 매일을 살아가며, 하나 이상의 국민국가와의 연관 속에 공적 정체성이 구성되는 이주자를 이른다(Glick Schiller et al. 1995: 98). Ⅳ장에서 살펴보았듯, 미얀마 출신 정치적 난민의 경계적 상태가 강화되었던 환경에는 모국을 방문하며 재이주를 고민할 수 있는 정책과 공간의 부재가 있다. 때문에 비공식적 이주를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귀환은 단번에 이루어져야 했다. 비공식적 귀환 혹은 한국 체류라는 일종의 이분법이 강요된 것이다. 그러나 위의 두 사례에서는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잠정적인 귀환(혹은 확인 방문)을 수행하며, 앞으로의 삶을 상상하고 구상할 여유를 가진다. 따라서 이미 뿌리를 깊이 내린 이주국과 모국을 유연하게 오가는 초이주자로서의 실천 역시 기대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의 실천은 더 이상 난민도, 미얀마인도, 한국인도 아닌 '초이주자'의 실천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종교적인 지향을 가지고 귀환을 구성하는 아웅툰 씨의 사례이다. 아웅툰 씨의 경우 이 연구가 수행되던 중 한국을 떠나 미국에 이주하였다. 그러나 그는 지속되는 이주의 여정을 통해 귀의로서의 귀환을 구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중간 단계로서의 미국행은 그가 가진 경계적 상태의 창조적인 활용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 연구를 진행하던 2016년 가을, NLD에서 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아웅툰 씨는 미국으로 간다고 했다. 그의 미국행은 미얀마로의 귀환이 아니고, 한국에서의 정착도 아니며, 더군다나 미국에 재정착하고자 함도 아니라 했다. 그의 미국행은 법적으로는 가족 초청이지만, 그의 언어를 빌리자면 "결국 돌아가는 길"에 들르는 제3국으로의 이주 사례였다. 그의 최종 목적은 귀의(歸依)이고 수양이다. 따라서 그가 구상하는 귀환은 미얀마를 향하기보다, 종교적 수양을 향한다.

[사례 Ⅴ-18] 아웅툰 인터뷰: 2016년 11월, 미얀마.

> 한국에도 어디에도 미련은 없어요. 사실 미얀마에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미국은 더 가기 싫어요. 하지만, 미국에 제 할 일이 있어요. 딸에게 미얀마와 불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미얀마로 돌아가 명상에 들어갈 거예요.

아웅툰 씨는 2003년에 한국에 이주노동을 위해 입국하였다. 그리고 2007년 사프론 혁명이 일어났다. 미얀마의 민중, 승려와 군부의 충돌이 일어나던 당시, 한국에서도 버마 민주화 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군부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와 시위가 이루어졌다. 아웅툰 씨는 당시 시위에 참여하면서 NLD에 가입하게 되었다. 양곤대학 시절에도 정치 활동을 했었던 만큼 그의 이러한 행보는 일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망명이 장기화되면서, 아웅툰 씨는 NLD의 회원들이 그러했듯 정치적 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거나, 혹은 버마행동 한국의 회원들처럼 이주노동자로 한국 사회에 적

응하기보다는, 불교 신자로서 불교의 가르침에 더욱 집중하였다. NLD에서 불교의 명상에 관한 강의를 하고, 한국을 방문한 미얀마 승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는 또 다른 귀환을 구성한다. 귀의로서의 귀환이 그것이다.

한국 체류 중 미얀마에 남아있던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현재 그의 두 자녀는 각각 한국과 미국에 이주하여 미얀마에 남은 가족은 없다시피 하다. 그 역시 가족이 없는 미얀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했다. 도리어 종교적인 신념과 열심을 가지고 수양과 귀의를 하는 데 집중해왔다. 다만 그럼에도 귀환할 장소로서 미얀마를 계획하는 이유는, 미얀마 불교에서 가르친 명상을 이어가며 승려로서 남은 생애를 살기 위함이다.

귀의로서의 귀환을 꿈꾸는 그가 최근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아직 남은 사명을 한국의 NLD나 본국의 사회 재건이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서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자녀는 어머니를 여의고 미국으로 건너가 이제는 영주권자가 되어, 그를 가족으로 초청하였다. 아웅툰 씨는 미국 사회에 대한 기대도 없고 실상 어디에 대해서도 큰 기대가 없지만, 미얀마를 떠난 딸에게 모국에 대해,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길어야 2년”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은 곧 미얀마로 귀환하여 불교에 귀의하며 남은 생을 보낼 것을 역설하였다. 미얀마로 귀국할지라도, 그의 귀환은 불교에의 귀의로서 마무리될 것이다.

앞서 귀환을 수행하거나, 한국 체류를 연장한 사례에서 주요하게 나타난 요소는 귀향(homecoming)과 집 만들기(home-making)의 과정이었다. 귀환 난민은 모국의 가족 때문에 귀환을 결정하고, 귀환 이후에 결혼을 통해 집을 만들어갔다. 한국에 남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집을 만들며 그곳에 뿌리를 내려왔다. 그렇다면 아웅툰 씨에게 집은 어디인가? 그는 “모든 곳이 나의 집”이라고 대답했다. 그의 경우에는 가족을 이루었던 이들이 죽었거나, 모두 미얀마를 떠나 뿔뿔이 살고 있다. 따라서 모든 곳이 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그의 말은 반대로 나의 집 없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때문에 ‘귀의’는 그에게 진정한 의미의 돌아갈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웅툰 씨의 제3국 이주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

서 지적하였다시피 한국에서의 난민 지위는 불안정하고 반영구적이다. 3년마다 거주 비자(F-2)를 갱신하여야 거주 자격이 연장되고, 결정적으로 난민 지위로 본국을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서 Ⅳ장에서 한국에서의 정치적 난민이 직면한 경계적 상태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하지만 그의 딸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한 것과 같이, 가족 초청으로 건너간 그도 미국에서 거주를 연장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불안정한 체류 지위를 극복함과 동시에, 한국과 미얀마를 방문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 경우 진민 씨의 귀화와 다른 방식으로 경계적 상태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에서 인정받은 난민 지위, 귀환 후 미얀마 국적의 회복, 혹은 제3국으로서 미국 국적의 획득. 귀의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의 선택지 앞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를 일이다. 제3국으로 최근 이주한 상황에서 아직 그 결정을 점칠 수는 없겠지만, 제3국 이주를 통해 그가 "유연한 시민권(flexible citizenship)"(Ong 1993)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점에서 아웅툰 씨는 이미 그가 바라던 "글로벌 시티즌"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아웅툰 씨의 이주에서 지적할 점은, 그가 한국에서 난민 지위로 살아왔지만, 난민 지위로 미국에 이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이 연구의 처음에 지적한 바와 같이, 난민이란 한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고정적이고 결정화된 라벨이 아님을 다시 상기시킨다.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난민의 여행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이 이주는 이미 영주권자인 딸의 '가족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게다가 그가 미국 재이주를 정착보다는 '방문'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착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아웅툰 씨의 미국행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귀환도, 비호국 정착도, 재정착도 아니다.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이어지는 그의 여정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지, 이어지는 걸음에 대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Ⅵ.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한국으로 이주한 미얀마 출신 정치적 난민들의 여정을 다루었다. 이들이 버마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정치적 난민이 되는 과정과 정치적 난민으로서의 한국살이를 탐색하고, 최근 몇 년간 미얀마의 변화에 따라 마주하게 된 귀환의 딜레마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귀환을 감행할 경우 그곳에서 다시 집을 만들어가는 귀환 난민의 실천을 관찰하며, 한국에서 거주하는 이들에게서 장기적인 망명 생활이 보이는 특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귀환과 망명 사이의 실천에도 주목하였다.

한국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수행해온 정치적 난민은 대부분 1990년대에 산업연수생 혹은 관광객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미얀마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망명자를 중심으로 해외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던 시기에, 이들 또한 한국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통해 알려졌다. 한국에서의 버마 민주화 운동은 NLD-LA 한국 지부와 버마행동 한국이라는 두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위와 로비 활동, 송금 등을 통해 미얀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한국 사회와 한국에 체류하는 미얀마인들에게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을 알려왔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부분 미등록 상태였던 운동가들은 불안한 체류 지위로 인한 송환과 박해의 위험을 피하고자 난민 지위를 신청하였다. NLD-LA 한국 지부에서 단체로 난민 신청을 했던 2000년 당시 한국에는 난민협약 가입에도 불구하고, 난민 신청자는 있어도 난민 인정자는 없었다. 난민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던 시절이었다. 때문에 버마 민주화 운동가의 활동은 미얀마를 알림과 동시에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난민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NLD-LA 한국 지부의 초기 멤버들을 시작으로 버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주민들은 오랜 기간의 심사와 절차 끝에 한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난민이기보다 민주화 운동가로 자신을 구성하였던 이들에게 '우리가 난민인가'하는 질문은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난민에 대한 이론적 이해에서 검토한바, 난민에 대한 시선은 본질화된 약자에서 의도화된 존재로서 보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이 연구 또한 정치적

난민을 대상화된 약자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를 수행하는 의도화된 존재로 보고 이들의 여정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점에서 이들은 대부분이 체재 중 난민이라는 특징, 불안한 체류 지위를 배경으로 자동으로 난민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난민임을 자각하고 그 지위를 활용하고자 하여 난민이 된 여정으로 초기의 이주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난민성에 있어 정작 버마 민주화 운동가들이 본질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난민은 "아프리카의 굶는 사람들"로 대표되는 수동적이고 약한 이미지였고, 어엿한 민주화 운동가로서 약하게 보이기를 거부해왔다. 본국 송환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운동하기 위해 난민 지위는 필요했지만, 난민성에 대한 본질화된 평가는 버마 민주화 운동가의 정체성과 꾸준히 충돌했다. 때문에 이들은 난민이기보다 민주화 운동가이고자 했고, 난민이라면 그중에서도 위계가 높다고 간주하는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또한 NLD-LA 한국 지부와 버마행동 한국은 함께 버마 민주화를 외치는 정치적 난민이지만, 구체적인 지향의 차이에 따라 다른 활동 양상을 보였다. NLD-LA 한국 지부는 미얀마의 정치적 변화에 집중하며 주한미얀마대사관과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한국 사회에 미얀마의 상황을 알리는 데 힘을 쏟는 디아스포라 정치를 펼쳤다면, 버마행동 한국은 지금 이곳에 있는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의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본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주민 정치에 집중했다. 이러한 지향의 차이는 난민성의 차이로 이어졌다. 이들은 서로 구별하고 경계하며 자신의 난민성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구성해왔다. 이 연구에서는 "그냥 난민", "정치적 난민", "진짜 난민", "가짜 난민"을 둘러싼 이들의 난민성 구성을 의도화된 존재로서 난민이 수행하는 적극적인 정치로써 평가한다.

이들은 법적 지위로서의 난민이기에 앞서 운동가로서 초국적으로 실천된 버마 민주화 운동을 수행하였다. 이들이 참여한 버마 민주화 운동은 비단 한국에서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다. 1990년대 들어 더욱 열악해진 미얀마 국내의 상황을 피한 망명 활동가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펼쳐왔다. 때문에 NLD-LA 한국 지부와 버마행동 한국의 구성원이 수

행한 버마 민주화 운동은 미얀마와 한국 사회를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졌던 초국적 정치의 연대이자 실천이었다. 운동은 한국 시민사회와의 연대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펼쳐진 버마 해방 운동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민주화 운동이 목표하였던바, 즉 이주국의 대(對) 미얀마 경제 제재 및 무역 중지와 같은 목표의 실현에서는 결과가 상이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는 정부 주도의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졌으나, 한국의 경우 그와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며, 다만 대중을 대상으로 미얀마와 버마 민주화 운동에 대해 알리며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다는 점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살필 수 있다.

미얀마 이주민들은 버마 민주화 운동가와 정치적 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운동에 참여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망명 생활은 장기화되었다. 그리고 연장된 망명으로 인해 모국과 귀향 사이, 혹은 출신국과 이주국 "사이에 낀"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지닌 경계적 상태는 지속될 뿐 아니라, 다음 세대로 대물림 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의 사례에서는 2010년대부터 시작된 미얀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로 잠정적 귀환, 혹은 방문을 공식적으로 감행할 수 없는 정책적 환경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난민이 가진 경계적 상태는 더욱 강화되어 온 것이다.

다만 장기화된 망명 생활에서 경험되는 경계적 상태(a state of liminality)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치적 난민은 경계성을 타개하고 삶을 세워가기 위한 실천으로서 노동에 종사하였으며 또한 교육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를 통해 정치적 난민은 자신이 성장과 발전의 서사에 있다고 평가하며, 망명 생활을 전이의 단계로 평가하였다. 또한 연장되고 강화되는 경계적 상태는 버마 민주화 운동에 연료로서 작용했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국 귀환의 가능성과 난민의 선택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0년대에 들어 미얀마에 일련의 정치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정치적 난민에게 본국 귀환의 가능성이 열렸다. 민주화가 된 조국에 돌아간다는 것이 그들의 기치였으나, 장기화된 이주 생활로 인해 본국으로의 귀환과 정주 등의 다양한 사례가 관찰된다.

이 연구에서는 귀환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한국에서의 버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 등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과 함께 가족 재결합의 요인을 확인하였다. 또한 귀환을 결정한 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귀환을 감행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반면 귀환을 보류하거나 한국에 머무르기로 결정한 사례와 귀환과 망명 사이의 모호한 이주의 유형도 함께 다루었다. 귀환을 보류하는 요인으로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명 정치의 사명이 있다고 평가하는 NLD의 상황 판단이 있으며, 이외에도 귀환 방식에 따른 갈등과 오랜 정주의 영향력, 마지막으로 질병과 사망으로 인해 귀환할 수 없게 된 사례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귀환과 망명 사이의 실천에서는 귀환과 정주의 가능성을, 나아가 초이주자의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살핀 한국의 버마 민주화 운동가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난민의 귀환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당연시하고 권장하는 시각과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정책적 환경과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다는 사실이다. 고국으로의 최종 귀환 이전에 확인 방문(go-and-see visit), 잠정적 귀환(provisional return)과 같은 귀환의 전략을 사용하기 어려운 미얀마-한국의 상황은 다른 국가에서 귀환한 난민과의 비교에서 확인하였듯이 매우 특수하다. 때문에 연구자는 귀환과 정주를 이분법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연구(Omata 2013)에 동의하며, 귀환과 정주의 사이 사례가 존재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상황에서는 귀환과 정주의 선택이 보다 이분화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공식적인 귀환을 제외한다면 정치적 난민은 귀환을 단번에, 또한 비공식적으로 감행하거나, 혹은 한국에 여전히 머물러야 한다.

또한 미얀마 출신 정치적 난민의 사례를 통해 이들이 한국 사회에 가지는 위치성과 함의를 탐색해볼 수 있다. 아감벤(2009[1996])은 난민이 “국민국가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위기에 빠뜨리는 동시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범주상의 혁신을 위한 터를 닦아주는 한계 개념”(ibid.: 33)이라 했다. 국민국가 체계에서 예외상태는 한계 개념을 정의하고(아감벤 2009[2003]: 19), 거꾸로 한계 개념으로서의 난민은 예외상태를 드러냄으로써 정치적 범주상의 혁신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실상 미얀마 출신의 정치적 난민은 한계 개념으로 한국 사회에서 변화를 만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2년의 난민협약 가입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국 사회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난민’이

라는 이름의 이방인이었고, 초기의 이주노동자이기도 했다. 최근 활발한 다문화 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들은 한국의 난민 제도, 이주노동자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의 자리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 점에서 이들은 사회의 저변을 확장해온 한계 개념이자, 환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지였다. 더구나 망명의 시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단지 이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뿐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계 개념으로서 이들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 미얀마로 돌아간 귀환난민이 귀국 이후 새로운 집과 생활의 문제를 마주하는 것과 같이, 한국에서 망명을 이어가는 이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이는, 난민의 생애사가 제기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이다. 최근 제기되는 질문은 난민의 자녀 문제와 운동가의 정체성 문제이다.

첫 번째로 난민의 자녀가 마주하는 한국 생활의 질문이 있다.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적응해간 난민의 자녀, 그중에서도 한국에서 출생하여 본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무국적자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녀의 문제는 실은 미얀마 난민뿐 아니라 대부분의 난민이 경험하고 있다(김현미 2015). 이들 난민의 자녀는 미얀마인 부모에게 태어났으나, 태어난 곳은 한국 땅이며 제1 언어 역시 한국어이다. 그러나 혈통주의를 취한 한국에도, 직접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미얀마에도 신고하지 못해 무국적자 신분이며, 부모의 난민 지위를 따라 한국에 체류 자격을 가질 뿐이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처럼' 자라났지만, 신분이 없기에 의료권과 각종 행정에서 겪는 구체적인 배제의 경험은 미얀마 출신의 1세대 난민과는 또 다른 어려움을 낳는다. 이 연구의 Ⅳ장에서 이들의 경험을 난민 당사자가 가진 경계적 상태의 대물림이자, 주변성의 경험으로 분석하였다. 한국 사회는 난민 아동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이는 최근 몇 년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논의와는 또 다른 결을 지닌다.

두 번째 질문은 운동가 정체성의 문제이다. 전술한바, 이들은 한국 사회에 남아있지만 통합되지 않고 '곧 돌아갈 민주화 운동가'로서 20여 년을 살아왔다. 그리고 Ⅴ장에서 확인한바, 미얀마로 귀환하거나 한국 체류를 연장하

는 경우도 있으나, 귀환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난민도 있다. 귀환 후 한국에서의 경험과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도 앞서 살펴보았지만, 건강과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귀환이 보류된 이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그런 이들에게 있어 민주화가 진행되는 오늘날은 그가 그토록 꿈꾸며 외치던 미래이지만, 동시에 한 시대의 종언을 뜻한다. 더는 민주화의 구호가 과거만큼의 설득력과 긴급성을 가질 수 없는 때에 이르러, 정치적인 지향이 강할수록 '나는 운동가인가, 그런데 왜 나는 돌아가지 않는가'의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의 논의를 통해 귀환도 새로운 이주이며, 이주국에서 집을 만드는 것 역시 보편적인 실천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버마의 집을 떠나 경계의 삶을 살아온 난민에게 한국은 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대체 집일 수 없다. 민주화는 진전되나, 20여 년이 흘러 어느덧 중년의 노쇠한 몸으로는 앞서 귀환한 이들처럼 귀환을 쉽게 결정할 수 없고, 더구나 귀환한다 한들 그간의 해외 민주화 운동은 무엇 하나 그에게 보장해주지 않는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산이 되겠지만, 결국 귀환 난민의 사례처럼 새로이 집을 꾸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 속에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삶이란 어떤 지평을 가지는가.

미얀마의 정치적 난민은 한국 사회가 경험한 1세대 난민이다. 이들이 한국에서 20여 년간 살아온 시간은 개인사이지만, 한국 사회가 도전에 부딪히고 이방인을 경험하며 정책과 태도를 수정해온 시간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역사이기도 하다. 또한 살펴본바, 귀환을 결정하고 감행하여도 난민의 난민 주기가 종료되거나 이들이 한국과 맺고 있는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의 관계와 경험을 초국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환 난민은 한국 사회와 여전히 연결되어 살아간다. 본 논문이 주목한 이주, 난민의 삶, 그리고 탈영토화된 초국적 정치의 실천은 역설적으로 국가와 국경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동시에 연구자는 더불어 운동하고 함께 살아온 자리, 그 시간으로 넓어진 서로의 외연,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되는 관계에 주목하고자 했다. 버마, 미얀마, 혹은 한국, 혹은 무국적으로 가르는 것을 넘어서 더불어 연결된 삶의 자리가 결국 우리의 여정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논문

권숙인

2008 “디아스포라 재일한인의 ‘귀환’: 한국사회에서의 경험과 정체성,” 『국제지역연구』 17(4): 33-60.

김선임

2012a “이주노동자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다문화 실태와 불교적 대안: 미얀마, 방글라데시,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10: 49-85.

2012b “이주노동자공동체 형성에서 민족 정체성과 종교 정체성의 경합: 미얀마, 방글라데시,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종철

2015 “난민의 개념 중 박해가능성의 제외한 부분, 판례의 경향,” 『난민법률 지원교육』,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pp. 1-30.

김현미

2015 “난민 아동의 집은 어디인가?: 우리나라 난민 아동의 생활세계,” 『복지동향』 204: 27-32.

노영순

2013 “바다의 디아스포라, 보트피플: 한국에 들어온 2차 베트남난민(1997~1993)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7(2): 75-108.

박상희

2010 “왜 한국에는 난민이 없나?: 시민권의 계층화와 재한난민의 복합적 배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은홍

2016 “미얀마, ‘질서 있는 이행’ 모델: ‘체제 내 변화’에서 ‘체제 변화’로의 진화,” 『동남아시아연구』 26(1): 183-223.

버틸 린트너

2007 『아웅산수찌와 버마 군부: 45년 자유 투쟁의 역사』, 이희영 옮

김, 파주: 아시아네트워크.
손민정
2007 “국제연대 활동가의 정체성과 운동의 재생산: 버마민주화운동의 사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양영미
2014 "마웅저씨의 한국에서의 20년”, 『아시아저널』 8: 221-263.
오경석
2011 “재한줌머인연대(Jumma People's Network in Korea)와 미디어의 재현,” 『다문화사회연구』 4(2): 71-101.
이상국
2016 “비슷하되 같지 않은 길- 재한 미얀마 카렌족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동남아시아연구』 26(2): 101-142.
이태정
2011 “한국 이주노동자의 이주과정과 변형 아이덴티티,”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준영
2016 “2015년 미얀마 총선과 정치변동: 선거의 민주화와 불확실한 미래,” 『동남아시아연구』 26(1): 225-260.
재단법인 동천
2013 “국내 난민신청 이슈에 기초한 주요 수용국의 난민 판례 연구”, 법무부 정책연구.
조르조 아감벤
2009[1996] 『목적 없는 수단: 정치에 관한 11개의 노트』 김상운・양창렬 옮김, 서울: 난장.
2009[2003] 『예외상태』 김항 옮김, 서울: 새물결.
조현옥
2005 “해외의 한국 민주화운동: 본국과의 상호관계 및 정체성 찾기,” 『경제와사회』 66: 72-94.
채수홍
2007 “귀환 베트남이주노동자의 삶과 동아시아 인적교류,” 『비교문화연구』 13(2): 5-39.

한건수
2014 “한국 에티오피아 이주민의 이주 동학: 경향, 유형 및 난민 연계,” 『사회과학연구』 38(2): 182-209.
Al-Ali, Nadje and Khalid Koser(eds.)
2002 *New Approaches to Migration?: Transnational Communities and the Transformation of Hom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Al-Rasheed, Madawi
1994 “The Myth of Return: Iraqi Arab and Assyrian Refugees in London,” *Journal of Refugee Studies* 7(2/3): 199-219.
Anderson, Benedict
1998 *The Spectre of Comparisons: Nationalism, Southeast Asia and the World*, New York: Verso.
Banki, Susan
2006a “Burmese Refugees in Tokyo,” *Journal of Refugee Studies* 19(3): 328-344.
2006b “The Triad of Transnationalism, Legal Recognition, and Local Community: Shaping Political Space for the Burmese Refugees in Japan,” *Refuge* 23(2): 36-46.
Black, Richard and Khalid Koser(eds.)
1999 *The End of the Refugee Cycle?: Refugee Repatriation and Reconstruction*, New York and Oxford: Berghahn Books.
Braakman, Marije and Angela Schlenkhoff
2007 “Between Two Worlds: Feelings of Belonging While in Exile and the Question of Return,” *ASIEN* 104: 9-22.
Brees, Inge
2009 “Burmese Refugee Transnationalism: What is the Effect?,”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2: 23-46.
Čapo, Jasna
2015 ““Durable Solutions,” Transnationalism, and Homemaking Among Croatian and Bosnian Former Refugees,” *Refuge*

31(1): 19-29.
Constable, Nicole
1999 "At Home but Not at Home: Filipina Narratives of Ambivalent Returns," *Cultural Anthropology* 14(2): 203-228.
Dale, John G.
2011 *Free Burma: Transnational Legal Action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Minneapolis and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Den Boer, Roselinde
2015 "Liminal Space in Protraceted Exile: The Meaning of Place in Congolese Refugees' Narratives of Home and Belonging in Kampala," *Journal of Refugee Studies* 28(4): 486-504.
Dittmer, Lowell
2010 "Burma vs. Myanmar: What's in a Name?" in Lowell Dittmer, ed., *Burma or Myanmar? The Struggle for National Identity*, Singapore: World Scientific, pp. 1-20.
Dobson, Stephen
2004 *Cultures of Exile and the Experience of Refugeeness*, Bern: Peter Lang AG.
Doná, Giorgia
2015 "Making Homes in Limbo: Embodied Virtual "Homes" in Prolonged Conditions of Displacement," *Refuge* 31(1): 67-73.
Egreteau, Renaud
2012 "Burma in Diaspora: A Preliminary Research Note on the Politics of Burmese Diasporic Communities in Asia,"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31(2): 115-147.
Espiritu, Yến Lê
2014 *Body Counts: The Vietnam War and Militarized Refugees*,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aist, Thomas
2000 "Transnationalization in International 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Citizenship and Culture," *Ethnic and Racial Studies* 23(2): 189-222.

Glick Schiller, Nina

1999 "Transmigrants and Nation-States: Something Old and Something New in the US Immigrant Experience," in C. Hirschman, P. Kasinitz, and J. DeWind, eds.,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American Experienc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pp. 94-116.

Glick Schiller, Nina, Linda Basch, and Cristina Szanton Blanc

1995 "From Immigrant to Transmigrant: Theorizing Transnational Migration," *Anthropological Quarterly* 68(1): 48-63.

Glick Schiller, Nina and Georges Fouron

2001 *Georges Woke Up Laughing: Long-distance Nationalism and the Search for Home*, Durham/London: Duke University Press.

Goldring, Luin

2003 "Re-thinking Remittances: Social and Poli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Remittances," CERLAC Working Paper Series, Toronto: York University.

Hammond, Laura

1999 "Examining the Discourse of Repatriation: Towards a More Proactive Theory of Return Migration," in Richard Black and Khalid Koser, eds., *The End of the Refugee Cycle?: Refugee Repatriation and Reconstruction*, New York and Oxford: Berghahn Books, pp. 227-243.

Harrell-Bond, Barbara and Eftihia Voutira

1992 "Anthropology and the Study of Refugees," *Anthropology Today* 8(4): 6-10.

Israel, Mark

2000 "South African War Resisters and the Ideologies of Return from Exile," *Journal of Refugee Studies* 13(1): 26-42.

Kim, Hyunmee
2012 "'Life on Probation': Ambiguity in the Lives of Burmese Refugees in South Korea,"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21: 217-238.
Klinthäll, Martin
2007 "Refugee Return Migration: Return Migration from Sweden to Chile, Iran and Poland 1973-1996," *Journal of Refugee Studies* 20(4): 579-598.
Levitt, Peggy
1998 "Social Remittances: Migration Driven Local-level Forms of Cultural Diffus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2(4): 926-948.
Malkki, Liisa H.
1995a "Refugees and Exile: From "Refugee Studies" to the National Order of Thing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4: 495-523.
1995b *Purity and Exile: Purity and Exile: Violence, Memory, and National Cosmology among Hutu Refugees in Tanzania*,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uggeridge, Helen and Giorgia Doná
2006 "Back Home? Refugees' Experiences of Their First Visit back to their Country of Origin," *Journal of Refugee Studies 19(4)*: 415-432.
Nguyen-Akbar, Mytoan
2014 "The Tensions of Diasporic 'Return' Migration: How Class and Money Create Distance in the Vietnamese Transnational Family,"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43(2): 176-201.
Omata, Naohiko
2013 "The Complexity of Refugees' Return Decision-Making in a Protracted Exile: Beyond the Home-Coming Model and Durable Solution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9(8): 1281-1297.

Ong, Aihwa

1993 "On the Edge of Empires: Flexible Citizenship Among Chinese in Diaspora," *Positions* 1(3): 745-778.

Østergaard-Nielsen, Eva Kristine

2001 "Transnational Political Practices and the Receiving State: Turks and Kurds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Global Network* 1(3): 261-281.

2003 "The Politics of Migrants' Transnational Political Practice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3): 760-786.

Long, Lynellyn D. and Ellen Oxfeld(eds.)

2004 *Coming Home?: Refugees, Migrants, and Those Who Stayed Behind*,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iper, Nicola

2009 "Temporary Migration and Political Remittances: The Role of Organisational Networks in the Transnationalisation of Human Rights," *Europea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8(2): 215-243.

Portes, Alejandro, Luis E. Guarnizo, and Patricia Landolt

1999 "The Study of Transnationalism: Pitfalls and Promise of an Emergent Research Field," *Ethnic and Racial Studies* 22(2): 217-237.

Shah, Prakash

1999 "Taking the 'Political' Out of Asylum: The Legal Containment of Refugees' Political Activism," in F. Nicholson and P. Twomey, eds., *Refugee Rights and Realities: Evolving International Concepts and Regim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19-135.

Smith, Robert Courtney

2006 *Mexican New York: Transnational Lives of New Immigran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mith, Michael Peter and Luis Eduardo Guarnizo
1998 *Transnationalism from Below*,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Suh, Jiwon
2015 "Burmese Political Activists and Human Rights in Korea," *Korea Observer* 46(4): 751-782.
Taylor, Robert H.
2009 *The State in Myanmar,*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Tsuda, Takeyuki
2000 "Acting Brazilian in Japan: Ethnic Resistance Among Return Migrants," *Ethnology* 39(1): 55-71.
Tuck, Eve
2009 "Suspending Damage: A Letter to Communiti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79(3): 409-427.
Tabar, Paul
2014 "'Political Remittances': The Case of Lebanese Expatriates Voting in National Elections,"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35(4): 42-460.
Turner, Victor W.
1967 *The Forest of Symbols: Aspects of Ndembu Ritual,*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69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London: Penguin Books.
UNHCR
2014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HCR/1P/4/ENG/REV.3
2016 "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15," http://www.unhcr.org/statistics/unhcrstats/576408cd7/unhcr-global-trends-2015.html
Van Gennep, Arnold
1960[1909] *The Rites of Pass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ise, Amanda
2004 "Nation, Transnation, Diaspora: Locating East Timorese Long-distance Nationalism," *Sojourn* 19(2): 151-180.
Williams, D. C.
2012 "Changing Burma From Without: Political Activism Among the Burmese Diaspora,"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19(1): 121-142.
Zetter, Roger
1991 "Labelling Refugees: Forming and Transforming a Bureaucratic Identity," *Journal of Refugee Studies* 4(1): 39-62.
2007 "More Labels, Fewer Refugees: Remaking the Refugee Label in an Era of Globalization," *Journal of Refugee Studies* 20(2): 172-192.

신문 기사

경향신문, "버마 민주화-한국 이주민 인권운동 지속할터", 2011년 3월 3일.
대자보, "국회, 긴급 결의안 발의로 버마 민주화 촉구", 2007년 10월 5일.
_____, "불법가택연급 아웅산 수지여사를 즉각 석방하라", 2009년 6월 19일.
동아일보, "미얀마 반체제인사 20명,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난민신청", 2000년 5월 17일.
_____, "한국행 난민 제대로 맞자", 2004년 12월 11일.
부천타임즈, "이란주가 만난 사람: 혁명을 꿈꾸던 청년, 미얀마 난민 '르윈'," 2015년 6월 29일.
시민의신문, "버마·팔레스타인 박해 잊지 말아요", 2005년 9월 6일.
오마이뉴스, "한국의 홍세화 '샤린'을 누가 구할 것인가", 2000년 4월 15일.
_____, ""김대중을 살려라" 이제 그 빚을 갚을 때", 2003년 6월 8일.
_____(내툰나잉 작성), "버마 8888 민주항쟁은 계속된다: 한국이 버마 민주화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며", 2011년 8월 7일.
연합뉴스, "미얀마인 20명 내주부터 난민인정 심사", 2000년 5월 17일.

_____, "아웅산 수치 가택연금 해제' 촉구", 2008년 10월 24일.
_____, "'미얀마 난민' 민주화운동 활동가 내툰나잉씨 사망", 2015년 9월 5일.
프레시안, "우리는 '80년 광주' 기억하는데 한국은 다 잊었나", 2005년 12월 13일.
한겨레, "'버마 민주화 지원 모임' 결성", 2006년 6월 19일.
_____, "'버마행동' 회원 8명 첫 난민인정 판결", 2010년 11월 4일.
_____, ""한국 민주화운동 주역들 만나며 용기 얻어" 난민 마웅저, 19년에 고국 버마로", 2013년 11월 19일.
한겨레21, "특집: 샤린, 한국의 인권외교를 시험하다", 2000년 4월 20일(제304호).
_____, "부자에게 문지방 난민에겐 철옹성", 2013년 10월 17일자(제982호).
_____, "21년을 기다려 한 달을 남기고…", 2015년 9월 16일(제1079호).
AsiaNews, "Burmese Dissident: Amnesty and Protection Before Exiles Return to Myanmar," 2012년 5월 16일.
The Irrawaddy, "Exiled Dissidents Return to Push Reform," 2012년 9월 6일.
_____, "Refugees Asked to Visit Repatriation Center For Interviews," 2017년 5월 15일.
New York Times, "Myanmar to Free Political Prisoners, Daw Aung San Suu Kyi Says," 2016년 4월 7일.
_____, "Myanmar Releases Dozens of Student Activists from Jail," 2016년 4월 8일.
Radio Free Asia, "Myanmar Government to Let Blacklisted Democracy Activists Return From Exile," 2016년 5월 26일.
South China Morning Post, "What's in a name? Not much, According to Aung San Suu Kyi, Who Tells Diplomats They Can Use Myanmar or Burma," 2016년 4월 23일.

법률 및 정책 관련 자료

〈난민법〉 법률 제11298호
서울행정법원 2006.2.3. 선고 2005구합209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1.02. 선고 2009누26199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두6526 판결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09. 6
1951년 난민 협약, www.unhcr.or.kr/html/001/001001003003.html

성명서 및 인터넷 자료

프리버마 캠페인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freeburma
프리버마 캠페인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freeburma.cafe

건강한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외 13개 단체, “버마인 샤린에 대한 강제송환을 반대한다”, 2000년 4월 4일, http://minbyun.jinbo.net/minbyun/zbxe/?document_srl=4135&mid=data_01&listStyle=&cpage=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외 16개 단체, “버마행동 활동가 난민 불허 이의신청 심사에 대한 한국인권시민단체의 공동성명”, 2008년 9월 26일, jbbuddhism.org/bbs/board.php?bo_table=01_4&wr_id=148
공익법센터 어필, “국적법 개정이 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2016년 8월 18일, http://www.apil.or.kr/1960
국제민주연대 외 11개 단체, “[공동성명] 법무부의 버마 민주화운동가 난민 신청 불허 규탄”, 2005년 4월 21일, 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591714
국제민주연대 외 10개 단체, “공동논평: 버마난민관련 법원의 1심판결을 환영하며”, 2006년 2월 3일, action.or.kr/84361
난민인권센터, “국내 난민 현황 (2016.12.31.기준),” 2017년 4월 11일 자료, nancen.org/1598
대한변호사협회, “2008 미얀마 헌법에 대한 대한변협 의견서”, 2010년 4월 30일, www.koreanbar.or.kr/pages/news/view.asp?teamcode=&category=&page=23&seq=818&types=1&searchtype=&searchstr=
버마 국민운동 촉진위원회 외 119개 단체, “버마민중 학살중단과 군부퇴진 촉구 기자회견”, 2007년 10월 2일, 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592777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미얀마군부, 민주세력 탄압중지해야”, 2003년 6월 5일, 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591465

_____, “버마 민주화 촉구 국회의원 성명서”, 2004년 8월 30일, 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591563

_____, “[캠페인] 버마와 우리 (2005~2007 진행)”, 2005년 4월 12일, 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363465

_____, “버마 난민 인정 심사 과정의 문제점과 원고 9인의 약력”, 2006년 2월 6일 게시물, 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55 &document_srl=591952&listStyle=list

UNHCR, “First Myanmar Refugee Returns from Thailand Under Way”, 2016년 10월 25일 자료, www.unhcr.org/news/briefing/2016/10/580f1c0d4/first-myanmar-refugee-returns-thailand-under-way.html

W4refugee, “난민인정절차개관”, 2016년 1월 29일 게시물, www.w4refugee.org/board/bbs/board.php?bo_table=2_manual&wr_id=14&page=6

Abstract

Living up as Transnational Political Refugees:

Exile and Return of Burmese Pro-democracy Activists in Korea

Sukyoung Ryu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pays attention to the journey of political refugees who participated in Burmese pro-democracy movement in Korea. This research is based on an ethnographic study of the following groups of Burmese political refugees who reside in Korea: those who belong to or used to a part of NLD-LA(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Liberated Area) Korea branch or Burma Action Korea, and those who went back to Myanmar.

Political refugees from Myanmar migrated to Korea in the 1990s and have been protesting for the Burma's pro-democracy movement in Korea. Due to the recent political changes in Myanmar, these activists seem to be facing the dilemma of whether or not to return to their country. Thus, this research tries to follow their journey in three aspects. First, this study explores how Burmese migrant workers have become refugees in Korea.

Second, it examines their life as Burma's pro-democracy activists and refugees amidst 20 years of prolonged exile in Korea. Lastly, this study also explores the political refugees' decision to return or not to return back to Myanmar after the recent changes in the country, and examines their 'home-making' in Korea or Myanmar.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how migrants from Myanmar became refugees. Most of them have entered Korea in the 1990s and have lived as migrant workers. They began to create a small gathering for pro-democracy movement because of their worries about militant government in Myanmar, and this group organized the Korea branch of NLD-LA, a renowned pro-democracy organization. As members of NLD-LA Korea branch, the activists worked for the pro-democracy movement in Korea. But they faced an urgent crisis of deportation because of their undocumented status, which led them to apply for a refugee status in order to continue the pro-democracy movement and secure the status of sojourn in Korea.

However, in the process of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these migrants experienced confusion about interpreting their refugee-ness. Although they applied for refugee status based on their political opinion and the possible persecution, the Burmese migrants associated the term 'refugee' with a passive and weak image represented by "poor people in Africa". Thus, they wanted to be called pro-democracy activists rather than refugees, and if necessary, they wanted to be called "political refugees" who are thought to be in the highest level among refugees in their mind. Also, there has been a conflict between NLD-LA Korea branch and Burma Action Korea because of the discrepancies in aims and approaches about pro-democracy movement. Based on the difference of orientation, they have made a distinction and differentiated themselves from one another, and defined 'refugee-ness' enthusiastically in their own unique ways.

Political refugees from Myanmar have passionately participated in the Burma's pro-democracy movement as transnational political practice. With the exile activists who fled from worsening circumstances in Myanmar, there was a series of pro-democracy movements raised around the world. That's why the pro-democracy movement by NLD-LA Korea branch and Burma Action Korea was not limited to Korea only. Their movement was a practice of solidarity for transnational politics that was carried out in several countries at the same time. However, while they aimed for Korean government's economic sanction against Myanmar including suspension of trade and investment, the goals were never met. On the other hand, it was successful in a sense that their movement introduced Myanmar and Burma's pro-democracy movement to the Korean people and gained a social consensus for Burma's democracy in Korea.

This thesis also focuses on Burmese political refugees who have stayed in Korea much longer than they expected, and interprets their position of prolonged exile as "a state of liminality" between Myanmar and Korea. Their status of liminality is even handed down to their children. Unlike refugees in other countries, policy environment in Korea does not allow Burmese refugees visit their country officially in spite of recent changes in Myanmar since 2010. Such policy environment reinforces and worsens the state of liminality even more. Nevertheless, political refugees worked hard or pursued an education in order to break through such liminality and build up their life. Through such efforts, political refugees considered themselves to be in a narrative of growth and development, and regarded their life of exile as a stage of transition for re-incorporation. Also, their state of liminality was used to boost their pro-democracy movement more briskly and passionately.

Lastly, this study examines a choice and the practice of refugees with the visible possibility of the return to Myanmar. As a series of political

changes took place in Myanmar since 2010, political refugees now face a possibility of returning to their home country. Even though they all have fought for the democratization of Myanmar and dreamed of the day of returning to their democratized homeland, their decision on residence was different case by case after the prolonged stay in Korea.

For refugees who went back to Myanmar, the reason for return was mainly a political one such as their negative evaluation of Burma's pro-democracy movement in Korea; economic opportunity and reunification with family were some of the other reasons. Once they decided to return, the refugees set their own strategies for a safe and successful settlement at home in Myanmar. Also, while establishing a new life in Myanmar, they act as an agent of transnational practice with their asset from experience in Korea, rather than leaving their life in Korea behin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other cases where refugees decided to reside in Korea or postpone their return, or stay in an ambiguous status between exile and return. Some refugees hold their return because NLD-LA Korea branch still believes that they have a mission to achieve away from their homeland. Moreover, an argument over the way of return, old-established life in Korea, and diseases and death make these refugees difficult or impossible to return home. In a case of people who are in between exile and return, it was observed that they have a new possibility of becoming transmigrants or attaining flexible citizenship.

Political refugees from Myanmar are the first generation of refugees that the Korean society has never experienced. The past 20 years of their residence is not just a history of a person, but also a history of Korean society at the same time in a sense, because the 20 years has been the process of Korean society of finding and experiencing the refugees, and revising policies and attitudes toward them. In that respect, political

refugees from Myanmar have acted as "a borderline concept" to help Korean society expand the outermost sphere and become more inclusive, yet questioning the Korean society what it really means to live together. Subjects like migration, a life of a refugee, and transnational political practice that this study focuses on indicate the existence of nation-state and border paradoxically. Yet, this study tried to explore and understand the story of the refugees and the Korean society having fought together for democracy, having lived together which led to extension of understanding in each other, as well as having kept the relationship that continues regardless of place and nationality, because there are more important and fundamental things than categorizing the people by the place of origin, cultural affinity or immigration status. After all, it is that interconnected space called "life" is the journey we have to take together.

keywords : Myanmar, refugee, Burmese pro-democracy movement, transnational politics, exile, return

Student Number : 2015-20202